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3년도 시행계획

2023.5.



관계부처합동

과 제		소관	페이지
1-3-2-①	해외성매매 방지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외교부 여가부 경찰청	57
			60
			62
1-4-1-①	성매매·알선 정보 전달 매체 감시 강화	방통위 경찰청	63
			65
1-4-1-②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	66
			65
			68
1-4-2-①	1인 가구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경찰청	71
1-4-3-①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교육 강화	복지부	72
1-4-3-②	장애인거주시설 폭력예방 강화	복지부	74
1-4-3-③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	여가부	76
1-4-3-④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1-4-4-①	사업장 대상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점검	고용부	79
1-4-4-②	이주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81
			83
			86
			89
1-4-4-③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활동 확대	여가부	91
1-4-4-④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 폭력피해 점검	법무부	93
1-4-5-①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정보 접근성 확대	여가부	95
1-4-5-②	이주여성 폭력피해 신고 활성화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	97
			99
			101
1-4-5-③	이주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기반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가부	103
1-4-5-④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고용부	106
2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2-1-1-①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	경찰청	108
2-1-1-②	가정폭력 재범 방지 조치 강화	경찰청	111

과 제		소관	페이지
2-1-2-①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	경찰청	114
2-2-1-①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대검찰청 경찰청	118
			123
2-2-1-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활성화	법무부	125
2-2-1-③	2차 피해 방지 및 불법촬영 삭제·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청	132
2-2-1-④	신고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조력자 보호강화	여가부 고용부	133
			135
2-2-2-①	형사절차 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	137
2-2-3-①	형사절차 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	140
2-2-3-②	수사 과정에서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가부	141
2-2-4-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가부 경찰청	143
			145
2-2-5-①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법무부 대검찰청 국방부 고용부 국토부 경찰청 해경	147
			149
			151
			154
			156
			159
			161
2-3-1-①	재범억제를 위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법무부 경찰청	165
			168
2-3-1-②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 관리 강화	여가부	170
2-3-1-③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여가부	173
			176
2-3-2-①	성구매자 교육(존스쿨)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 운영 내실	법무부	179
3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3-1-1-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여가부	182
			185

과 제		소관	페이지
3-1-1-②	교육 분야 인식개선 추진	교육부 여가부	188
			192
3-1-1-③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교육부	194
3-1-1-④	초·중·고등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교육부	197
3-1-1-④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교육부	201
3-1-1-⑤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교육부	203
3-1-2-②	재발방지 조치 강화	교육부	206
3-1-3-②	문화·예술계 여성폭력 예방조치 내실화	문화체육관광부	209
3-1-3-③	문화·예술분야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212
3-1-3-④	문화·예술계 전담 상담센터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215
3-1-4-①	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보호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218
3-1-4-③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	여가부	221
3-2-1-①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여가부	223
3-2-1-②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이행력 제고	고용노동부	225
3-2-1-③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절차 내실화	고용노동부	228
3-2-1-④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등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여가부	232
			234
3-2-2-①	공공부문 사건 대응력 강화	여가부 인사처	237
			240
3-2-2-②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행안부 인사처 여가부	242
			244
			246
3-2-2-③	기관의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역량 강화	여가부	249
3-2-3-①	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국방부	251
3-2-3-②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국방부	254
3-2-3-③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및 수사 역량 강화		
3-2-3-④	징계 절차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국방부	257
3-3-1-①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	여가부	259

과 제		소관	페이지
3-3-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	261
3-3-1-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	265
3-3-1-③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여가부 경찰청	269
			272
3-3-1-④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여가부	275
3-3-1-⑤	성매매 관련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여가부	278
3-3-1-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및 지원 강화	여가부	20
3-3-2-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여가부 국토부	280
			283
3-3-2-②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및 피해 여성 지원 확대	여가부	285
3-4-1-①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적근거의 일원화	여가부	287
3-4-1-②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	여가부	288
3-4-1-③	중앙행정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소관부처 책무성 강화	여가부	290
3-4-1-④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여가부	292
3-4-1-⑤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여가부	294
3-4-1-⑥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 강화	여가부	296
3-4-1-⑦	'성 인권 교육' 전국 확대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키우는 문화 확산	여가부	298
3-4-1-⑧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여가부	301
3-4-2-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여가부	304
3-4-2-②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여가부	306
4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4-1-1-④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조항 통합 검토	법무부 여가부	308
			310
4-1-1-⑤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복지부	311
4-1-2-①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임시조치(접근금지 등)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법무부	314

과 제		소관	페이지
4-1-2-②	가정폭력 가해자 수사 시 엄정한 조치	대검찰청	316
4-1-2-⑥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성 분석 및 검토	법무부 여가부	319
			321
4-1-3-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톱킹처벌법 개정 추진]	법무부	322
4-1-3-②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사각지대 개선 방안 검토	법무부	324
4-1-4-③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	여가부	326
4-1-5-①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여가부	328
4-1-6-①	성매매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지속적 단속 추진	고용부 경찰청	330
			332
4-1-6-②	성구매자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 환경 조성	대검찰청	334
4-2-1-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여가부	337
4-2-2-①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여가부	340
4-2-3-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343
4-3-1-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여가부	346
4-3-2-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여가부	348
4-3-2-③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전담기구 마련	여가부	351
4-3-3-③	여성폭력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여가부	354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여가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통계청	356
			358
			360
			362
			363
4-3-4-②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여가부	366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다양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 제고

□ 그간의 추진실적

- 신학기·하계기간 등 시기별·대상별 집중 예방 강화 기간 운영
- 탐지기술 개발·도입, 적외선 탐지 및 IP카메라 탐지장비 현장 보급
- 탐지인력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고성능의 다양한 탐지 장비가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탐지장비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관련 IT업체와 협업, 장비기술 자문·정보 공유
- 불법촬영 신고에 대한 점검역량 향상을 위해 「맞춤형 장비활용법」 등 교육
-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업, △불법촬영 관련 조례 제·개정 △다중이용 시설·범죄 취약지역(공중화장실, 지하철, 공원 등) 순찰 강화 및 방범시설 설치 등 개선 △ 불법카메라 합동 점검 등 범죄 예방 환경 구축
- 불법촬영 범죄의 가·피해자 연소화 경향에 따라 범죄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범죄예방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적극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탐지장비 활용 교육(신규)				서관서 교육이수완료	교육 이수율 점검 (교육실적취합)

☐ 기대효과

- 불법촬영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력 향상 및 점검·예방 활동을 통해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범죄 억제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피의자 특성·수법, 발생장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 강구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송진영 경감	전화번호	02-3150-0938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 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 대응 요구
 - 텔레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단체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 성폭력 등 범행을 자행하는 불법 촬영물·아동성착취물 유통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

□ 그간의 추진실적

- '20. 3.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 대응 지시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관련 영리 목적 유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사범 원칙적 구속 등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기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사건처리기준 등 철저 준수, 엄정 대응 지시
- '20. 3. 전국 여성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일선 수사상황 점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 수익 환수 방안 등 논의
- '20. 3.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국적 수사지휘·지원 체계 구축
 - 전국 18개 및 수도권 차치지청에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설치, 기타 청은 전담검사 지정
- '20. 3. 성착취 영상물 관련 수사 참고자료 제공 등 일선 지원
 - 의율 죄명, 적용법조, 법률적 쟁점 등 법리검토 자료(형사부), 신종디지털 성 범죄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등 의율 검토, 형법상 범죄 단체 및 범죄집단 법리 검토 자료(반부패강력부) 등 일선 지원

- '20. 4.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엄정 대응 지시
 - 불법촬영·유포 사범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성착취 범죄에 집중 대응,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 지시
- '20. 5.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토론회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 개최
- '20. 10~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TF 운영
 -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제·개정 내역 반영 및 현행 성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 중 신설·개정할 내역 논의
- '21. 1. 전국 여성·아동범죄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에 관한 논의
- '21.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 알림 및 철저 준수 지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처리기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 및 개정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지시
- '21.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21. 7.~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 및 운영
 -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를 구성, 관련 수사매뉴얼 제·개정 및 관련 지침 개정 작업 진행
- '21. 8.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우수 피해자보호 사례 전파 및 피해자보호조치 적극 활용 요청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우수 사례 전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검찰 핫라인 구축 및 적극 활용 지시
- '21. 12.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책자 배포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을 대폭 수록하는 등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전국 청에 배포하여 적극 활용
- '22. 6. 성착취물 소지범 처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 엄단

○ '22. 8.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핫라인 협조 사항」 배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속한 피해자 연계 및 피해촬영물 제공 방법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제작한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핫라인 협조 요청 사항」을 일선 청에 배포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 업무에 적극 참고

○ '22. 9.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 '21. 2. 전면 개정하여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및 관련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 '22. 9. 검찰총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중 불법영상물 삭제 업무 등 피해자들에게 실효적으로 필요한 보호·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등 다각적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 2023년도 시행계획

○ 성착취 영상물 사범 등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연중)

- 전국 청의 여성·아동 범죄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디지털성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

○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연중)

- 수사과정에서 성착취물 삭제 관련 유관기관 연계하여 삭제 지원, 그 외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 철저

○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로 범행 동기 차단(연중)

- 비트코인 등 인터넷상 통화 대체수단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 수익 박탈, 동기 차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음란물 소지, 제작·배포 사범 기소율(%)	30.5%	34.3%	38.1%	34.3%	검찰통계시스템
○ 성과목표치 산식 : 처분 인원 대비 기소인원 비율					

* 23년 목표치는 '20~'22년 실적의 평균치로 산정

□ 기대효과

- 성착취 영상물 사범 등 여성·아동 대상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대검찰청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 과제개요

- 주요 유통 플랫폼에 대해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책임 수사관서 지정,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집중단속 실시
- △영리목적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촬영·제작·유통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영상물 등 증거수집 및 삭제·차단 우선 조치

□ 그간 추진실적

- '20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수사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총력 단속체제 가동
 - ※ '20. 3. 25. ~ 12. 31.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하여 총 2,807건·3,575명(구속 245명) 검거, 피해자 1,094명 대상 4,387회 보호·지원 조치
- '21년,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본부」 운영 후에도 사안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능동적 엄정단속 실시
 - * ㄱ 허위영상물 제작·유통 사범 집중단속('20. 12. 1. ~ '21. 4. 30.) : 총 85건 94명 검거(구속10명)
 - ㄴ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사범 집중단속('21. 3. 2 ~ 10. 31.) : 총 1,419건 1,597명 검거(구속 97명)
- '22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적극 시행, 전국 시·도 경찰청 중심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 ※ '22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22. 3. 1.~10. 31.) : 총 1,694명 검거(99명 구속)

□ 2023년도 시행계획

- (상시단속체계 유지) 집중단속 실시로 디지털 성범죄 공급·수요 요인 근절
- (위장수사 활성화) 시·도 경찰청 중심 위장수사 적극 실시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2년)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사이버성폭력 단속 검거율	78.9%	80.0%	KICS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오화섭 경감	전화번호	02-3150-1159
------	-----------------	-----	--------	------	--------------

□ 과제개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 ①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삭제지원, ②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③ 전문상담, 보호시설 입소 및 의료·무료 법률서비스 연계 지원

□ 그간의 추진실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특화된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운영(‘18.4월~)

- 상담, 삭제지원 등 맞춤형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연계*

* 지원실적(‘18.4.30.~’22.11.30.) : 총 716,508건 지원(상담 57,023건, 삭제지원 655,748건, 수사·법률지원 연계 3,327건, 의료지원 연계 410건)

- 불법촬영물 등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요청범위 확대(‘20.4월)

* ‘성폭력방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0.4.30.시행)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20.4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시 상담체계 구축 등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지원 근거* 마련(‘21.1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7월 시행)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실적 : 총 33,262건 선삭제(‘21.1.1.~’22.11.30.)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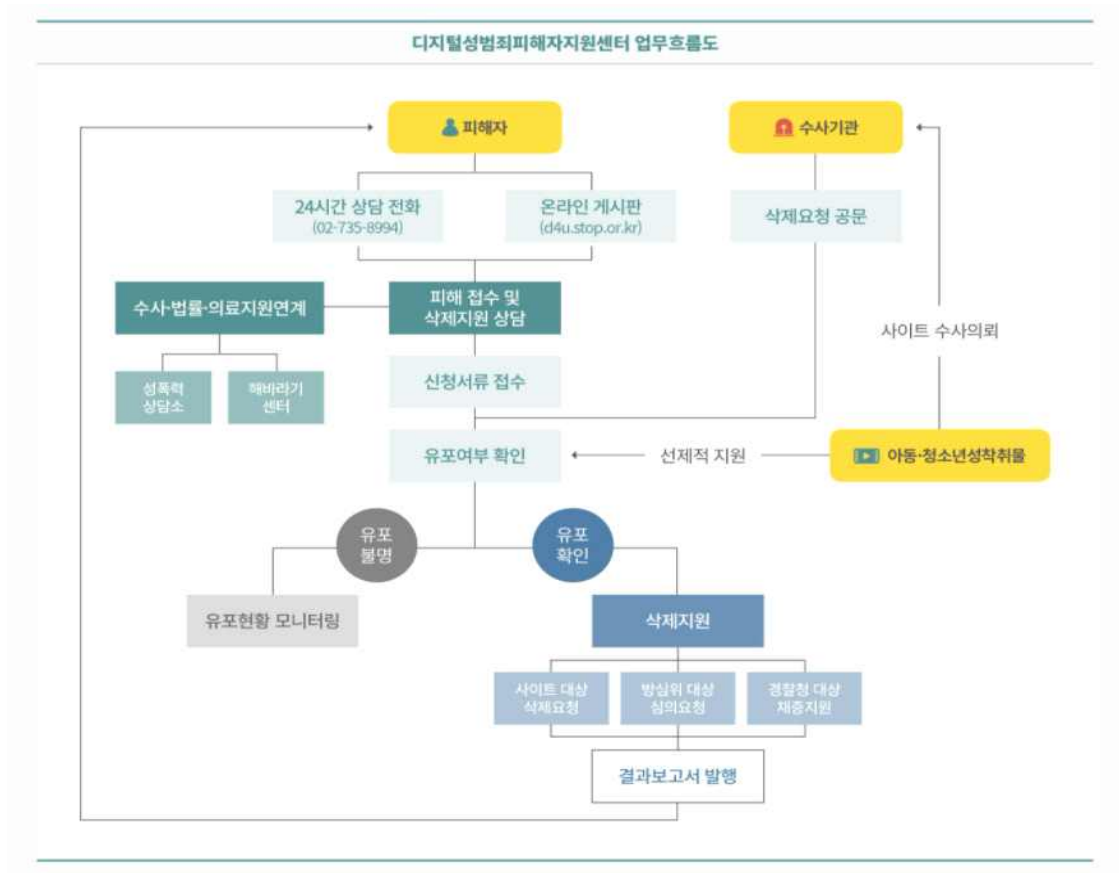
- 추진 내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 추진 방법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신청, 접수 → 상담 → 유포 여부 확인 →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 방심위 차단 요청 및 경찰 수사 채증 지원 → 재유포 모니터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연중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 운영)	14,846 (2,400)	14,846 (2,400)	14,233 (2,593)	△ 613 (193)	△ 4.1 (8)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지표명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 ○산식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수사 법률·의료연계 지원 등 서비스 합계	170,697건	188,083건	209,429건	215,711건	'22년 실적 대비 3% 상향

□ 기대효과

-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속 대응 및 확산 방지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전문인력 확충,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등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제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강동근 사무관 김민재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62 02-2100-6163
------	------------------	-----	--------------------	------	------------------------------

1-1-2-②
3-3-1-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및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일지, 삭제이력 및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차단기술 개발 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협조체계 강화
- 유포 불안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에 맞는 치유회복프로그램 개발('20년) 및 지원 실시('21년~)

□ 그간의 추진실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한 삭제지원 및 상담일지, 삭제이력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삭제지원시스템' 구축·운영('19)
 - * 해외사이트, SNS, P2P에 유포된 피해영상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시스템 연계 협업('19~)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을 위한 여가부-경찰청-방통위 업무협약 체결('19)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20~'22)
 - * 피해영상물 자동수집 기능(크롤링) 연계 사이트 확대, 서버 증축 등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확대('21년 7개소 → '22년 1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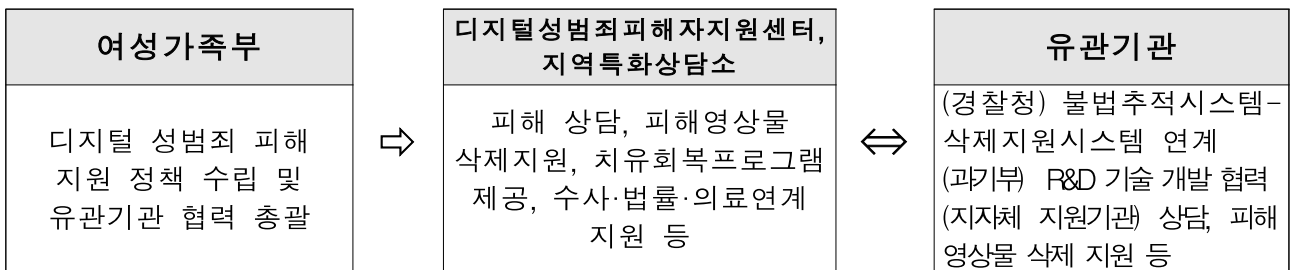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R&D 기술 협업 추진(과기부 협력)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확대(10개→14개)를 통한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추진 내용

- 피해영상물 자동수집 기능(크롤링) 사이트 확대, 지원기관간 연계를 위한 API 신규 개발 등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과기부 협력을 통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R&D 기술 개발 지속 추진(~'23)
 - *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 기술, 국내외 유해 웹사이트 자동 수집 기술 등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자체 지원기관, 지역특화상담소) 및 관계기관(경찰청, 방통위 등) 간 협업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한 치유회복프로그램 제공

○ 추진 방법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2/4분기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3/4분기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4/4분기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실시
연중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포함되어 집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341 (420)	2,175 (413)	784 (595)	△1,557 (175)	△66.5% (41.7%)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지표명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및 참여	4	4	4	4	분기별 협의체 운영 및 참여
○ 산식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및 참여 횟수					

□ 기대효과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유관기관 협업,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기능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R&D 기술 협업 추진(과기부 협력)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피해 지원 역량 제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강동근 사무관 김민재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62 02-2100-6163
------	------------------	-----	--------------------	------	------------------------------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구축한 유관기관(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 공동대응 체계*를 자치단체까지 확대
 -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여가부·방통위·방심위)로 운영중인 시스템과 연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정보를 상호공유

□ 그간의 추진실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온라인 원스톱 수사·삭제·차단 지원
 - 경찰서 출석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연계, 비대면으로 피해신고 시 수사 및 삭제·차단을 지원
 - * 피해자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신고와 함께 피해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즉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으로 전송, 방심위로 삭제·차단 요청 지원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기관을 자치단체로 확대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의 피해게시물 검색기능을 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에도 제공, 유포게시물 확인 시 삭제·차단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 '16년 경찰청에서 개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을 등록하여 방심위와 공유하고 방심위로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시스템

□ 2023년도 시행계획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연계된('22년) 지자체(서울·인천·경기)를 지자체(부산시)로 확대 추진, 신속한 삭제·차단 등 피해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경찰청 ‘추적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자치단체 업무협의
2/4분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개발사업 발주
3/4분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업 관리
4/4분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자치단체 연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국비	420	420	300	-120	-4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피해계시물 등 삭제·차단 건수	8,627건	13,544건	13,078건 (10월까지)	12,925건	20~22년 삭제·차단 평균건수*10%
방심위로 삭제·차단 심의요청한 피해계시물+피해영상물 건수					

□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 공동대응 체계를 중앙정부(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에서 전국 자치단체까지 확대, 입체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김문영 경위	전화번호	02-3150-0240
------	-----------------	-----	--------	------	--------------

□ 과제개요

-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 신속대응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디지털성범죄정보 상시 심의를 통한 24시간 내 신속 대응
 - 디지털성범죄정보 24시간 내 신속 심의 및 시정요구 : 42,976건<'22.1~10월>
 - 디지털성범죄정보 사업자 자율규제(심의 전, 선 삭제) 요청을 통한 선제적 조치 : 6,252건<'22.1~10월>
-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재유통 방지를 위한 긴급 사후 모니터링 : 31,185건<'22.1~10월>
 -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22.1~10월> : 웹 크롤링 및 특징값(DNA) 비교,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기술 적용
- 디지털성범죄정보 근원적 유통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해외 사이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을 고려, 원(源) 정보 삭제 등 근원적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체계 구축*
 - * 프랑스 사업자 자율규제 협회(Point de Contact)와의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발표를 통한 글로벌 연대 확대 구축<'22.9월>
 - 미국·호주·프랑스·영국·대만 등 해외 국제기구 및 주요 유관기관과의 글로벌 연대 확대 추진<대면·비대면회의, 총 15회>
 - 해외 주요 사업자(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5개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정보 시정요청(삭제) 협력 추진(이행률 94.8%)
 - 시정요청 대상 해외 플랫폼 사업자 확대(신규 사업자 6개사: 틱톡, 텀블러, 핀터레스트, 미디엄, 왓스, 왓패드, '22.10월)

□ 2023년도 시행계획

- 디지털성범죄 상시 심의 등 신속 대응 확대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상시 심의 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계속>
-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역량 제고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주요 유통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계속>
 -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3차)
 - 수집정보의 교차분석을 통한 심의대상정보와 비대상 정보의 구분 기술 정교화 및 비정형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선
- 디지털성범죄정보 공동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해외 유관기관·사업자와 해외 디지털성범죄정보 근절을 위한 실무협의 등 다각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계속>
 - 방통위·여가부·경찰청 등 국내 관계기관 상시 협력<계속>
-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구축
 - 소관 부처·기관별 담당업무에 대한 종합 안내 및 신고내용에 따른 자동 연계를 통해 신속한 구제 조치 및 이용자 편의 도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522*	278**	418***	104	△20.0

* 인건비, 경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 기준으로 변경 작성

** 자동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170),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해외유관기관 교류협력 등 미집행, 연말 집행 예정

***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모니터링시스템 2차 구축 종료(△400) 및 3차구축(150),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구축 사업(146) 반영 등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10)		
○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운영	261회	131회	223회	250회	일1회 이상 (근무일 準)
○ 사업자 및 유관기관 협력	4회	29회	31회	4회	분기 별
○ 디지털성범죄정보 해외 협력회의	-	6회	15회	5회	3차년도
○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1회(구축)	1회(고도화)	1회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자심의지원 시스템 구축 1회	-	-	-	완료사업

담당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	담당자	이도한 차장	전화번호	02-3219-5813
------	--------------------	-----	--------	------	--------------

□ 과제개요

- 불법촬영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
-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그간의 추진실적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상시)
 -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 148건, 90백만원('22. 10.)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 지침」을 개정('21. 12.)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
-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 등 지원(상시)
 - *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서비스 : 4,770건('22. 10.)
-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상시)
 - * 법률상담 : 516건('22. 10.), 소송구조 : 192건('22. 10.)

□ 2023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
 - 전문 심리 치유 서비스 제공 및 임시주거 시설 등 지원
 -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민사 법률지원 등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

○ 추진 내용

- 성범죄와 관련하여 5주 미만 상해피해자 치료비 지원, 간병비 및 취업 지원비 지원, 수사기관 법정 동행, 상담 등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 성폭력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들의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상담,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전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성범죄 피해 법률상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 법률지원, 2차 피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손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법률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추진 방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등 지원
- 스마일센터를 통한 무료심리치유서비스 지원
-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연중)
2/4분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연중)
3/4분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연중)
4/4분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10월 말		2023년 예산안(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12,901	9,033	12,178	△ 723	△ 5.6
○ 범죄피해자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지원(범피기금)	4,076	2,644	3,503	△ 573	△ 14.1
○ 스마일센터 운영(범피기금)	8,413	5,977	8,263	△ 150	△ 1.8
○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범피기금)	412	412	412	-	-

* 해당 예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만이 아닌 각 사업의 전체 예산임
(특정 사건 지원을 위한 예산만 별도 산출 곤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2. 10.)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건)	-	117	148	170	*'21년 실적을 기준으로 '23년 목표치 설정
○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건)	4,219	5,072	4,770	5,072	"
○ 무료법률서비스 제공(건)	643	634	708	634	"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실적 통계는 2021. 1.부터 산출

□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편향적 시각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경제적 지원
-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적 지원
-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담당부서	법무부 인권구조과	담당자	강도윤 주무관	전화번호	02) 2110-3640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
 - * 피해자 회유 및 협박, 피해자 ‘행실’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 이에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대한 배려 및 신변 보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20. 4. 디지털성범죄의 불법동영상 관련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배포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위한 불법동영상 유포 차단 및 삭제 지원 절차 마련
- '20. 5.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절차 철저 지시
 - 가명조서 작성된 경우 고소사건에서도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 금지 등
- '20. 5.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신속 지원 및 활성화 지시
- '20. 6. 불법동영상 유포차단·삭제 지원 매뉴얼 배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 의사 확인 불요, 성폭범위반 불법동영상이지만 피해자 의사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도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자 의사 확인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선
- '20. 연중.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 통지 및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KICS 수사결정시스템 등 구축 중
- '20.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제17282호, 2020. 11. 20. 시행)으로 인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실시

- '20. 11. 2020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7~.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21. 7.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지시
 - 사법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유기적·상시적 협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적극 대응, 실질적 피해 아동 보호에 만전
- '21. 8. 디지털성범죄 관련 우수 피해자보호 사례 전파 및 피해자보호조치 적극 활용 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우수 사례 전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검찰 핫라인 구축 및 적극 활용 지시
- '21. 1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응 TF' 구성·운영
- '21. 1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보고
 -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등 서식 개정, 성폭력 피해자 조사 중 유의사항 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제도 추가
- '21. 12. 2021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12.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시달
 - 헌법재판소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 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 이에 따라 일선 청에 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달
- '21. 12.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책자 배포
 -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일선 청 송부
 - ※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용 포함
- '22. 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사경 협력 강화, 신속·엄정 대응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보복·회유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 송치 전 범죄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소통·협력하여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신변 등 사건 수사에 있어 관련 매뉴얼 및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관련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
- '22. 1.~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TF」 구성 및 운영
 - 장애인,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전담검사·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집 제작을 위한 TF 구성
- '22. 2. 스톱강·성폭력 등 강력범죄 관련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 사경신청 구속영장 등 사법통제를 함에 있어, 사건송치 전이라도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피해자 진술청취 등을 통해 재범 및 위해우려 등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특히 피해자가 추가 피해 우려를 호소할 경우, 영장 검토 시 가해자 접근 차단(신병처리, 안전가옥 제공, 대상자 유치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 '22. 4. 피해자지원 매뉴얼 책자 배포 및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지시

- 검찰실무에 적합한 피해자지원 매뉴얼 제정·배포
-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성폭력·학대·보복 범죄 등 강력사건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상으로 회복 시까지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신변보호, 심리상담·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지원

○ '22. 4. 성착취물 소지범 처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엄단 및 성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 삭제·유포 차단,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 등 피해자지원 적극 실시 지시

○ '22. 8.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핫라인 협조 사항」 배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속한 피해자 연계 및 피해촬영물 제공 방법의 보안 강화를 위해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핫라인 협조 요청 사항」을 제작, 일선 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에 적극 참고

○ '22. 9. 검찰총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중 불법영상물 삭제 업무 등 피해자들에게 실효적으로 필요한 보호·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등 다각적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 '21. 1.~'22. 11.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시설 개선 리모델링 공사 완료('22. 11.말 기준, 35개 검찰청 공사 완료)

- 여성·아동 피해자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을 통해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023년도 시행계획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등 제도 활용(연중)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법정 동행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에 대한 경제·의료·법률 지원, 예술·심리치료 등 적극 실시

○ 피해자 조사 전용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추진(연중)

- 일선 검찰청의 시설 노후화 정도,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진행
-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연중)

- 신변보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변보호 대상범죄 확대 방안 지속 추진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및 출소사실 등을 통지하는 정보제공 제도 지속 및 확대 실시
- 성폭력 등 강력사건에 있어서 가명조서 및 신원관리카드 작성 실태 지속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명)	성폭력 : 22,849	성폭력: 25,648	성폭력: 26,340	24,945	전국청 수기취합
○ 성과목표치 산식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인원					

※ 2023년 목표치는 '20~'22년 실적의 평균치로 산정

☐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 관련 피해자 보호 강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대검찰청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1-1-2-④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과제개요

- 심리적으로 불안상태가 지속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피해 진술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그간의 추진실적

- 피해자 성별에 따라 동성(同性) 경찰관이 진술 청취, 피해자 조사 시 보호제도* 적극 안내, 가명조서 적극 활용
 - * 전담조사관, 국선변호인, 진술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전문가 참여, 진술조력인 등
- 전국 경찰관서에서 총 5,185건에 걸쳐 피해자 보호·지원 실시

<수기통계(중복집계), '22. 10월말 기준>

구분	영상삭제 지원·연계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연계	신변보호 요청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	신뢰관계자 등 동석	진술녹화	가명조서 작성
5,185건	3,513건	269건	175건	459건	226건	167건	376건

□ 2023년도 시행계획

- (피해자 친화적 환경 제공) 최초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 외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된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술녹화실 확대
- (일원화된 피해자 보호 지원) 피해자 보호지원관을 지정하여 신고접수부터 사후 연계 지원까지 쉼 과정에 걸쳐 피해자 보호·지원 실시
 - ※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109명 중 여경 25명, 22.9% 차지('22. 10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경찰청 수사인권보호계 수기통계>

성과목표	실적 (2022년)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진술녹화실 확대	10개 신축	10개 신축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오화섭 경감	전화번호	02-3150-1159
------	-----------------	-----	--------	------	--------------

□ 과제개요

- (추진배경)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18년 범부처 불법 촬영 근절 대책('18.6.15.) 발표와 함께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점검 추진
- (추진목적)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불법 촬영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 근절 도모
- (주요내용) 지자체별 상시·합동 점검반을 구성 및 정기·수시 불법 촬영 점검 활동,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각종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기초지자체 간 협업을 통하여 추진
※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소속 행정·산하기관

□ 그간의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단속을 상시점검 체계 운영('18.6.15.~)
 - 지자체별 합동점검반 구성(3,937명) 및 상시점검* 추진
 - * 누적점검건수: ('19년) 415천개소, ('20년) 446천개소, ('21년) 483천개소, ('22년6월 247천개소)
 - 주요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보유한 탐지장비와 인력으로 자체점검
 -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교통공사
 - 명절 및 휴가철 공중화장실 국민편의·안전 점검 실시(행안부·지자체·경찰)
-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예산지원
 - 불법촬영 탐지장비 지원(7,298대, 26억) 및 안전시설 개선(24억) ('18년)
 - 국민 안심 선도사업('19년, '20년 각 20억, '21년 10억, '22년 10억)
-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 근절 등 이용문화 에티켓 4종 홍보물 제작·배포('22. 5.)
-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배부('22.6)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운영 및 점검실적 총괄 관리

○ 추진 내용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운영 및 점검실적 총괄 관리

* 시·도, 시·군·구, 소속·산하기관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연1회) 및 점검반 구성·운영

- 명절 및 휴가철 공중화장실 국민편의대책* 및 캠페인 추진

*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비상벨 설치·작동 여부 점검 등

- 불법촬영 근절 지자체 점검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점검 매뉴얼 보완 및 불법촬영 점검 교육 및 불법촬영 홍보물 제작·배포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실적 현황 관리 설 명절 대비 공중화장실 국민편의대책 추진
2/4분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실적 현황 관리
3/4분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실적 현황 관리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대비 공중화장실 국민편의대책 추진
4/4분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실적 현황 관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개정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다중시설 내 공중·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 실적	483,076개소	247,764개소 (‘22.6월기준)	420,000개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점검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어 ’22년도 예상실적과 동일 수준 목표 설정
○ 성과목표치 산식 : 점검 화장실 총 개소 수				

□ 기대효과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운영 및 점검실적 총괄 관리
- 명절 및 휴가철 공중화장실 국민편의대책 지속 추진
-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점검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담당자	강인선 주무관	전화번호	044) 205-3546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최근 불법카메라 촬영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철도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필요

* 최근 5년간 철도분야 불법촬영범죄 현황 : '15년 164건 → '21년 351(2.1배 ↑)

□ 그간의 추진실적

- 철도운영자가 철도·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화장실, 수유실에 대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1일 1회 이상 점검 실시(국토부 고시*, '19.1.시행)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및 역구내 화장실, 수유실에 대해 카메라 등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여부를 1일 1회 이상 점검

□ 2023년도 시행계획

- 철도운영자는 철도역사(화장실, 수유실 등)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화장실, 수유실 등)에 대한 일일점검을 지속적으로 지속 실시
 - 철도경찰대는 성범죄 빈도가 높은 수도권 광역철도 구간에서 불법카메라 촬영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단속 강화
- *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강남팀, 인천팀 신설('22년)
- 또한 철도운영자는 철도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요 철도역사 등에서 불법 카메라 촬영범죄 합동단속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철도운영자 철도역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2/4분기	철도운영자와 철도경찰대와 합동으로 철도역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3/4분기	철도운영자 철도역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4/4분기	철도운영자와 철도경찰대와 합동으로 철도역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철도차량 및 역구내 화장실, 수유실 일일 점검 ○ 1일 1회 이상 점검	365	365	365	365회 이상	점검결과 보고

☐ 기대효과

-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카메라 촬영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철도역사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안전체감도 제고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송재영 철도경찰사무관	전화번호	044) 201-4617
------	------------------	-----	----------------	------	---------------

□ 과제개요

- (추진목적) 불법 카메라 확인 여부 수시확인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공중위생서비스평가 총괄 기획 및 조정) ⇒ 시·도(평가 계획 수립) ⇒ 시·군·구(평가 실시) ⇒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자단체(평가 협조)
-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소를 점검하여 위생서비스 평가*를 시행, 평가항목에 불법카메라(유사장치 포함) 점검확인증 부착 여부를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 *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포상 등을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근거 신설(「공중위생관리법」 개정, '18.12.11.)
-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2020년~2022년 숙박·목욕·세탁·이미용)
 -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업종마다 격년으로 추진(숙박·목욕·세탁 : 짝수해, 이·미용 : 홀수해)

□ 2023년도 시행계획

- 중점추진사항
 - '23년도 평가대상 업종(이·미용) 위생서비스 평가항목에 불법카메라 점검확인증 부착 여부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실시 및 홍보
 - 위생서비스 평가 및 홍보를 통한 공중위생영업소 내 불법 카메라 위반업소 발생 예방
 - * 연 발생 5건 미만 목표
- 추진 내용
 - 이·미용 업종의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시행 시 영업장에 불법카메라 점검확인증 부착 여부 확인

○ 추진 방법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항목 마련 및 지자체·협회 공문 시행, 전국 공중위생영업소 불법 카메라 위반업소 확인
- (시·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자체 계획 수립 및 결과 취합 보고
- (시·군·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불법 카메라 부착 위반업소 행정처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항목 마련 및 지자체·협회 공문 시행
2/4분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및 홍보 지속 전국 공중위생영업소 불법 카메라 부착 위반업소 확인
3/4분기	
4/4분기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녹색등급 부여율(~22)	32%	40.6%	38.9%	-	(녹색등급 업소수 / 평가업소수)*100
○ 성과지표명: 공중위생영업소 불법 카메라 설치 위반 건수 (신규)				5건 미만	전국 공중위생영업소 불법 카메라 설치 위반 행정처분 수

☐ 기대효과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시 불법카메라 점검 확인증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영업자에게 영업장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경각심 제고 및 관련 범죄 발생 사전 예방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중위생영업자단체 지속 홍보 요청 및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예방

* 2024년도 서비스평가 대상업종 : 숙박·목욕·세탁업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	담당자	김광수 주무관	전화번호	044) 202-2858
------	-----------------------	-----	------------	------	---------------

□ 과제개요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불법 촬영기기 규제 관리
 - 변형카메라 취급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진선미 의원, '21.3.25) 및 과방위 상정('21.4.20)
 - * 취급업자 등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관리사실 고지, 판매·구매정보의 기록 등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윤영찬 의원, '21.9.24) 및 과방위 상정('21.11.9)
 - * 취급하고자 하는 자 허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관리사실 고지, 판매·구매정보의 기록 등
-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윤영석 의원, '22.9.30) 및 과방위 상정('22.11.10)
 - * 취급업자 및 소지자 등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및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 추진 내용
 - 법률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내용들을 구체화
- 추진 방법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제정 연구반을 구성·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2/4분기	○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3/4분기	○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4/4분기	○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국회에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변형카메라 취급자 등록제 도입	-	-	-	법률안 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 성과목표치 산식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1건					

☐ 기대효과

○ 변형카메라의 취급 관리, 이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전관리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변형카메라 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담당자	심향섭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4956
------	--------------------	-----	------------	------	---------------

1-2-1-②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 과제개요

- (주요내용)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공장소 내 개인영상 촬영 금지의무 부과

□ 그간의 추진실적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정부안 마련 및 국회 제출('21.9.28)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영상 촬영기준 마련 등(제25조의2 신설)
 - ※ 제25조의2 ②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2023년도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공표 '23.3.14., 시행 '23.9.15.)
 - * 국회 제출('21.9.28) → 정무위 전체회의('21.11.16) → 정무위 의결('22.12.5) → 법사위 의결('23.2.16) → 본회의 통과('23.2.27) → 국무회의 의결('23.3.7) → 공표('23.3.14)
- 추진 내용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개선안	정부안	국회 심의	국회 법안통과	
○ 성과목표치 산식 : 개정안 국회통과 지원	마련	국회제출	지원	적극 지원	

□ 기대효과 :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공장소 내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담당자	정종일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3066
------	-----------------------	-----	---------	------	---------------

□ 과제개요

-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영상물 유포 통제
 -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태 점검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아동·청소년보호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 소프트웨어(SW) 보급

□ 그간의 추진실적

- 웹하드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점검 및 위반 시 행정제재
 - 웹하드 사업자 대상 불법영상물 유통 관련 상시 점검
 -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추정) 삭제 현황 : ('20) 126건 → ('21) 61건 → ('22.10월) 0건
 - 불법 음란물 삭제 현황: ('20) 213,669건 → ('21) 240,923건 → ('22.10월) 249,444건
 -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후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
 - * ('20.1월) 총 4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총 2,800만원)
 - * ('21.3월) 총 3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총 2,100만원)
 - 92개 주요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 및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강화 및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20.6.)
 -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음란물 기술적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2천만원→5천만원) 상향
 - 조치의무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부과 및 위반시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 신설
 -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웹하드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 기술 개발·보급 및 불법촬영물 등 공공 DNA DB 구축·제공('21.8.~)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방통위 주관으로 법무부,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협업 강화를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운영(‘22.9.) 및 국장급 고위급 협의체 구성·운영(‘22.12.)
- 청소년 보호 SW ‘스마트안심드림’에 불법·유해영상 및 디지털성범죄 의심문자 감지기능 도입(‘22.6.)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실태점검
 - 주요 인터넷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태 점검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 실시
 - 주요 인터넷사업자 투명성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 고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주요 인터넷사업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확인
2/4분기	· 주요 인터넷사업자 투명성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 불법촬영물 등 표준 필터링기술 고도화 ·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 시행
3/4분기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 실시 · 주요 인터넷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태 점검(7~12월) ·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실태점검(7~12월)
4/4분기	· 주요 인터넷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태 점검(7~12월) ·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실태점검(7~12월)
연중	·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 청소년보호SW 보급(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2,765	2,765	3,177	412	14.9
▪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2,765	2,765	3,177	412	14.9
○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	1,250	1,250	3,177	143	14.9
▪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1,250	1,250	1,393	143	11.4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불법음란 정보 유통방지 등록 건수	65,702건	68,391건	78,325건 (‘22.10.기준)	79,108건 ※ ‘22.10. 기준 임시 산정 한 목표치	‘23년 목표치는 전년 실적대비 약 1% 상향 설정
○ 성과목표치 산식 : 상시점검 등을 통해 확보한 불법음란정보의 DNA DB 등록 건수					

□ 기대효과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담당자	김기호 사무관 김은비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1549 02)2110-1564
------	-----------------------	-----	--------------------	------	------------------------------

□ 과제개요

-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배포 등 기술지원을 통한 불법촬영물등 재유통 방지

□ 그간의 추진실적

- 범정부 '공공 DNA DB'의 안정적 구축 및 확대 개편
 -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배포 : 51,562건<~'22.10월>
 - 방통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계기관 간 '공공 DNA DB' 통합 구축·개선을 위한 수시 협력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 확대 ('21.12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 일정기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 '디지털성범죄 등 공공 DNA DB 기술 지원 포털' 개설 및 서비스 운영
 - 조치의무사업자 대상 '공공 DNA DB' 및 '표준 DNA 필터링 모듈' 지원
 - DNA 필터링 기술 오식별에 따른 이용자 민원발생 사안 신속대응
 - * 오식별 해소를 위한 DNA 오검출 확인 및 조치<21건, '22.10월>

□ 2023년도 시행계획

-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지원<계속>
- 공공 DNA DB 통합 관리·공조 시스템 고도화(3차)
 -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및 처리' 절차 마련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 대국민 접수 창구 구축 및 시스템 연계, 전담인력 배치 등 통한 업무 효율화 모색
 - 해외 관계기관(NCMEC 등)과의 불법촬영물 연계 자동화 구축을 통한 해외 인터넷 서비스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재유통 방지
 -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배포 등 조치의무사업자 안정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460	427	650	▲190*	▲41.3

* 공공 DNA DB 2차 구축 종료(△460) 및 3차구축(200),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50) 반영 등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공공DNADB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자율규제시스템 통합 DB 서버 구축1회	1회(구축)	1회(고도화)	1회(고도화)	시스템 유지보수

담당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	담당자	이도한 차장	전화번호	02-3219-5813
------	--------------------	-----	--------	------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 약물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한 탐지기술 개발 및 대외협력을 통한 신고·홍보 활성화 등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부·대학 인권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 내 정기(반기 1회) ‘성폭력 예방 정보’ 제공체계 구축, 약물 성범죄 예방 등 정보제공 추진
 - ‘22. 10월, 경찰청에서 제작한 예방 정보(캠퍼스 안심소식지)를 교육부에서 전파, 대학 내 게시하고, 대학 인권센터를 통해 상담 등 실시
- 경찰청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운영으로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증거수집 방법 및 대처방안 등 안내 등 홍보 및 예방활동 실시
- 과기부 등 협업, 신속한 탐지를 위한 상황별 휴대용 약물 탐지기술 개발
 - ‘20년 마약 3종, ‘21년 마약 9종(현장·전문수사관용 6종, 일반국민용 3종), ‘22년 마약 10종(현장·전문수사관용 7종, 일반국민용 3종) 개발 완료

- ▶ <일반 국민용> 주류·음료 등에 포함된 마약의 존재 유무 확인하는 휴대용 키트
- ▶ <현장 경찰관용> 주류 등에 포함된 마약의 종류까지 신속하게 식별 가능한 키트
- ▶ <전문 수사관용> 현장 잔류(신체·의류), 미량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장비

□ 2023년도 시행계획

- 경찰청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기능 고도화 및 행안부 「국민비서」 협업,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정보제공 활성화 추진
- 여성가족부, 유관기관 등과 협업,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신고 및 대처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일반·현장경찰관용 휴대용 약물 탐지기술 실증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2년)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대국민 홍보물 제작	1건	2건	홍보물 제작 건수

※ '22년 약물 탐지기술 개발 과제 완료에 따라 성과지표 변경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강소연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5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과학치안정책팀	담당자	송수진 경감 김대현 경사	전화번호	02-3150-0832 02-3150-1143

□ 과제개요

- 해외 주요사범당국과 사범공조 강화 및 범죄인인도 실무협의 개최를 통해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해외도피 불법촬영물 사범 국내 강제송환
 -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돈을 받고 판매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범을 덴마크에서 강제송환(2020.7.)
 - *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와 덴마크간 직항편이 없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환승하며 왕복 40시간 가량 소요되는 일정으로 범죄인 송환
- 주요 국제회의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 UN 범죄예방·형사사법총회 참석하여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입장 표명(2021.3.)
 -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당사국총회 참석하여 여성·아동 성착취물 및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결의안 채택(2022.10.)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노동력착취, 성적착취,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 규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율되고 그에 상당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교육
 - 법무연수원 저년차검사 대상 성착취 등 인신매매 범죄 수사 및 공소 유지 강의(2022.10.)
 - 법무연수원 검찰 6급 승진후보자 대상 국제기준에 부합한 성착취범죄 등 수사역량 강화 강의(2022.10.)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과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화상회의로 대체된 국제 형사사법공조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주요 사법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 강화 지속
- 주요 형사사법공조 국가를 대상으로 기존 사례, 실무, 특이사항 등 국가별 맞춤형 DB화 구축하여 불법 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요청 시 신속한 공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형사사법공조 국제회의 참여 및 디지털성범죄 국제공조 협의
2/4분기	○ 형사사법공조 국제회의 참여 및 디지털성범죄 국제공조 협의 ○ 성착취 범죄 및 인신매매 범죄 관련 검사·수사관 실무 교육
3/4분기	○ 형사사법공조 국제회의 참여 및 디지털성범죄 국제공조 협의
4/4분기	○ 형사사법공조 국제회의 참여 및 디지털성범죄 국제공조 협의 ○ 성착취 범죄 및 인신매매 범죄 관련 검사·수사관 실무 교육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해외 주요사법당국 및 관계부처와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무협의회 실시	4회	4회	4회	4회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무협의회 분기별 1회 실시, 코로나19 고려하여 산출

□ 기대효과

- 해외 사법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
 -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요청한 불법촬영·유포사범 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 사건에 대해 신속한 공조 이행 기대

담당부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담당자	김종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10-3296
------	-----------	-----	---------	------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과제개요

- 형사사범공조, 인터폴 공조와 함께 외국 법집행 기관·글로벌 기업 등과 직접 공조 등 국제공조 체계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인터폴·유로폴 공조와 함께 해외 법집행 기관(美 FBI·HSI 등)·글로벌 IT 기업(구글·페이스북 등)과 직접 공조를 통해 국제공조 체계 강화
 - 불법촬영물 등 제작·유통 사건 관련 해외 IT기업에 대한 국제공조 요청 1,195건('22. 10월말 기준)

□ 2023년도 시행계획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국외 체류 및 도피 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 및 국내송환 요청 등 적극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경찰청 국제공조협력계 통계, 1~10월 누적>

성과목표	실적 (2022년)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사이버성폭력 사건 관련, 해외 IT 기업에 대한 국제공조 요청건수	1,195건	1,195건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오화섭 경감	전화번호	02-3150-1159
------	-----------------	-----	--------	------	--------------

□ 과제개요

- 해외성매매로 인하여 국위손상자로 통보된 자에 대해 현행 여권법령 등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

□ 그간의 추진실적

- '20.1월~'22.10월 간 관계기관 등의 통보에 따라 해외성매매 사범 5명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조치 완료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해외성매매로 인하여 국위손상자로 통보된 자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시행

○ 추진 내용

- 현행 여권법령에 따라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 해외성매매 범죄 사실의 보고 누락 방지를 위하여, 반기별로 전 재외공관에 국위손상자 보고에 관한 지침 등 공문 발송을 통해 주의 환기

○ 추진 방법

-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이 해외성매매 사범을 적발하여 보고시, 외교부 본부가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후 일정기간 여권 발급 제한 처분

*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강제퇴거 조치
2.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3.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후략)

- 전 재외공관에 반기별 국위손상자 보고에 관한 지침 등 공문 발송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연중상시	해외성매매로 인한 국위손상자 적발·보고시 여권 발급 제한 처분
상반기	전 재외공관에 국위손상자 적시 보고 환기 공문 발송
하반기	전 재외공관에 국위손상자 적시 보고 환기 공문 발송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10월)		
○성과지표명 : 해외성매매 사범 여권 발급 제한	4건	1건	0건	80%	여권발급 제한 요청에 따른 조치 건수
○성과목표치 산식 : ① 조치건수÷여권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성 매매 사범 통보건수*100 ※ 다만 통보건수가 0건인 경우 이행율을 100%로 하며, 통보 후 조치가 진행중인 건수는 산식에서 제외한다.					
② 전 재외공관에 국위손상자 적시보고 환기 공문 발송				2회	국위손상자 적시보고 환기 공문 발송횟수

☐ 기대효과

○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을 통한 재발 방지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해 여권 행정제재 및 관계기관 등에 지속적인 환기
 -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국위손상자에 해당하는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처분
 - 해외 성매매 범죄 사실 보고 누락 방지를 위하여, 반기별 전 재외공관에 국위손상자 적시 보고 환기 공문 발송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외교부 여권과	담당자	이석화 행정관	전화번호	02) 2002-0133
------	---------	-----	------------	------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과제개요

○ 해외성매매 방지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 해외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전국 국제공항 전광판을 통한 해외성매매 불법 홍보('20.1월~계속)

※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전국 국제공항 내 전광판을 통한 홍보 추진

홍보문구: “아직도 모르십니까? 해외성매매도 처벌됩니다. 성매매피해상담 1366”

○ 성매매 실태조사를 통한 해외 성매매 경험 등 실태조사 추진('22년)

※ 성구매 경험 및 경로(본인, 주변인), 해외 성매매 처벌 인식 등(2,000명 내외)

○ 성매매추방주간(9.19~25) 등 계기를 활용하여 공공 전광판 등을 통한 성매매 방지 홍보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해외성매매 경험 등 실태조사 결과 공개('23년 상반기)
- 성매매 추방주간(9.19~25) 운영 등 대국민 홍보(매년)
- 전국 공항 전광판을 통한 해외성매매 불법 홍보(계속)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공항 전광판 홍보 협조요청
2/4분기	- '22년 성매매실태조사 결과 공개(해외 성매매 관련 결과 포함) - 공항 전광판 홍보 협조요청
3/4분기	- 공항 전광판 홍보 협조요청
4/4분기	- 공항 전광판 홍보 협조요청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2,341	2,175	784	△1,557	△66.5%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개월)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성과지표명 : 공항 전광 판 홍보 횟수	12	12	12	12	관련 공문서에 기재된 연간 개월 수 합산
○성과목표치 산식 : 관련 공문서 상의 전광판 홍보 개월 수의 합계					

☐ 기대효과

○ 해외성매매 불법성 홍보 등을 통한 성매매 방지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매매추방주간 등 계기별 성매매 방지 홍보 추진

○ 해외 성매매 경험 등 실태조사('25년 예정)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대중 사무관 고영선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435 02) 2100-6446
------	----------------	-----	--------------------	------	--------------------------------

1-3-2-①

해외성매매 방지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과

□ 개요

- 인터폴 전용통신망을 통해 해외성매매 공조요청을 접수하거나, 해외 경찰주재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등으로부터 해외성매매 첩보를 수집하여 국수본에 인계
- 국수본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조직범죄수사계에서는 인계받은 첩보 및 자체 생산 첩보 바탕으로 해외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등 상시단속하여 해외성매매 방지

□ 그간의 추진실적

○ '22년 해외성매매 피의자 검거 현황

구분	계	성매매알선	성매도	성매수
검거인원(명)	5	0	1	4

□ 2023년도 시행계획

○ 해외성매매 첩보 수집 강화 및 상시 단속 실시

- 해외 경찰주재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등을 통해 해외 성매매 첩보 수집 강화
- 국제범죄수사계를 활용, 해외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상시 단속 등 실시

○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참여 및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제 구축하여 해외성매매 상시단속에 대해 정부 부처간 긴밀히 협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2년)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해외성매매 피의자 검거인원(명)	5	10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담당자	이민혁 경감 김태현 경감	전화번호	02-3150-0416 02-3150-2043
------	------------------------------	-----	------------------	------	------------------------------

□ 과제개요

- 휴대전화를 통해 유통되는 성인스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스팸신고 정보를 통해 성매매 알선 정보의 유통 여부 파악·대응

□ 그간의 추진실적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성인 광고·음란물 등의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조치
 - 성인 스팸 발송업체 22개 대상 조사 및 불법스팸 전송자 22개사 수사의뢰(‘21년)
 - 성인 스팸 발송업체 10개 대상 조사 및 불법스팸 전송자 3개사 수사의뢰, 5개사 행정처분 의뢰(‘22년)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휴대전화를 통한 성인 스팸 발송업체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10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성매매 알선 등 음란·성인스팸 신고내역 모니터링 및 주요 전송자 확인
2/4분기	성매매 알선 등 음란·성인스팸 신고내역 모니터링 및 주요 전송자 확인
3/4분기	성인 스팸 전송자 현장점검 실시
4/4분기	성인 스팸 전송자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조치(행정 및 형사처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 불법스팸 신고접수 및 처리	865	865	865	-	-
국비					
▪ 일반회계	865	865	865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인스팸 발송 업체 기획 점검 대상업체 수(개)	15	22	10	15	성인스팸 점검 대상 선정은 신고를 기반으로 조사가 이루어 지므로 20~22년도 목표치 평균 유지
※ 성과목표치 산식 : 불법 성매매 신고 접수 후 진행한 현장점검 건수 집계					

☐ 기대효과

○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알선 정보 유형파악 및 신속 대응조치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스팸 신고를 바탕으로 성매매 알선 정보의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성매매 알선 정보 탐지 시 신속히 차단·처벌 조치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담당자	성재식사무관 이병수주무관	전화번호	02)2110-1521 02)2110-1522
------	----------------------	-----	------------------	------	------------------------------

1-4-1-①

1-4-1-②

성매매·알선 정보 전달 매체 감시 강화**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과제개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매뉴얼> 하달('21년 9월)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 실시('22년 9-10월)

□ 2023년도 시행계획

- **(아동·청소년 재피해 방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시 피해자로 보호 및 지원센터 연계하여 상담·자활 등 지원을 통해 재피해를 방지하고,
 -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매년 3·9월) 시 신고방법, 보호·지원내용 등에 대해 △온라인 홍보·교육 △SPO 특별예방교육 등 실시
- **(성매매 사범 검거 및 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적극 실시하여 범죄자 검거 및 범행심리 억제로 범죄 예방 효과 증대
- **(성매매 알선 정보 차단)** 성매매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성매매 광고 차단 시스템*'을 통해 성매매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
 - * 성매매 전단지·알선사이트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자동전화 시스템에 등록, 3초마다 전화를 걸어 성매매수자의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18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검거인원	236명	292명	300명	KICS 통계 시스템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근절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담당자	전중현 경위 박도현 경위	전화번호	02-3150-0827
------	---------------------------	-----	------------------	------	--------------

1-4-1-②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상담 추진)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과제개요

-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상에서 성매매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 상담, 구조지원 등 성매매 예방활동 추진
- 청소년 온라인 성매매 예방을 위한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채팅앱, 채팅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의심 이용자 신고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서비스 홍보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서비스(법률, 의료, 교육 등) 연계
- 사이버포래상담원(채팅앱 은어 등에 익숙한 성매매 피해청소년 중 선발)을 양성하여 온라인 상담원으로 활동 및 자립 도모
-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18	'19	'20	'21	'22
상 담(명)	4,063	4,284	3,611	4,396	4,923
지원 연계(건)	4,719	5,699	4,751	5,920	5,471
방심위 신고(건)	902	971	954	993	1,161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상담 실시(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협업)*
 - * 청소년 성매매(성착취) 사이버상담 사업 시범 실시(진흥원), '24년 이후 진흥원 고유 사업으로 이관하여 온라인 성착취 대응 총괄 기능 강화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의료지원서비스 연계
- 온라인 성매매 의심정보 신고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홍보 사업 등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랜덤채팅앱을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에 포함하도록 고시 개정·시행('23. 9월 시행예정)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상담)	6,746 (261)	5,756	6,116 (261)	△630 (전년동)	△9.3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성과지표명 : 온라인 성매매 유인 의심신고 건 수	1,360건	1,161건	1,313건	최근('20~'22년) 3년간 신고 건수 평균 실적
○성과목표치 산식 :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건수 합계				

□ 기대효과

○ 성매매 유입 억제를 통한 청소년 및 성산업 확산 방지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사이버 상에서 성매매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 상담, 구조지원 등 성매매 예방활동 지속 추진

○ 청소년 온라인 성매매 예방을 위한 사이버 포래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대중 사무관 박건용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35 02)2100-6443
------	----------------	-----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

□ 과제개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주요 창구인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정보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 및 시정요구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랜덤채팅앱 및 SNS를 통한 개인 간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
 - 랜덤채팅앱 : 6,816건(2020년) → 7,417건(2022년 11월 현재), 9% 증가
 - SNS : 1,207건(2020년) → 4,650건(2022년 11월 현재), 285% 증가
- 인터넷 상 공개되어 유통되는 성매매 광고 정보 시정요구
 - 661건(2020년) → 1,142건(2022년 11월 현재), 73% 증가
- 출장마사지 및 화상채팅, 애인대행 등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 71건(2020년) → 1,636건(2022년 11월 현재), 2,204% 증가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랜덤채팅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전환
 - 성매매 정보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 다양화
 - URL 변경 등 단속 회피 온라인 성매매 정보 적극 대응
- 추진 내용
 -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악용되는 랜덤채팅앱에 대하여 일회성 중점 모니터링이 아닌 상시 모니터링으로 전환
 - 주요 글로벌 SNS를 통해 유통되는 성매매 및 성매매 광고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시정요구 강화
 - 해외서버에서 URL 변경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는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심의 및 시정요구 대응

○ 추진 방법

- 랜덤채팅앱 모니터링 전담인력 배치 : (기존) 연2회 중점모니터링 → (변경)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글로벌 SNS 내 조건만남 등 개인 간 성매매 유인 정보 및 성매매 업소 및 유사 성매매 업소 홍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 및 해당 SNS 사업자의 원 정보 삭제 등 '시정요청' 병행
- URL 변경 성매매 사이트 관리목록 작성 및 매주 변동여부 파악을 통해 즉시 심의상정 및 시정요구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랜덤채팅앱 전담 모니터링요원 배치
2/4분기	성매매 정보 모니터링 단체 대상 업무협약 및 모니터링 실무 교육
3/4분기	SNS를 통한 개인 간 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 실시
4/4분기	URL 변경 성매매 사이트 심의실적 자체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랜덤채팅 시정요구 실적	6,816건	6,517건	7,423건	7,611건	최근 3년 간 평균 실적 대비 10% 증가
○ 성과목표치 산식 : $\frac{6,816+6,517+7,423}{3} \times 1.1$					

□ 기대효과

- 특정 기간 동안의 집중 단속에서 전담인력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전환하여 랜덤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제단 이용자 발견 시 신속하고 상시적인 ‘이용해지’ 결정 가능
-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다양화함으로써 타 플랫폼으로 이전되는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성매매 정보 유통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응 가능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랜덤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실시 및 관계기관 협력 확대
- SNS를 통한 성매매 정보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심의 지속 실시

담당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	담당자	김준희 차장	전화번호	02)3219-5842
------	---------------------	-----	--------	------	--------------

1-4-2-①

1인 가구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범죄 불안요인 발굴 및 성범죄 등 여성대상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초기대응으로 강력범죄화 차단, 범죄 불안감 해소

□ 그간의 추진실적

-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월)에 기반하여 엄정한 범집행 및 초기대응 강화
 - 종전 경범죄에 불과했던 반복·지속적 '주거 접근하기',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등에 대해 법 제정·시행으로 엄정 대응 기반 마련
 - * 가·피해자 분리를 위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신고 초기 보호조치 적극 실시
- 시기·대상별 성범죄 예방활동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 발굴
 - 신학기 초·중·고교 주변 및 대학 내·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자체·학교 등과 합동 홍보·교육 및 피서지 등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 2023년도 시행계획

- (취약요인 진단) 범죄예방진단팀(CPO) 및 범죄예측·분석시스템(Pre-CAS) 적극 활용, 원룸촌·대학가 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치안환경 진단·분석
 - 취약요소·구역에 대해 지자체 협업을 통한 CCTV 등 방범시설 확충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주거침입·성범죄로부터 안심환경 조성
- (불법촬영 예방) 일상 속 불안감이 높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탐지 장비 성능개발·확충 및 지자체·민간과 합동 점검, 관련 조례개정 확대 등
- (신고·보호지원 활성화) 성범죄 피해 신고·상담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발한 비대면 상담 '챗봇'을 행안부 '국민비서'와 연계 추진, 이용자 확대
 -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 등 범죄 '피해자 권리 안내서' 정비,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다국어용 안내서 제작
- 예산 현황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성폭력 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 감소	17,780	16,221	18,847	전 년 대 비 5.5% 감소	범죄발생원표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김지윤 경위	전화번호	02-3150-0904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교육 강화
 - 장애인 학대 신고현황 등을 활용하여 실태 파악 및 예방 강화
- (추진체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 지역 18개)
 - * '22년 하반기 총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추가설치 추진
- (주요 내용) 여성장애인의 학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학대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교육 강화
 - * 학대피해장애인 중 여성장애인 비율 49.9%(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그간의 추진실적

- 장애인 학대·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 실적
 - '21년도 학대·성범죄 예방교육 842회 20,648명* 지원
 - * 전년 대비 교육횟수 기준 21.3%, 교육인원 기준 +12.5% 증가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장애인학대현황을 통해 파악한 피해 실태를 바탕으로 여성발달장애인의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 *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 74.1%(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추진 내용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2/4분기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상반기 실적 점검
3/4분기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4/4분기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연간 실적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367	4,062	4,274	△ 93	△ 2.1%
국비	4,367	4,062	4,274	△ 93	△ 2.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학대 예방 교육 목표 대비 실시율 (%)	103% (당초 목표치 832회 대비 842회)	'23.상반기 중 취합예정	100% (850회) *인원 21,680명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실시 학대· 성범죄 예방 교육 목표치 및 실시 근거
○ 성과목표치 산식 : 예방 교육 실시건수/목표건수 X 100	*인원 20,648명			

☐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의 학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학대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기여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확대 실시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학대·성범죄 예방 및 인권보장 강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최기전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3301
------	-------------------	-----	------------	------	--------------

1-4-3-②

장애인거주시설 폭력예방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 (추진체계)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및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 (주요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를 통해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인권교육 실시
 - 집합교육 및 광역시·도 주관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11회)

□ 2023년도 시행계획

- 매년 실시하는 인권지킴이지원센터의 시설장·사무국장 인권침해예방교육 및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시 여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거주시설 자체적으로 종사자 연 2회(8시간 이상) 및 이용자 연 1회(4시간 이상) 인권교육 실시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여 모니터링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장애인단체 지원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100	100	100	-	-
국비	100	100	100	-	-

○ 성과지표

(단위 : 명)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인권교육 참여자수	1,289명 (온라인)	1,554명 (온라인)	1,801명 (온라인)	1,500명 (온·오프라인 병행)	* 인권지킴이 지원센터 교육 목표치 근거(인권지 킴이 지원센 터 추진)

※ '23년 교육방식 변경(온라인→오프라인 중심) 으로 생길 수용인원 제약 등 고려하여 목표치 산정

□ 기대효과

- 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도모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침해 여부 등 모니터링 지속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윤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309
------	-------------------	-----	------------	------	--------------

1-4-3-③
1-4-3-④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권익보호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 특화 상담소·보호시설 확대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관련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예산 편성 및 배정) → 시·도, 시·군·구(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관리)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피해자 지원, 정산 보고 등)
- (주요내용)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23개소)·보호시설(7개소)·자립지원시설(3개소) 운영지원, 장애인 가정폭력 상담소(4개소)·보호시설(2개소) 운영지원, 신규 국비지원 기관 컨설팅 및 종사자 슈퍼비전 등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연중)
 - (상담소) 중증장애인 상담편의 확충*, 일반 상담소 인력(소장 1명, 상담원 3명) 외에 추가로 상담지원 인력(1명)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확대
 -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담원의 방문상담, 수화통역인(청각장애인) 지원 가능
 - (보호시설)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장애인용 통행로, 승강기, 화장실, 침실 등 편의시설*의 구축, 인건비**·교통비 등 추가 지원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 일반 보호시설 인력(시설장 1명, 상담원 2-3명, 보조원 1명) 외 상담원(1-2명) 추가 배치

- 신규 국비지원 기관 컨설팅, 관련 종사자 슈퍼비전 실시(연중)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연중)
- 신규 국비지원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슈퍼비전 실시(계속)

○ 추진 내용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23개소), 보호시설(7개소), 자립지원시설(3개소) 운영지원
-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연중)

○ 추진 방법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및 운영 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교부(1/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속)
2/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교부(2/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속)
3/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교부(3/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속)
4/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교부(4/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36,176	35,787	39,199	3,023	8.3
○성폭력 피해자 지원	36,172	35,511	37,537	1,365	3.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846	14,846	14,233	△613	4.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 지원 실적(천건)	224	240	234 (추정치)	240 (최근 3년간 평균 값(232.7)에 3년간 증감률평균(3.1%)을 곱한 값)	상담소의 성폭력 상담건수와 보호시설 심리지원 실적의 합계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지원 실적(천건)	306	317	335 (추정치)	345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건수와 보호시설 심리지원 실적의 합계 (전년대비 3% 증가)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시설 접근성 강화 및 시설의 추가인력 확충으로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지속(연중)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서진희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6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김옥희 사무관		02)2100-6425

□ 과제개요

-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시 직장 내 성희롱 여부 집중 점검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20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140건으로 성희롱예방교육 93건, 교육자료 미게시 26건, 사업주교육 미실시 20건,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미조치 1건 적발
* 시정지시 139건, 과태료 1건 조치
- (**'21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670건으로 성희롱예방교육 360건, 교육자료 미게시 308건,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미조치 2건 적발
* 시정지시 670건
- (**'22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615건으로 성희롱예방교육 355건, 교육자료 미게시 250건, 사업주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0건 적발
* 시정지시 615건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 외국인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및 성희롱 예방교육 취약의심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 추진 내용

- '23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000여 개 고용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이행 여부 등 중점 점검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징계조치 여부, 피해자 불이익조치 여부 등

○ 추진 방법

- 점검 시 통역원을 대동하여 사업주와 분리된 상태에서 외국인근로자 직접 면담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 근로감독관과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사법 조치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 수립
2/4분기	상반기 지도점검 추진
3/4분기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 수립
4/4분기	하반기 지도점검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외국인고용사업장 점검(개소)	1,502	2,310	3,021	3,000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장 점검 결과
○ 성과목표치 산식: 150(명)×20(개소)					

*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점검수행 3,000개소에서 축소 조정

☐ 기대효과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익 보장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하고 성차별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매년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000여 개소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녀 고용평등법 등에 대한 지도점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이상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7148
------	------------------	-----	---------	------	---------------

□ 과제개요

- (추진배경)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고,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을 위해 국민 대상 인식 개선 및 이주여성 대상 지원 홍보 강화 필요
- (사업목적)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없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7(가정폭력 추방주건)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5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주요내용)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송출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홍보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홍보영상 송출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연중)
 - * 유튜브, tv(방송) 광고 영상 송출, ('22.12월)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 * 유튜브, 카카오(인터넷), tv(방송) 광고 영상 송출, ('21.12월)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추진 내용
 - 이주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해 일반국민 대상 이주여성인식 개선 홍보(연중)
 - 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등 홍보 강화(연중)

○ 추진 방법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및 송출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추진(연중)
2/4분기	-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추진(연중)
3/4분기	-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추진(연중)
4/4분기	-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추진(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7,548	7,548	7,760	212	2.8
국비	7,548	7,548	7,760	212	2.8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이주여성 홍보영상 송출 건수	-	2건	2건	2건	성과보고서
○ 송출 건수					

□ 기대효과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홍보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한송이 사무관 현승환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4 02)2100-6428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이주배경에 따른 언어적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성폭력 피해 신고가 어려운 이주여성에게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 주요 내용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활용하여 예방교육 강화
 - * '18년 법무부 연구용역으로 내·외국인 대상 유형별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언어별로 개발(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법무부-경찰청 협업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민자에게 성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특강 실시
 - ※ 경찰청 범죄예방교육 전문강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실제 성폭력 등 범죄사례와 함께 예방교육 특강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기본,심화) 동영상을 개발하여, 이주여성의 직장 성희롱예방교육 및 모성보호 교육 등에 활용

□ 그간의 추진실적

- '18. 5월 경찰청과의 협업으로 범죄예방교육 시행(매년 실시)
 - ※ '20년 200명, '21년 1,316명 참여
- '18. 12월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개발 완료
- '19. 1월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예방교육 동영상 배포
- '19. 5월 유튜브에 예방교육 동영상 게시 및 공유
- '21. 11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기본,심화) 동영상 개발 완료
- '22. 11월 유학생용 교육교재 개편하여 성폭력 피해발생 대응방법 등 내용 보강 완료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국내 체류 이주여성 등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범죄예방교육 실시
- 조기적응프로그램 기초법·질서 교육에 성범죄,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 추진 내용

- 동영상을 활용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지속
- 범죄예방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으로 운영
- 한국사회이해(기본, 심화) 동영상을 활용한 이주여성 대상 범죄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교육 시행
-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교재 개편 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보강

○ 추진 방법

- 전국 사회통합교육 운영기관에서 교육 시행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연중 상시	사회통합프로그램 범죄예방 교육 운영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성과지표명: 사회통합프로그램 범죄 예방교육	200	1,316	1,970	2,167	전년도 대비 10% 상승
성과목표산식: 범죄예방교육참여자수(명)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교육 참여 급감 후 '21년 비대면 교육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전년도 대비 참여자 수를 정상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22년에도 비대면 교육을 통해 교육 실적을 현저히 제고하여 더 이상의 실적 증가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기대효과

- 이주 여성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 범죄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언어문제, 정보부족 등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 최소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범죄예방교육 지속 실시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자	전강섭 사무관	전화번호	02) 2110-4146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속성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가정 형성 지원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실시
 - * 고시 국가 이외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도 교육 신청 가능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 소개, 결혼이민 사증발급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책 안내, 사례 및 경험담 소개, 인권교육(부부간 인권 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 등 4개 과정으로 구성

□ 그간의 추진실적

- '10. 10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범 실시
- '11. 3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고시 국가)
- '18. 3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과정 확대(인권교육 추가)
- '20. 7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주말 교육 시범 실시
- '21. 2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교육 선택 실시
- '21. 12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2개국(중국·베트남) 교재 전면 수정
- '22. 3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공통교재 및 5개국(필리핀·캄보디아·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교재 전면 수정
- '22. 4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면 교육 전면 재개(비대면 교육 선택 가능)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 운영

○ 추진 내용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실시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월 2회 실시
- 만족도 조사 : 교육참여자 대상 설문실시, 교육만족도 조사

○ 추진 방법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시행
- 추진절차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일정에 맞게 교육일정 공지(월 2회)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교육 신청
→ 교육 참여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월 2회	월 2회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사회통합이수제운영					
국비	265	162(10월 현재)	265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만족도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 참여자 만족도(%)	80.9%	78.7%	81.5%	75%	교육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는 많지 않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교양교육 만족도, 개인정서,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손복은·손한결, 경기대학교, 교육문화연구 제27권 제4호, 2021년)에 따르면 교양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교수자 만족도 3.90(78.0), 수업만족도 3.55(71.0), 교재 만족도 3.53(70.6)으로 이보다 상향한 수업만족도를 목표치로 설정

※ '외국인 유학생의 교양교육 만족도, 개인정서,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손복은·손한결, 경기대학교, 교육문화연구 제27권 제4호, 2021년)에 제시된 교양교육 수업 만족도(71.0), 교재만족도(70.6)보다 상향한 목표치 설정

□ 기대효과

-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에 기여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사업의 지속 운영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자	김은호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144
------	-----------	-----	--------	------	--------------

□ 과제개요

- 이주여성은 여성이자 외국인이라는 이중적 취약점으로 범죄노출 위험이 크고 범죄신고 및 피해회복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음
 - 이주여성이 쉽게 노출되는 범죄 유형에 대해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방법 등을 교육해 국내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 법무부·여가부·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결혼이주여성·근로이주여성·유학생·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이주여성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제공하여 국내 법질서를 확립하고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
 - 이주여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타부처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교육과정에 경찰관이 출강하여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
 - * '22년 법무부·여가부·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체류외국인 36,871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이주여성 관련 유관기관에 「외국인 범죄예방 가이드」 배포하고 각종 범죄예방 카드뉴스 및 교육자료를 SNS상 이주여성 커뮤니티에 배포

□ 2023년도 시행계획

- 이주여성 체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
 - △결혼이주여성 △근로이주여성 △유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등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

구 분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내용
결혼이주자	기초질서 및 안전교육, 가정폭력·성폭력 대응방안 등
외국인 근로자	기초질서 및 안전교육, 성범죄 예방, 근로법 등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어, 성범죄·학교폭력(피해) 예방법 등

- 이주여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의 내부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외국인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예방 교육 실시
 - 성폭력·가정폭력 외에도 이주여성이 노출되기 쉬운 범죄 및 범죄신고 방법을 교육
 - 치안환경 요소에 유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대면 교육외에도 SNS·라디오·문자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방식의 범죄예방교육을 시행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중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외사경찰 활동	138	138	138	0	0
- 체류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138	138	138	0	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다문화치안활동 [\sum 활동별(가중치×수혜자수) / 시도경찰청 체류외국인 × 100]	4.8	4.92	5.04	5.16	외사경찰활동 실적DB 산출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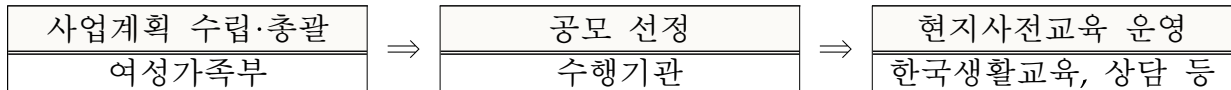
- 이주여성의 국내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안전한 다문화사회 분위기 조성

담당부서	경찰청 외사기획정보과	담당자	석예진 경장	전화번호	02-3150-1639
------	----------------	-----	--------	------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정착 지원
- (주요내용) 결혼이민자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교육(베트남, 필리핀, 태국)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가별 현황		
		베트남	필리핀	태국
2020	2,061	1,714	246	101
2021	866	330	266	270
2022.10월	1,895	1,259	253	383

- 결혼이민예정자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 전화, 방문, 온라인(전자우편) 등을 통해 1:1 방식 운영
 - * ('20년) 1,051명 → ('21년) 419명 → ('22년 10월) 1,066명

□ 2023년도 시행계획

- 중점 추진사항
 - 젠더폭력 예방 등 교육 내용에 대한 성인지 강화
 - 코로나19 상황 호전에 따른 참여자 확대 추진
- 추진 내용 및 방법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 사전교육
 - 결혼이민예정자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사업계획 수립(젠더폭력 예방 포함)
2/4분기	- 현지사전교육 상시교육 추진 및 분기별 성과점검
3/4분기	- 현지사전교육 상시교육 추진 및 분기별 성과점검
4/4분기	- 현지사전교육 상시교육 성과평가 등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375	375	375	0	0
국비	375	375	375	0	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현지사전교육 참여인원	2,061	866	2,717	2,852명	'23년 실적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3년간 (‘20~’22년) 평균치					
* (‘20)2,061+(‘21)866+(‘22)2,000’3=000명					

* '21년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여 국제결혼 감소에 따라 결혼이민예정자 대상의 현지사전교육 인원 감소

☐ 기대효과

○ 현지사전교육 참여대상자 확대 추진 및 교육 접근성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현지사전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현지국과의 협력 추진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전병길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370
------	-----------------	-----	------------	------	---------------

법무부 체류관리과

□ 과제개요

- 외국인 유흥업소에서 예술홍행(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 알선,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실태 파악
 -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관계법령 위반 여부 확인
 - * 여성가족부(주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체부, 영등위 및 지자체 참여

□ 그간의 추진실적

- ('14~'19년) 매년 2회(상·하반기)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
- ('20~'21년) 코로나19로 미 실시
- ('22년 下)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9월)

□ 2023년도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 주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 기관 합동 점검 참여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종사 외국인(E-6)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 유무 등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상반기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하반기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0	0	1	2	공문

□ 기대효과

-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조치 등에 기여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 주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 기관 합동 점검 지속 참여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자	박지원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068
------	-----------	-----	------------	------	--------------

1-4-5-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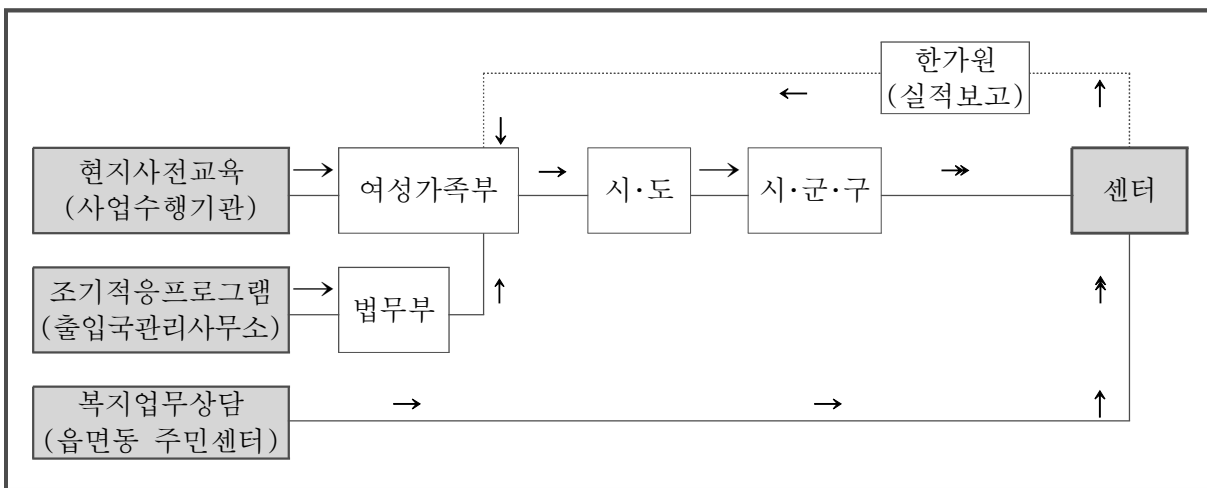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정보 접근성 확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과제개요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수료자 대상 입국 전·후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한국어교육, 상담,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한 정보 접근성 확대
- 폭력피해 발생시 가족센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

<개인정보제공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개인정보 제공(국적, 연락처, 거주예정지) 동의를 통한 가족센터 입국 전 연계
- * '22.10월말 기준 1,680명 연계 추진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결혼이민예정자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
 - 정보연계 대상자 대상 필요시 추가 교육(온라인) 진행
- 추진 내용 및 방법
 - 결혼이민예정자 정보연계 동의 및 가족센터 연계(연중)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가족센터 연계 추진(상시)
2/4분기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가족센터 연계 추진(상시)
3/4분기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가족센터 연계 추진(상시)
4/4분기	- 정보연계 포함 사업 성과평가 등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정보연계 동의율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대상자 대비 가족센터 정보연계 동의율 * '20~'22년 정보제공 동의율 평균	94.5	88.5	88.6	90.5	결과보고서

☐ 기대효과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공적 인프라 접근성 확대를 통한 폭력예방 강화
- 결혼이민자 한국정착 후 고충 상담 및 정보교류 확대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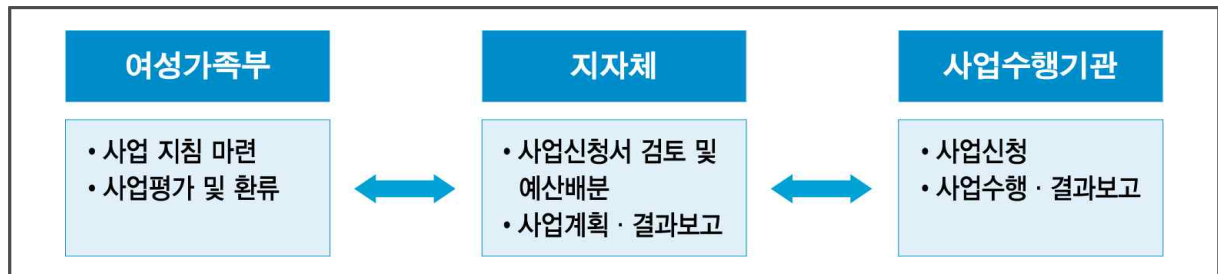
- 가족센터 연계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 추진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전병길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370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및 제6조(상담소의 업무)
- (사업내용)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해 상담지원, 의료·통·번역 지원, 고용·체류에 관한 상담,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 연계 지원 등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이주여성 상담소(9개소)를 운영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서비스 등 제공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게 상담·보호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 추진 내용
 - 국비지원 상담소를 통해 상담지원, 의료·통·번역 지원, 고용·체류에 관한 상담,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 연계 서비스 지원

○ 추진 방법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연중)
2/4분기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연중) - 이주여성 상담소 현장점검(5~8월)
3/4분기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연중)
4/4분기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7,548	7,548	7,760	212	2.8
국비	7,548	7,548	7,760	212	2.8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이주여성상담소 피해자 지원건수	9,358	25,676	33,608	30,531	'21~'22년 실적 평균에 3% 상향조정

□ 기대효과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을 통해 외국인 여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9개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한송이 사무관 현승환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4 02)2100-6428
------	----------------	-----	--------------------	------	------------------------------

□ 과제개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언어로 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18.4.11, 여성 외국인근로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마련
 - * 외국인근로자도 우리부 홈페이지의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하도록 외국어 버전 운영
- '18.10.15,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영어 외 동티모르 등 16개국* 외국어 버전 제공
 - * 영어,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동티모르, 라오스,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크, 방글라데시아, 중국, 스리랑카, 몽골, 태국, 필리핀, 미얀마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홍보 강화
 - 폭행 및 성희롱 피해 전담 상담서비스 운영 활성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입국 후 취업교육 시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및 익명신고센터 운영 교육 포함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외국인근로자 대상 안내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홍보
 - 폭행 및 성희롱 피해 외국인근로자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심층상담실 운영 및 전담자 지정(거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9개소)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신규 및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교육
2/4분기	신규 및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교육
3/4분기	신규 및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교육
4/4분기	신규 및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교육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명)	3,854	6,885	71,249	도입인원 전체	도입인원
○ 성과목표치 산식: 입국인원					

* 코로나19로 '20년 3월 이후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 중단 및 소규모 입국

☐ 기대효과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

- 외국인근로자가 성희롱 등 성폭력에 대한 사전 대처방법, 사후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인지하여 신속히 구제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및 성희롱 교육을 지속 추진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 운영 안내 지속 추진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이상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7148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기관별로 '인권·고충상담관'을 지정하고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관내 체류외국인의 국내 체류 지원과 권익보호

* 필요시 유관기관 등에 피해구제 지원, 행정서비스를 위한 협조 및 연계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2008년 이후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지정, 운영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재)지정, 운영

○ 추진 내용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관내 체류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상담 및 체류 지원 실시
-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재)지정, 운영

○ 추진 방법

-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으로 별도 지정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6급 또는 7급 출입국관리공무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23년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재)지정
2/4분기	전국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 제도 상시 운영
3/4분기	전국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 제도 상시 운영
4/4분기	전국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 제도 상시 운영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성과지표명 : 인권·고충 상담관 지정	18	18	19	19	지정현황 통계 등

☐ 기대효과

-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인권고충상담관 및 상담창구를 별도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국내 체류외국인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 체류 지원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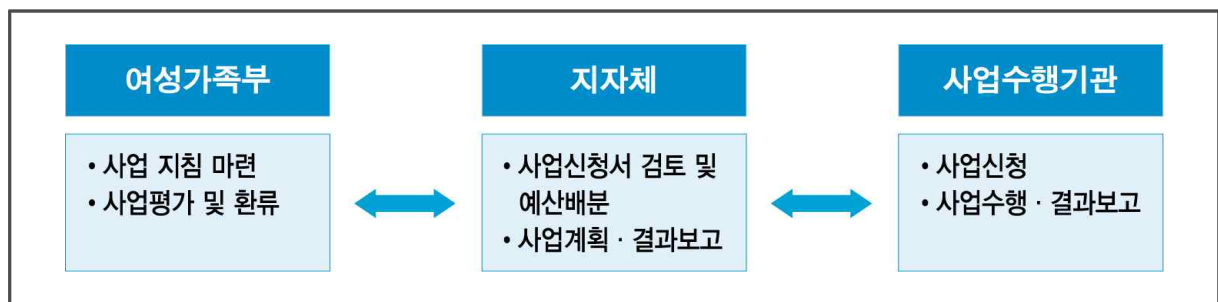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지정, 운영
 - 관내 체류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장 및 체류지원 활성화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자	김은호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144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에 대한 모국어 상담, 일시보호,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한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28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일시보호, 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의료·법률지원 등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4개소, 서울2, 인천1, 충남1)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1개소, 서울)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직업기술 교육 훈련, 취업알선, 동반자녀 보육지원 등
-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조성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500만원)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10개소)
 -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제공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 및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 종합형 서비스 지원

○ 추진 내용

- (보호시설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확대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만족도 조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지원 내실화를 위한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개선 추진

* 하나센터, 지자체, 젠더폭력 지원 시설 등과의 연계 강화

○ 추진 방법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예산 교부(매분기별)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연중)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지원(연중)
2/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연중) - 폭력피해 이주여성 관련 지원 시설 현장점검(5~8월)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지원(연중)
3/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연중)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지원(연중)
4/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연중)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7,548	7,548	7,760	212	2.8
국비	7,548	7,548	7,760	212	2.8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상담소 지원 실적(건)	87,577	114,494	125,102	123,392	'21~'22년 실적 평균에 3% 상향조정

☐ 기대효과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외국인 여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한송이 사무관 현승환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4 02)2100-6428
------	----------------	-----	--------------------	------	------------------------------

□ 과제개요

-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18.5월 「긴급 사업장 변경 대상 성폭행 범위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실시 및 법률자문 등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기 안산해바라기센터 관계자 등

- '19.2.1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사업장 변경 고시 개정)

- '21.4.1 긴급 사업장 변경 대상 및 가해자 범위 확대

* 가해자의 범위 확대: 사용자 →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긴급 사업장 변경신청 시 신속히 검토하여 피해 근로자 적극보호

- 추진 내용 및 방법

- 사용자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사업장 변경신청 시 즉시 사실관계 확인 후 신속히 사업장 변경 조치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사업장변경 신청시 즉시 조치
2/4분기	사업장변경 신청시 즉시 조치
3/4분기	사업장변경 신청시 즉시 조치
4/4분기	사업장변경 신청시 즉시 조치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긴급사업장변경 조치(%)	100(1건) (3일 이내 조치 완료)	100(3건) (3일 이내 조치 완료)	100(1건) (3일 이내 조치 완료)	100 (3일 이내 조치 완료)	기본적인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우선 긴급 사업장 변경 조치 여부
○ 성과목표치 산식: 3일 이내 조치					

☐ 기대효과

○ 성폭행 피해 외국인근로자 신속한 구제

- 성폭행을 당한 외국인근로자를 가해자와 신속히 분리 보호하고 신속히
사업장변경 조치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폭행을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요청 시 조속히 조사하여
사업장 변경 조치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이상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148
------	------------------	-----	---------	------	--------------

□ 과제개요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 마련·보완
- 여성폭력 사건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학대예방경찰관 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지속 추진('19. 6月~)
 - 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18. 11月)의 일환으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유형별·단계별 표준 대응방안 전국 시행

< 단계별 대응모델 주요 내용 >

① 초동조치	△ 범죄혐의와 객관적 위험성 토대로 적극적 사건처리·긴급임시조치 △ 피해자 응급조치, 전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철저 △ 긴급임시조치 활성화를 위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기준 개선
② 엄정대응	△ 세밀한 수사로 상습성 규명, 입건 및 구속여부 검토 철저 △ 임시조치, 피해자(임시)보호명령 적극 추진 등 △ 피해자가 처벌 불원할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
③ 사후관리	△ 가해자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상담 등 경찰·지자체 중심 다기관 협업체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후관리 강화 △ 실효성 있는 현장 법집행력 확보를 위한 法 개정 추진

- 개정 「가정폭력처벌법」('21.1.21. 시행)을 반영하여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가정폭력 수사 매뉴얼」 정비 등 적극적 대응 기조 유지
- 자치경찰제에 맞추어 △ 연구논문 △ 해외사례 △ 시·도별 우수시책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집 작성·배포('22. 1月)

○ 수사·예방활동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강화

- 업무량 증가에 따른 학대예방경찰관 정원 확대('13년 138명 → '22년 671명)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 △술 경찰관 대상 성평등 감수성 향상교육(年 1회 이상) △최신 법률·사례 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과정 평가·모니터링 등 실시
- APO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맞춤형 상담기법 △힐링프로그램 등 내용으로 전문 위탁교육 과정 신설(동국대 산학협력단, '22. 6~8월)

○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예산·장비 등 확충으로 업무 추진기반 조성

- △APO 업무추진비 △APO 위탁교육사업비 △여청기능 내근(APO) 차량 신규 확보 등 원활한 현장 업무수행 지원
- APO 시스템 개선으로 내·외부 협업 인프라 확대 등 대응체계 고도화

□ 2023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신속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지속 추진

•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구조 개선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

○ APO 업무 연속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장비 등 인프라 확대

- APO 업무관리시스템 지속 고도화를 통해 업무 편의성·효율성 향상
-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전문인력 확보 위해 '23년 APO 경력경쟁채용* 계획 수립
- APO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과정 운영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가정폭력 관련 매뉴얼·지침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정비
2/4분기	- APO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3/4분기	- 관계부처 협업,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4/4분기	- 「24년 정책참고자료집」 작성 및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가정폭력 사건대응점수 (현장대응점수 + 사후조치점수) / 가정폭력 신고건수 × 100	41.8%	44.6%	50.6%	50.8%	시스템 및 수기 취합

☐ 기대효과

○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 체계에 대한 세밀한 정비로 실효적인 법 집행 및 피해자 보호 도모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 대응 체계 지속 고도화 및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오윤지 경위	전화번호	02-3150-0812
------	----------------	-----	--------	------	--------------

□ 과제개요

- 현장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재범위험성 조사표(조사항목, 후속 조치기준 등) 개발·활용
- 가정폭력 반복신고 사건 적극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마련·시행

□ 그간의 추진실적

- 「신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도입('20. 9月)으로 현장 경찰관 대상 긴급임시조치 및 사건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시
 - 기존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에 대한 신뢰도·타당도 검증('19. 6~10月) 결과, 위험성 변별력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문항 개선·보완
 - 여성단체·현장경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규 위험성 조사표 개발
 - ※ 8개 지방청(9개서) 대상 시범운영('20. 3~4月) 후, 전국 시행('20. 9月)
- 가정폭력 가·피해자 사후관리를 위해 경찰-지자체-전문기관 각 전문성에 기반하여 전국 시·도별 다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지속 추진

< * 전국 시·도별 가정폭력 다기관 협업체계 유형 >

- ① 경찰(APO)·지자체(사회복지공무원)·전문기관(상담원)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內 상시 합동근무 센터 마련 → 서울(25개 구 자치구), 경기남부(4개 구)
- ② 경찰-전문기관(1366·가정폭력상담소 등) 간 MOU를 통해 재발우려가정 사후 모니터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복지지원은 지자체에 연계하는 협업체계
- ③ 재발우려가정 사후 모니터링 시 경찰·지자체·전문기관 합동방문

□ 2023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신속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지속 추진

•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구조 개선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

○ 재발우려가정 제도 개선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폭력 재발 위험 평가척도' 개발

- △과거 사례 △관계성 △가·피해자 특성 등 고려하여 재발우려가정을 선정·관리하기 위해 연구용역 진행,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개발
 - * △(연구팀)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 등 △(연구기관) '22.5~10월 약 5개월간 △(분석 자료) 최근 3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총 213건 수사기록 등 활용
- (매뉴얼·시스템 반영) 현장 적합성·타당성 파악 위해 시범운영 실시 後 의견수렴·환류 과정을 거쳐 전국 시행, 매뉴얼 및 시스템 반영(상반기)

○ 내·외부 시스템 연계 강화 등 APO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 △대내(112·APO시스템·KICS) 및 대외(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간 정보 연계 확대 △가·피해자 정보 관리 △데이트폭력·스토킹 사건관리 기능 개선 △기타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현장대응력 제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관련 가정폭력 매뉴얼·지침 보완
2/4분기	- APO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3/4분기	- 관계부처 협업,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4/4분기	- 「24년 정책참고자료집」 작성 및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가정폭력 사건대응점수 (현장대응점수 + 사후조치점수) / 가정폭력 신고건수 × 100	41.8%	44.6%	50.6%	50.8%	시스템 및 수기 취합 통계

☐ 기대효과

-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 체계에 대한 세밀한 정비로 실효적인 법 집행 및 피해자 보호 도모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 대응 체계 지속 고도화 및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오윤지 경위	전화번호	02-3150-0812
------	----------------	-----	--------	------	--------------

□ 과제개요

-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톱킹 및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피의자 엄정처벌·피해자 보호 강화로 국민 불안해소 및 경찰 신뢰도 제고
- 「데이트폭력 현장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계획」, 「반복신고 대응 강화 및 신속·집중수사」 내실화·고도화로 데이트폭력 엄정 대응

□ 그간의 추진실적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대응체계 구축
 - (법 시행 前 스톱킹범죄 대응 강화방안 수립·시행) 신고·현장조치·수사·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단계별 지침을 세밀하게 정비하여 법 시행(21.10.21.)까지 공백없는 스톱킹행위자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
 - ※ △ 행위유형별 적용 법규 명확화 △ 기능별 담당 업무 세분화 △ 스톱킹 대응 TF 등
 - (스토킹 대응 매뉴얼·지침 등 수립) 법 제정 후속조치 TF를 구성, 초동조치-수사-피해자 보호·지원 등 전 과정을 담은 「스토킹 대응 매뉴얼」 및 현장경찰관을 위한 포켓용 가이드북·요약본을 마련, 배포

아울러, 현장의 법률 해석·적용 및 절차상 과오를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4호 집행·석방시 유의사항’ 등 수사지침(18) 수립·교육
 - (스토킹 판례, 잠정조치 4호 및 구속영장 사례 분석) 스톱킹처벌법 위반 주요 행위태양별 판례를 분석하고, 가·피해자 분리 등 실효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4호(유치) 및 구속영장 사례를 정리, 수사력 제고
 - (현장 대응역량 강화) 법률 시행 초기 긴급응급·잠정조치 등 절차상 완결성을 담보하고, 법률 적용·해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본청(여성범죄수사과) 24시간 헬프데스크, 역량강화 전문성 교육

- (警↔檢 스토킹범죄 대응 협력 강화)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警-檢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구축하고, 全 18개 시도청 -지검·지청도 후속 실무협의회 실시(258개署-지검·지청 신속연락체계 구축)

- ▶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①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경·검간 유기적 협력下 피해자에 대한 危害 우려가 높은 스토킹사범은 원칙적 구속 기소 및 적정 양형 추진 ②스토킹 사범 범죄 이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요소를 철저히 수집해 구형·선고에 적극 반영 ③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이 협박, 강요나 또다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원 사건과 별개로 추가 수사 진행·엄단
- ▶ (피해자 보호 조치 철저) ①집착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危害 개연성이 있는 고 위험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유치) 내지 구속수사 등으로 집중 대응 ②경·검간 스토킹사범의 위험성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가·피해자 분리 내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적시 조치

또한,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 불송치·불인건결정 스토킹사건 총 7,284건을 전수점검해 잠정조치(유치)·구속영장 기각에도 여죄(스토킹) 인지 및 위험성을 구증하여 구속하는 우수사례를 확인

[주요 수사 및 조치사례]

- ▶ (구속 및 잠정조치 적극 검토) 법원에서 잠정조치(유치)·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음에도 여죄(스토킹) 인지 및 위험성 판단하여 잠정조치(유치)·구속영장 재신청, 구속영장 발부
- ▶ (신속·집중 수사) 도주 피의자의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재범(스토킹) 할 것을 예상, 피해자 주거지에서 잠복 中 재차 피해자를 찾아온 피의자 긴급체포·구속
- ▶ (피해자지원) 스토킹 피의자(이웃 주민)가 구속 송치된 후에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 LH와 협업으로 주거지 이전(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 내부 수리 포함) 지원

○ 데이트폭력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출동 등 사전초기 관리) 데이트폭력 사건이 사무분장 등에 따라 여청 수사 출동 대상인 경우 신속 출동하고 미출동 사건은 코칭 등 적극 관리
- (반복신고 엄단 및 신속·집중수사 확행) [반복신고 대응 강화] 반복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과거이력, 범죄경력 등 재범 위험성 면밀 검토·대응 [신속·집중수사] 흉기 휴대 등 사안이 중하거나 과거이력 다수 사건은 '신속·집중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한 초기수사로 위험성 판단 등 진행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 체계화) 현장출동 경찰관은 범행 내용 및 이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주변인(가족 등)에게 안전조치를 충분히 설명, 적극 실시

□ 2023년도 시행계획

○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관련 경찰 대응시스템 확충

-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관련 소관 업무량 등 치안수요 급증 대비 인력·예산·장비 등 확충 추진
※(案) 스토킹전담수사관 600명, 스토킹수사 임차차량 약 4억원 등

○ 여청수사-여청강력팀 사무분장 정립 등 수사체계 재편

- 성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담당하는 여청수사팀과 피의자 불상 성폭력범죄 사건부터 신속·집중수사 지정件까지 담당하는 여청강력팀 간 사무분장 재정립 등 수사·행정력 정비해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강화

○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가해자 관리 및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하력이 크고 피해자 보호에 실효적인 잠정 조치 4호(유치장등 유치), 구속영장 청구 등 강도 높은 현장조치 실시
- △인공지능 CCTV △고성능 스마트워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호수단 도입·확대로 보호체계를 고도화하고 위급상황 시 대응 역량을 제고

○ (신규) 美 공군범죄수사대(OSI) 업무 협조체계 구축

- 주한 美 공군범죄수사대(OSI)* 소속 가해자와 한국인 피해자 간 스토킹·성폭력범죄 발생時 신속한 피의자 출석·조사 등을 담보하고, 가해자 내부 징계 결과 공유 등을 위해 美 공군범죄수사대와 업무협조체계 구축

* 美 공군 연방특수수사국(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 (개요) 美 공군 內 범죄수사와 정부수집(방첩활동)을 위해 1948년 버지니아주 관티코(Quantico)市를 본부로 두고 전 세계 290개 지부, 2,000명 요원으로 운영
- (한국) [본부] 오산 공군기지 [지역] 서울, 대구, 군산, 부산

○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정기 사례공유 회의

- 全 시도청·경찰서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우수·미흡 수사 사례 공유 위한 정기 화상회의 개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법률 제·개정 관련 소요정원 등 중기인력·사업예산 추진 -지역·죄종별 치안수요 확인, 여청수사·여청강력팀 사무분장案 마련
2/4분기	-현장지도방문 등 통한 여청수사·여청강력 사무분장안 정립 -美 공군범죄수사대 업무협약서 등 협조체계 구축
3/4분기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면 간담회·사례공유 회의
4/4분기	-美 공군범죄수사대 업무협조체계 구축 결과 분석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체계 개편방향 도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	-	-	매뉴얼 (사례집) 발간	사건보고서

☐ 기대효과

- 스톱킹·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두터운 피해자 보호로 국민 불안감 해소

☐ 기타 사항

- 스톱킹처벌법 시행 대비 경찰청 및 일선 업무량 증가에도, 전담수사관 등 인력은 증원되지 않아 기존 성·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체계 업무량은 한계 상황인 만큼, 인프라 확충 절실

※ 스톱킹 신고건수: 198.7% ↑ (8,163→24,386건)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담당자	김재영 경감	전화번호	02-3150-2878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시, 이러한 고소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어 피해 진술을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를 발생** 시킴
- 이에 피해자가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20. 2., 9.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20. 6.,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0. 11.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사건 고소인(고발인) 통지시스템 개선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 관련시스템 개선
- '20. 연중.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 통지 및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KICS 수사결정시스템 등 구축 중
- '20.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제17282호, 2020. 11. 20. 시행)으로 인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실시
- '20. 11. 2020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2., 7.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21. 3.,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1. 7~.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21. 8. 디지털성범죄 관련 우수 피해자보호 사례 전파 및 피해자보호조치 적극 활용 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우수 사례 전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검찰 핫라인 구축 및 적극 활용 지시
- '21. 1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응 TF' 구성·운영
- '21. 1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보고
 -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등 서식 개정, 성폭력 피해자 조사 중 유의사항 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제도 추가
- '21. 12. 2021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12.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시달
 - 헌법재판소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 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 이에 따라 일선 청에 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달

○ '21. 12.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책자 배포

-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일선 청 송부

※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용 포함

○ '22. 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사경 협력 강화, 신속·엄정 대응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보복·회유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 송치 전 범죄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소통·협력하여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신변 등 사건 수사에 있어 관련 매뉴얼 및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관련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

○ '22. 1.~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TF」 구성 및 운영

- 장애인,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전담검사·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집 제작을 위한 TF 구성

○ '22. 2., 7.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22. 2. 스토킹·성폭력 등 강력범죄 관련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 사경신청 구속영장 등 사법통제를 함에 있어, 사건송치 전이라도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피해자 진술청취 등을 통해 재범 및 위해우려 등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특히 피해자가 추가 피해 우려를 호소할 경우, 영장 검토 시 가해자 접근 차단(신병처리, 안전가옥 제공, 대상자 유치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 '22. 4. 피해자지원 매뉴얼 책자 배포 및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지시

- 검찰실무에 적합한 피해자지원 매뉴얼 제정·배포
-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성폭력·학대·보복

범죄 등 강력사건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상으로 회복 시까지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신변보호, 심리상담·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지원

○ '22. 4. 성착취물 소지범 처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엄단 및 성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 삭제·유포 차단,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 등 피해자지원 적극 실시 지시

○ '22. 8.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핫라인 협조 사항」 배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속한 피해자 연계 및 피해촬영물 제공 방법의 보안 강화를 위해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핫라인 협조 요청 사항」을 제작, 일선 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에 적극 참고

○ '22. 9. 검찰총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중 불법영상물 삭제 업무 등 피해자들에게 실효적으로 필요한 보호·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등 다각적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 '21. 1.~'22. 11.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시설 개선 리모델링 공사 완료('22. 11.말 기준, 35개 검찰청 공사 완료)

- 여성·아동 피해자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을 통해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023년도 시행계획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등 제도 활용(연중)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법정 동행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에 대한 경제·의료·법률 지원, 예술·심리치료 등 적극 실시

○ 피해자 조사 전용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추진(연중)

- 일선 검찰청의 시설 노후화 정도,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진행
-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연중)

- 신변보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변보호 대상범죄 확대 방안 지속 추진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및 출소사실 등을 통지하는 정보제공 제도 지속 및 확대 실시
- 성폭력 등 강력사건에 있어서 가명조서 및 신원관리카드 작성 실태 지속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명)	성폭력 :	성폭력:	성폭력:	24,945	전국청 수기취합
○ 성과목표치 산식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인원	22,849	25,648	26,340		

* 2023년 목표치는 '20~'22년 실적의 평균치로 산정

☐ 기대효과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등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대검찰청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 과제 개요

- 2차 피해 예방 교육 활성화를 통한 현장 경찰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피해자 권리 보장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폭력 피해자 대상 정보제공 방식 고도화·다양화

- 경찰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표준양식 마련 및 외국어 안내서 7종 제작, KICS 등재·제공('22. 8월)
- 국선변호사 선임, 가명조서 등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안내서 고도화

○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도입, 신고 및 지원기관 연계 활성화

- 신고율이 낮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 성범죄 피해자 등이 비대면 상담할 수 있는 챗봇 개발, 운영('22. 2월~)
 - ※ 성범죄 유형, 신고 방법(고소장 지원), 지원기관, 유사 판례 등 안내·제공
-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유관기관 협업 등 접근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 ▶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홍보
 - ※ QR코드·카드뉴스·리플릿·동영상 등 활용,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옥외 전광판 △버스정류장 △학교 게시판 등 게시
- ▶ 네이버·문체부 등 협업, 검색포털 노출로 인지도 제고
- ▶ 유형별 판례 보완 등 주요 콘텐츠 수시 업데이트 중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예방교육 강화

- △직장교육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활용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2023년도 시행계획

- 신학기·하계기간·장애인 시설 등 시기·대상별 성폭력 범죄 예방활동 전개로 선제적 피해발견 및 피해자 보호·지원 추진
- 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업, 성폭력 피해 지원 관련 정보 제공 추진
 - 대학 등과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 정보' 제공
 - 행안부 「국민비서」 협업, 챗봇 활용 신속한 피해 지원정보 제공
- 2차 피해 예방 관련 '안내서*' 제작, 전 직원 대상 의무교육 실시 등 2차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추진
 - *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 성폭력 관련 2차 피해 사례 분석, 유의사항·지침 제공 등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국선번호인 선임 연계	6,143	8,509	10,041	9,877	* 최근 3개년도('20~'22) 평균 연계건수(8,231건) 대비 20% 상향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송수진 경감	전화번호	02-3150-0832
------	----------------	-----	--------	------	--------------

□ 과제개요

○ 사업 목적

- 피해사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조력 및 법률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참여권 및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여 2차 피해 방지 도모

○ 추진 체계

- 피해자 국선변호사 : 법무부 (예산편성·배정, 업무지침 시달, 국선변호사 교육)
 - 각급 검찰청 (비전담변호사 수당 예산 집행, 국선변호사 지정·보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예산 집행, 국선변호사 교육)
- 진술조력인 : 법무부 (진술조력인 양성, 자격·명부 관리, 진술조력인 교육)
 - 경찰, 검찰, 법원 각 기관 (진술조력인 선정 및 활용)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상근 진술조력인 운영, 예산 집행)

○ 주요 내용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제도·실태조사 실시, 보수기준 개정 등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보호 노력
- 진술조력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피해자가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전국 권역별 해바라기 센터 10개소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4개소)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 운영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활성화

- ('20.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법률지원 조치
 - * 형사절차 법률지원 60건,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 개명·주민등록변경신청 등 민사적 보호조치 5건 등 지원
- ('20. 4.) 국선전담변호사 2명 확대, 배치(전국 21명 → 23명, 고양, 부산)
- ('20. 11.) 지원대상 확대(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21. 4.)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시행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
- ('21. 6.) 지원대상 확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장애인 지원)
 - *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 ('21. 7. ~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21. 10.)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개정, 시행
 - * 절차별 피해자 조력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지정, 기본보수 지급
- ('21. 8. ~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강화, 실시
 - * 기존 회차당 1일 5과목 8시간 → 2일 8과목 12시간 상향,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 ('22. 2.)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보완 개정, 시행
 - * 야간·휴일 증액, 합의 수행에 대한 보수규정 신설 등 일부 보완
- ('22. 4. ~ 9.)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총 12명 증원) 확대, 배치
 - * 전문성 강화 및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전담인력 총 12명 추가 확대·배치(기존 23명 → 총 35명)
- ('22. 5.)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개정, 시행
 - * 주요 내용 : 실태조사 정례화·의무화, 평가제도 도입·신설 등
- ('22. 5. ~ 8.)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편 연구용역 실시
 - * 한국여성변호사회 의뢰, 연구용역 실시·완료

- ('22. 8. ~ 10.)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실시

* 기본·심화과정 구분, '디지털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심리 이해' 등 전문강의 신설

○ 진술조력인 지원 활성화

- ('20. 3)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배치 확대 (경기해바라기센터)

- ('20.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안내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수사 초기 죄명에 무관하게 진술조력인 적극 지원 안내

- ('20. 6. ~ 11.)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선발 및 교육 실시(14명)

- ('20.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도 지원

- ('21. 3.) 상근 진술조력인 지역별 추가 배치(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1. 6. ~ 11.)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선발 및 교육 실시(15명)

- ('21. 10. ~ 11.)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실시

- ('21. 1. ~ 12.) 매월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회의 실시

- ('22. 1.) 지원대상 확대(장애인 진술조력 지원대상 확대)

*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기존 성폭력·아동학대→ 모든 장애인 대상 범죄)

- ('22. 2.) 수도권 상근 진술조력인 1인 추가 배치(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 ('22. 5.) 수도권 상근 진술조력인 1인 추가 배치(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 ('22. 6. ~ 11.)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선발 및 교육 실시(14명)

- ('22. 9.) 수도권 상근 진술조력인 1인 추가 배치 (서울경찰청 희망센터)

- ('22. 11.)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실시 (1, 2차)

* 장애인 범죄 지원대상 확대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이해' 등 신설

- ('22. 11.) 진술조력인 사후 평가 및 분석 방안 관련 연구용역 실시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뢰, 연구용역 진행 중 (12월 중 완료)

- ('22. 1. ~ 12.) 매월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회의 실시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전국 국선전담변호사 지속적 확대 및 미배치 지역 우선 배치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 진술조력인 평가 등 제도 개선 추진
- 미배치 권역별 상근 진술조력인 추가배치 확대
- 지속적인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 추진 내용

-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신규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하고, 지역별 지원 건수 및 미배치 지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치

* '23년 총 8명 증원, 신규 채용 예정

- 국선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평가제도 및 실태조사 실시, 결과 도출 후 문제점 개선
- 국선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반기별로 설문조사 및 현장 간담회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검사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명부 작성 시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함
-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진술조력인 사후 평가 및 분석 방안 마련
-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전국적으로 추가 배치하여 피해자 지원의 신속성, 효율성 도모
-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교육 대상자를 권역별 미배치 지역 및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추진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우선 배치 필요지역 선정 후 채용절차 진행, 면밀한 서류·면접심사를 통하여 고경력 우수 변호사 선별, 채용
- 대검찰청과 협업하여 대상 검찰청 선정 후 사전설문조사 및 현장 간담회 등 실태조사 실시
- 진술조력인 사후 평가 및 분석 방안 관련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 피해자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등)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진술조력인 배치 가능 여부 파악 및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별 채용 공고 시행
- 진술조력인 자문단 회의에서 신규 양성 교육대상자 채용 및 교육 시 고려사항 논의를 통해 선발기준 및 교육 진행과정 확정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국선전담변호사 신규 채용 및 배치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실시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상근 진술조력인 채용 및 배치 배치지역 현장점검
2/4분기	국선전담변호사 신규 채용 및 배치 진술조력인 신규모집 공고 및 교육대상자 선발 진술조력인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3/4분기	신규 국선전담변호사 배치지역 현장점검 실시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교육 실시(기본, 기본실무, 심층실무)
4/4분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진술조력인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자 자격 부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9,187	집행중	9,707	520	5.7
국비	9,187	집행중	9,707	520	5.7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	9,187	집행중	9,707	520	5.7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358	집행중	1,360	2	0.1
국비	1,358	집행중	1,360	2	0.1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58	집행중	1,360	2	0.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10월-		
○ 성과지표명 :성폭력 피해자 법률(진술)조력 지원건수					최근 3개년 평균 지원건수 26,821건 대비 연평균 증가율 9.1%에서 상향 설정하여 증가율 10.0% 반영, 산출
○ 성과목표치 산식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건수 및 진술조력인 지원건수 합산	24,303건	27,248건	28,913건 (예상치)	29,503건	

□ 기대효과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해소
 - 국선전담변호사·상근 진술조력인 확대 및 배치로 양질의 법률조력 서비스 제공 가능
 - 미배치 지역에 국선전담변호사·상근 진술조력인 우선 배치하여 지역별 불균형 해소 기대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진술조력인 확대 등 인력 증원 추진
 - '22년 및 '23년에 이어 지속적인 전담인력 증원 및 배치
 - * 비전담 국선변호사의 비중을 줄이고, 국선전담변호사 비중 상향 목표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 * 권역별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를 통해 지방의 진술조력 수요 대비와 신속성 확보 목표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김건수 서기관 조병기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648 02)2110-3852
------	----------------	-----	--------------------	------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과제개요

- 수사 시 피해자 권리고지·지원제도 상세 안내 및 현장매뉴얼·지침 등에 따라 불법촬영기기 및 저장매체 등 영상물 압수처리

□ 그간의 추진실적

- '20년 피해자 상담 시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수사·삭제·심리·법률·경제)를 종합한 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 지원 강화

< 안내서 주요 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수사 지원	▶ 신고 안내 ▶ 여경 조사 ▶ 가명조서 ▶ 신뢰관계인 등
삭제 지원	▶ 피해 촬영물 삭제·차단 ▶ 재유포 등 사후 모니터링
심리적 지원	▶ 신변보호 ▶ 상담·심리치료 ▶ 주민번호 변경지원
법률적 지원	▶ 무료 법률상담 ▶ 채증자료 작성 ▶ 배상명령 신청 등
경제적 지원	▶ 긴급생계비·학자금 등 지원 ▶ 이전비 지원 ▶ 쉼터 지원

- '21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및 압수물 처리 절차 반영, 매뉴얼 개정

□ 2023년도 시행계획

- 피해자 동의 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물 등록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 피해영상물 지속적 삭제 지원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불법촬영물추적시스템 통계, 1~10월 누적>

성과목표	실적 (2022년)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록 건수	13,078건	13,500건	시스템 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오화섭 경감	전화번호	02-3150-1159
------	-----------------	-----	--------	------	--------------

2-2-1-④

신고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조력자 보호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권익정책과

☐ 과제개요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력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그간의 추진실적

- '21, '22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시행
 - 개정 「성폭력방지법」(‘21.1.12 시행)에 따라 금지되는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
- 여성폭력 2차피해방지지침 표준안 마련 및 배포(‘21.1)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23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 추진 내용
 -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23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3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시행
2/4분기~4/4분기	- '23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수립·시행	수립·시행	수립·시행	수립·시행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여부

□ 기대효과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 및 체계 구축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법 개정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김민성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2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김민형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06 02)2100-6307

☐ 과제개요

○ 주요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피해자·신고자 이외에 조력자도 포함

☐ 그간의 추진실적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기 만료 폐기)

* 김삼화의원 발의('18.6.29.)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피해자·신고자 이외에 조력자도 포함 입법 지원

○ 추진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피해자·신고자 이외에 조력자도 포함

○ 추진 방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방식(의원 발의 또는 정부입법)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검토 필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조력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	-	개정안 국회제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록

□ 기대효과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및 처리가 공정하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전제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 근로감독관 교육 등 시행 준비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송미나 서기관 임동훈 주무관	전화번호	044) 202-7446 044) 202-7472
------	------------------	-----	--------------------	------	--------------------------------

□ 과제개요

- 신고현장 및 수사·사후관리 과정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 피해자 관련 제도 활용 제고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 가·피해자 사후관리를 위해 경찰-지자체-전문기관 각 전문성에 기반하여 전국 시·도별 다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지속 추진

< * 전국 시·도별 가정폭력 다기관 협업체계 유형 >

- ① 경찰(APO)·지자체(사회복지공무원)·전문기관(상담원)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內 상시 합동근무 센터 마련 → 서울(25개 구 자치구), 경기남부(4개 구)
- ② 경찰-전문기관(1366·가정폭력상담소 등) 간 MOU를 통해 재발우려가정 사후 모니터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복지지원은 지자체에 연계하는 협업체계
- ③ 재발우려가정 사후 모니터링 시 경찰·지자체·전문기관 합동방문

- 가정폭력 대응 쉼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지원 정보제공 체계 구축 완료

- ▶ (신고출동) 모든 가정폭력 신고 출동 시 '피해자보호명령'·'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보호·지원 제도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피해자에게 배부(문자 전송)
- ▶ (수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조사 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KICS상 자동 연계·출력하여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배부·안내 중
- ▶ (사건관리) APO가 전일 접수된 모든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해 콜백을 실시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재차 안내

- 범죄피해자 권리 지원 안내서(공통·유형별)* 양식을 통일, 다국어 버전을 포함하여 표준양식을 토대로 용어 현행화 및 내용 수정하여 제작 및 배포

* △(공통)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上 모든 피해자에게 KICS 안내서 교부 원칙 △(유형별)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추가 정보 제공

□ 2023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지속 추진 및 현장교육 실시
 - △지역경찰·여청수사·APO 대상 현장 교육·간담회 등 실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우수·미흡사례 분석 등 실시
 - 현장 적합성·타당성이 검증된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기반으로 재발우려가정 운영 세부지침 등 개선, 피해자 사후관리 내실화 추진
 - * △과거 사례 △가·피해자 간 관계성 △개인 특성 등 고려하여 재발우려가정 선정·관리
-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전문기관과의 협력 확대·강화
 - 경찰청-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 정책협의체 활용,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도별 우수사례* 공유·확산
 - * △경기도 가정·성폭력 공동대응팀 △제주도 사회적 약자 공동대응 협의체 등
- 내·외부 시스템 연계 강화 등 APO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 △대내(112·APO시스템·KICS) 및 대외(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간 정보 연계 확대 △가·피해자 정보 관리 △데이트폭력·스토킹 사건관리 기능 개선 △기타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현장대응력 제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관련 가정폭력 매뉴얼·지침 보완
2/4분기	- APO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3/4분기	- 가정폭력 다기관협력체계 현황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4/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현장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현장대응점수+사후조치점수) / 가정폭력 신고건수 × 100	41.8%	44.6%	50.6%	50.8%	시스템 및 수기취합

☐ 기대효과

-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 체계에 대한 세밀한 정비로 실효적인 법 집행 및 피해자 보호 도모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 대응 체계 지속 고도화 및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오윤지 경위	전화번호	02-3150-0812
------	----------------	-----	--------	------	--------------

2-2-3-①

형사절차 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 「성매매처벌법」 상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서 처벌하지 아니하고 보호·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 교육콘텐츠 개발

□ 그간의 추진실적

-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 개발 및 전국 경찰관서 배부
- 경찰인재개발원의 “풍속업무 교육과정” 내 성매매 피해자 관련 교과목 신설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성매매 단속·수사업무 담당자들의 성매매 피해자 관련 교육 접근성 제고를 통한 성매매 피해자 식별 절차 정착 유도

○ 추진 내용

- 경찰인재개발원 “풍속업무 교육과정” 내 성매매 피해자 교과목 지속 운영
-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의 현장 정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성매매 업무 담당자의 해당 교육 수강 독려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매매 피해자 식별 교육 이수					
○ 교육 이수한 풍속담당자/ 전체 풍속담당자	-	-	-	50%	교육 이수율 점검

□ 기대효과

-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성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원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전중현 경위	전화번호	02-3150-0827
------	----------------	-----	--------	------	--------------

2-2-3-②

수사 과정에서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과제개요

-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 통역서비스 제공
 - 외국인피해자에게 출입국 및 국내체류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 및 통역과 귀국비용을 지원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외국인 피해여성에게 무료법률지원 등 제공하여 귀국까지 안전하게 보호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 등에서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조, 법원 동행 등 법률 지원
 - '22. 6월 현재 11명의 외국인 피해여성에게 법률지원

〈외국인지원시설 법률지원 현황〉

(단위 : 명/건, '22.6.30.기준)

구분	인 원 (명)	합계 (건)	현장 긴급 구조	수사 의뢰	수사지원			수사 동행	소송 지원	소년보 호재판	법률 지원 상담	기 타
					소계	기소	피소					
2022 상반기	11	37	3	1	-	-	-	4	5	-	7	12
2021	33	116	1	-	18	18	-	9	29	-	1	36
2020	33	211	5	19	50	50	-	16	29	-	5	87

* 기타 : 출입국 체류지원(출입국 비자 및 등록증 관련 업무), 신용회복신청, 수사기록 열람 증명 등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외국인 피해여성에게 무료법률지원 등 제공하여 출국 및 국내체류 등 관련 문제 상담 및 지원
- 추진 내용
 - 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상담원(비상근 통역사) 배치(연중)
 - 성매매업소로부터 구조, 출국 및 국내체류 등 관련 문제 상담 및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기포함

※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3-3-1-④)과제에 기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양성평등기금)	17,758	17,758	18,156	398	2.2

○ 성과지표 : 기포함

※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3-3-1-④)과제에 기포함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건) (산식)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등의 피해자 지원건수	148,427	154,888	143,000 (추정)	145,000	• 과거 4년('18~'21) 실적의 평균 (139,934)보다 3.7% 상향된 145,000건으로 목 표 설정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점) (산식)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의료·법률, 직업훈련 등 이용 만족도	90.8	92.1	91 (추정)	91.2	• 과거 4년('18~'21) 실적의 평균 (90.8)보다 0.4점 상향된 91.2점으 로 목표설정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 귀국지원 등 지속 지원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정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48
------	----------------	-----	---------	------	--------------

□ 과제개요

- 다누리콜센터-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 간 핫라인 운영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의 폭력피해 지원 함양 교육 운영으로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2020년) 다누리콜센터-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연락망 공유
- (2020년~) 다누리콜센터-학대예방경찰관(APO) 핫라인 운영
 - * 이주여성 폭력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 착수, 통역 지원, 피해자 모니터링 등 상호 연계 운영
- (2020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및 방법
 - 다누리콜센터-학대예방경찰관(APO) 핫라인 운영
 -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다누리콜센터-학대예방경찰관(APO) 핫라인 운영(연중) -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
2/4분기	- 다누리콜센터-학대예방경찰관(APO) 핫라인 운영(연중) -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3/4분기	- 다누리콜센터-학대예방경찰관(APO) 핫라인 운영(연중) -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4/4분기	- 다누리콜센터-학대예방경찰관(APO) 핫라인 운영(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콜센터 종사자 교육률	100%	99%	98%	90%	수기통계
○ 성과목표치 산식 : 콜센터 근무인원 대비 종사자 교육 참여율 산출					

※ 종사자들의 24시간 교대근무 등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목표 80% 유지, '23년은 90%로 상향

☐ 기대효과

- 이주여성 폭력피해 발생 시 다누리콜센터-경찰 간 연계 체계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 강화
- 폭력피해 지원, 수사절차 등 실무교육으로 상담원 지원 역량 강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다누리콜센터와 학대예방경찰관 간 핫라인 운영
- 다누리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74
------	-----------------	-----	------------	------	--------------

□ 과제개요

- 이주 여성 성·가정폭력 등 피해자는 불법체류 신분·국적 취득 문제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 여성 피해자보다 더 큰 범죄피해에 노출
- 수사과정상 언어·문화 등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주여성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 전담 지정 △피해자 친화 조사 환경 구축 등 다양한 방안 적극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경찰관 확대 배치)** 성·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청수사 부서 內 여성 경찰관을 확대하여 라포(Rapport) 형성을 비롯,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 여청수사 기능 여성수사관 비율: ('21년 27.8% → '22.10월 29.4% / 1.6%p ↑),
- **(조사환경 개선)** △가·피해자 동선 분리 △여성 경찰관 호출 시스템 설치 △사무·조사 공간 분리 △통합지원공간 마련 등 피해자 중심 환경 구축
※ '22년 36개 경찰관서 개선 完(총 109개 完) → '23년까지 쉼 258개 경찰서 추진
-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확대·고도화)** 자유로운 대화형 면담으로 불필요·부적절한 조사 예방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풍부한 피해진술을 확보하는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을 쉼 2급지署 등으로 확대
- 또한, 피해진술 데이터베이스를 누적해 AI 인식률을 지속 향상하고, AI 속기 기능을 탑재해 속기록 작성 부담 경감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2023년도 시행계획

- **(여성경찰관 전담조사체제 강화)** 여성경찰관을 지속 추진해 성폭력·스토킹 등 소관 범죄수사 전담수사관으로 운용, 피해자 심리적 안정 도모
※ 폭행·명예훼손 등 여청수사 소관 외 범죄수사는 부 수사관으로 적극 조사 참여,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내실화)** 기존 시스템 활용 최종인 성폭력 범죄와 함께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 사투리·경찰용어 등 AI 음성인식률을 지속 향상하고 구성요건 성립 분석요소 Tool 고도화

- **(내·외부 전문가 역량 강화)** 성폭력 피해 전담 조사관(해바라기센터 조사관) 교육 강화 및 진술분석전문가 부적합자 해촉 등 역량 고도화 지속 추진
- **(여청수사관 교육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청수사 교육체계를 정립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3년 상반기 인사배치時 여성경찰관 지원자 확대 - 현장 지도방문·의견수렴 등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내실화 - '23년 여성청소년수사 교육 계획 수립 및 月1회 사례공유 화상회의 등
2/4분기	- 현장 지도방문·의견수렴 등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내실화 - 月 1회 우수·미흡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사례공유 화상회의 등
3/4분기	- 현장 지도방문·의견수렴 등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내실화 - '23년 하반기 인사배치時 여성경찰관 지원자 확대 - 月 1회 우수·미흡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사례공유 화상회의 등
4/4분기	- 현장 지도방문·의견수렴 등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내실화 - 月 1회 우수·미흡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사례공유 화상회의 등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여청수사 기능 內 여경비율 (여성경찰관 인원/ 여청수사 인원)x100	23.9%	27.8%	29.4% (10월 기준)	30.0%	수기 통계

☐ 기대효과

- 성폭력·스토킹 등 이주 여성 대상 범죄 엄정 대응 및 성인지 등 인권 감수성 높은 수사활동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담당자	김재영 경감	전화번호	02-3150-2878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의무화
-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및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대상
 -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 제청에 의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한 자
- 교육내용 : 연중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 교육(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온라인 교육) 및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를 이용한 교육 실시
 - * 2022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된 직원 610명 전원 이수 완료(12월 이수 예정자 포함)

□ 2023년도 시행계획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교육대상)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지소포함)·국립법무병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
 - (교육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및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를 이용한 교육 실시(연중 추진 - 반기별 교육 이수 현황 점검 및 독려)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성과지표명 : 교육이수율(%)	69%	97%	100%	100%	교육이수자/교육대상자 × 100

담당부서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김수철	전화번호	02) 2110-4461
------	----------------	-----	---------	------	---------------

□ 과제개요

○ 추진배경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의무화

○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및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신설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에 해당 교육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연중(12월 × 1,000명 = 12,000명) 이수 가능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대상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남자전용 교도소 제외)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
- 그 기관에 대한 순회점검 감독권을 가지는 각 지방교정청에서 근무하는 4급에서 9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
- * 2021년까지는 여성폭력 사건담당자(100명)를 지정하여 교육 실시했으나, 2022년부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 전원(585명) 교육 이수 완료

○ 교육개요

- 교 육 명 :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 교육
- 교육기간 : 연중
- 교육방법 :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온라인 교육)
- 실시인원 : 교육대상자 전원 교육 수료 완료

□ 2023년도 시행계획

- 교육대상(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 전원)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남자전용 교도소 제외)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
 - 그 기관에 대한 순회점검 감독권을 가지는 각 지방교정청에서 근무하는 4급에서 9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
-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 매년 1회(최소 1시간) 이상
 -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를 이용한 교육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교육대상자 교육 이수 독려 및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과정 관리
2/4분기	교육대상자 교육 이수 독려 및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과정 관리
3/4분기	교육대상자 교육 이수 독려 및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과정 관리
4/4분기	교육대상자 교육 이수 독려 및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과정 관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성과지표명 : 교육이수율(%)	100%	100%	100%	100%	교육이수자/ 교육대상자 × 100

담당부서	법무부 교정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한상규	전화번호	02) 2110-3364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이에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폭력 2차 피해예방 교육 시행 관련 방안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18. 11. 전국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 검사, 수사관 워크숍
 - 성폭력범죄 2차 피해 방지 방안, 불법촬영 및 성폭력 사건 실태분석 및 논의, 카메라촬영·유포 사건처리기준 전파 등 워크숍 실시
- '19. 3., '19. 10. 여성·아동분야 타겟형 교육 실시
 - 2차 피해 방지 교육, 성폭력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및 성폭력·아동학대 수사시 유의사항 등 전국 여성·아동 전담검사 대상으로 타겟형 교육 실시
- '20. 6.,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0. 11.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사건 고소인(고발인) 통지시스템 개선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 관련시스템 개선
- '20. 11. 2020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3.,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1. 11. 2021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11. 여성가족부 주최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 68명 교육 이수)
- '22. 6., 9.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2. 11. 여성가족부 주최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 58명 교육 이수)
- '22. 11. 2022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하반기)
 - 전국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사이버, 시청각 등) 실시
- 기관별 협력체계 강화(연중)
 - 검찰청 특성에 맞는 자체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교육 자료 지원 및 공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전국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교육 이수 현황(%)	90.5%	94.2%	92.8%	92.5%	전국청 수기취합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 이수자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					

* '23년 목표치는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휴직자 등을 고려해 '20~'22년 실적의 평균치로 산정

☐ 기대효과

- 수사·공판 등 검찰사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여성폭력 2차 피해 적극 예방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지속 실시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대검찰청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의무화

○ 주요내용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교육
 - * 관련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2항(2차 피해 방지)
- 2차 피해 방지 교육 교재 / 자료 개발

□ 그간의 추진실적

○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11월)

- * 군사경찰, 군검찰 등 147개 기관(수사관 등 300명)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22. 10월)

- * 고소인·진정인 등에 대한 수사진행 사항의 통지제도 / 신설 등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제도 개선

○ 국방부 지시발령(제2022-021호)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22. 5.19.)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 11. 3. / 여성가족부 주관
- * 이수자 : 군사경찰 및 감찰 300명

○ 양성평등 및 사건처리 관계자 대외 위탁교육 시행

- * 성폭력 피해사례 연구, 디지털 성범죄 이해 및 피해자 지원 등
- * 기간 / 과정 : '22. 4.14.~10.26. /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7개 과정, 14개 기수
조사관 과정 신설
- * 이수 : 482명 / 성고충전문상담관 104명, 양성평등담당관 및 정책관계관 211명,
수사관 63명, 조사관 61명, 법무관 43명 등

□ 2023년도 시행계획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교육

- 군 수사기관(군사경찰·군검찰) 자체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군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 교육 대외 위탁교육 실시 인원	59명	77명	106명	100명*	전년 실적 및 성폭력 범죄 민간수사기관으로 이관되어 대상자 감소
○ 2차 피해 방지 교육 표준 매뉴얼 마련	.	1건	1건	-	'22년 해당 성과목표 완료 · 부대관리훈령('22.5.20.개정) 內 2차피해 방지 지침 포함 · 국방부 성인지교육 內 2차피해 방지 내용 포함

☐ 기대효과

○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예방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교육 (지속)

담당부서	국방부	담당자	중령 남길	전화번호	02)748-5168
------	-----	-----	-------	------	-------------

2-2-5-①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고용정책과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교육이 의무화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그간의 추진실적

-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20.7.)
- 근로감독관 대상 교육과정 운영('21~22년)
 - ('21년) ①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② 근로감독관 대상 정규 교육과정에 여성폭력 2차 피해 관련 교과목 편성
 - ('22년) ① 「근로감독 기본과정」과 「신규근로감독관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방지' 교과목 편성, ② 「권역별 수사기관 2차 피해 예방 교육」 교육과정 운영

연도	과정명	교육기간	운영횟수(회)	이수 인원(명)
'21년	근로감독관 성인지 제고 및 2차 피해 방지교육	'21.10월	2	82
	근로감독 기본과정	'21.3월~10월	12	267
	신규근로감독관 과정	'21.6월~12월	3	369
'22년	근로감독관 기본과정	'22.3월~11월	6	77
	신규근로감독관 과정	'22.4월~10월	4	207
	권역별 수사기관 2차 피해 예방교육	'22.8월~10월	7	125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 사례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요령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교육 운영

○ 추진 내용 및 추진 방법

- 근로감독관 교육과정(5일 이상)에 '2차 피해 방지 교육' 교과목 편성
- 권역별 수사기관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추진 일정(잠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22.12월	· 근로감독기획과 및 운영지원과와 '23년 연간 교육계획 협의
1/4분기	· 근로감독관 기본과정 및 신규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2/4분기	· 근로감독관 기본과정 및 신규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3/4분기	· 근로감독관 기본과정 및 신규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 권역별 수사기관 맞춤형 교육 실시
4/4분기	· 근로감독관 기본과정 및 신규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 권역별 수사기관 맞춤형 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근로감독관 교육자료 개발	완료	-	-	-	
○ 성과지표명 - 근로감독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교육실시	교육실시	교육실시	
○ 성과목표치 산식 : 1) 근로감독관 대상 5일 이상 교육과정에 '성인지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편성 운영	-	완료 (교과목 편성, 1시간)	완료 (교과목 편성, 2시간)	교과목 편성 (2시간)	
2) 성희롱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 대상 현장 방문형 교육 실시	-	교육실시 *실시간 온라인 (8시간, 2회)	교육실시 *대면교육 (2시간, 7회)	교육실시 *집체/온라인 화상 교육 등 (2시간, 7회)	

□ 기대효과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 제고 및 직무역량 강화,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 감소 예상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근로감독관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토론식·실습형 교육 추진
 - 지속적인 교육 품질 제고 노력
 - 내부 교육 전산망(배우리)을 통해 시청각 교육 병행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인진희 사무관 송미나 서기관	전화번호	044) 202-7719 044) 202-7446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15,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방지 교육 실시를 의무화
 - 이에, 관할지역 내 여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철도수사관을 상대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사건처리 유의사항 및 수사단계별 대응 등 교육* 실시
- *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교안을 활용한 자체교육, 전문강사 초빙교육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부서별(수사과·센터 중심)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교육을 자체교양 및 초빙교육 등의 방법으로 이수자 확대
 -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및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관련 영상자료에 대해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365명)
 - (2021년) 성희롱 예방교육 시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병행, 각 부서별 자체교육 및 여성가족부 주관 영상교육 참석 등(416명)
 -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한 교안 및 동영상 강의자료를 활용한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전문강사 파견 교육 참석 등(433명)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기존 방식의 자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하되, 교육의 품질 및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참여 검토
- * 2022년 기준 여성가족부 전문강사(변호사) 초빙교육 1차 9명, 2차 14명 참석
- 추진 내용
 - 전 소속에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교안 및 동영상 강의자료 배포를 통한 전 직원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및 초빙교육 등 교육방법 다각화

○ 추진 방법

- '23년 상반기 자체 교육훈련 계획수립 시 자체 교양 과목으로 반영하고,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파견하는 전문강사를 통한 집합교육* 등 실시

*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전문강사 파견교육을 시범으로 실시하였으나, 지속 운영 시 철도경찰대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희망자 명단 제출 및 교육참여 등 독려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23년도 철도경찰대 교육훈련계획에 자체교양 과목으로 반영
2/4분기	소속별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자체교육 실시
3/4분기	여성가족부 주관 교육 수요조사 시 소속(부서) 대상 수요조사
4/4분기	여성가족부 온라인 교육 또는 전문강사 파견 교육 운영 시 참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지속 실시 ○ 성과목표치 산식 : 현원 기준(491명) 90%이상* 이수 * 여성가족부 4대 폭력 예방 교육 배점만점 기준으로 설정	384명	394명	433명	441명(이상)	참석 서명부 및 관련 공문 등

☐ 기대효과

- 사건 담당자 및 행정인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방법의 다각화 등을 통해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적 이해 함양을 도모
- 이에,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수사기관으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 기대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교육결과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방안 마련을 지속 강구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담당자	한동진 철도수사관	전화번호	042) 615-5855
------	-----------------------------	-----	--------------	------	---------------

2-2-5-①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신설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의무 실시(「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2항 근거)

□ 그간의 추진실적

- 전 직원 대상 2차 피해 예방 직장교육 실시 및 인재개발원·중앙경찰 학교 등 경찰 교육기관 내 '2차 피해 예방교육' 교육과정 신설
- 피해자 보호 및 경찰 수사 관련 경찰청 훈령*에 2차 피해 개념을 명문화 하고 2차 피해 방지의무 등을 규정('21년)
*「범죄수사규칙」,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

- 지역경찰·여청·사이버수사 등 여성폭력대응 기능에서 활용하는 기존 매뉴얼에 2차 피해 개념·사례 등 반영, 현장경찰관 업무 역량 강화

□ 2023년도 시행계획

- 현장 동료강사 등 2차 피해 예방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및 시·도 경찰청 중심 예방 교육 강화
- 實 사례 위주의 다양한 교육자료 제작, 현장 교육 지원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사이버교육 콘텐츠 <2차 피해 사례 및 예방> 신규 제작 등 교육 접근성 강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2년)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관서별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275회	275회	관서별 교육 실적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송진영 경감	전화번호	02-3150-0938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과제에 해양경찰청 포함

<여성폭력 2차 피해 정의>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것을 말함

- 수사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여성폭력 2차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보호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교육 신설

□ 그간의 추진실적

- 2020년~2022년 우리청 소속 수사경찰관 1인 1 사이버 교육 수료
 - 수사전담 경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 의무화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차단
 - * 2020년 : 795명 / 2021년 : 789명 / 2022년 749명
-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시민단체)와 업무협약 체결(2020.11.)
 - 여성인권 보호와 경제적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주관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온라인교육(2020~2021)
- 「인권과 수사」 과정 개설로 수사경찰관 대상 인권 교육(2020~2021)
- 동해지방청 교육센터에서 여청수사실무 교육과정 운영(2021)
- 성폭력 범죄수사 실무 교육과정 시범운영(2022년)
- 여성가족부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교육」 지원 사업 참여(2022년)

□ 2023년도 시행계획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관련 전문교육과정과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수사관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 시행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관련 교육 과정 신설 및 사이버 교육 의무화

○ 추진내용

-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관련 교육 「성폭력 범죄 수사실무」 과정 신설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이버 과정* 운영
- * 교육과정에 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교육 포함

○ 추진방법

- 성폭력 범죄 수사실무 과정은 성폭력범죄 전담수사관 우선선발
- 수사경찰관 대상 1인 1사이버 교육 수료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전문교육 신설 관련 기능협의 및 교육훈련계획 반영
2/4분기	성폭력 범죄 수사실무 등 관련 교육 진행(사이버 포함)
3/4분기	성폭력 범죄 수사실무 등 관련 교육 진행(사이버 포함)
4/4분기	성폭력 범죄 수사실무 등 관련 교육 진행 및 결과확인(사이버 포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 지표

성과목표	실적(B)			목표치(A)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 수료명 : 수사 경찰관 1인1교육	100%	100%	100%	100% 목표	B/A(100%)
○ 성과목표치 산식 : B/A(100%)					

□ 기대효과

- 수사관 대상 2차 피해 성폭력 방지교육 실시로 예방적 효과도모
 - 성폭력 범죄전담수사관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사건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각 일선 수사경찰관 대상 교육으로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수사 초동조치부서 수사 전담요원 교육 시행
 - 수사 초동조치 부서인 현장부서(함정·과출소) 소속 수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경찰서별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담당부서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팀	담당자	경사 이예진	전화번호	032-835-2945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전자감독대상자 등 주요 대상자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등록정보 현행화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신상정보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 강화

- 공개·고지자 전원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관리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실거주지 등 등록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점검 주기 단축(2개월 ▶ 1개월)
 - * 2021년 총 7회, 2022년(10월 기준) 총 10회에 걸쳐 27,717명에 대해 점검 및 불일치자 1,149명에 대한 주민등록지, 거주지, 출입국정보, 수용정보 등 현행화 실시
- 소재불명자, 미등록자 등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하고 현행화하여 그 결과를 경찰과 공유, 진위여부 확인을 통해 소재불명 상태 최소화
 - * 2021년 제출의무위반자 3,420명, 2022년(10월 기준) 2,960명에 대해 경찰에 통보

○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관리 강화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가 오(誤)정보로 판단될 경우, 법무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하게 반영
 - * 정정 내용은 여가부와 경찰에 통보, 관할경찰서에서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 후 결과 공유('21. 9.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과 협의 완료)
 - * '21. 10. 부터 113회에 걸쳐 실시하여 '22. 10.까지 총 520명에 대해 직권정정 실시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소재불명, 공개·고지 등 특정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공유 등 협업 강화

- ▶ 협의체 운영주기 : 연 3회, 각 부처 순회하여 주관
- ▶ 기타 : 긴급한 현안 발생시 수시협의회 개최

- * '21년 ~ '22년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회의 8회 실시(정기 6, 수시 2회)
- 신상정보 등록·관리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 행정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최신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등록정보에 반영
- * 수용자조회, 출·입국조회, 주민등록조회, 차량등록증조회, 보호관찰 상황조회
- 여가부 고지 집행 전 고지정보 변동사항 검토 실시
- * 여가부에서 '21년 ~ '22년 반기고지 대상자 9,189건 점검 요청에 대한 검토 회신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신상정보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 등록정보 일제점검 강화
 - * 공개·고지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주소지·실제 거주지 등 등록 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제점검 실시
 - * 주거부정·제출의무 불이행 등 소재불명자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경찰을 통한 진위 확인 조치
 - * 소재불명자, 미등록자 등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현행화 실시
-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직권정정 지속 실시
 -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잘못된 주거지 정보는 법무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하게 공개정보에 반영
 - * 정정 내용은 여가부와 경찰에 즉시 통보, 관할경찰서에서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 후 결과 공유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소재불명, 공개·고지 등 특정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공유 등 협업 강화

- ▶ 협의체 운영주기 : 연 3회, 각 부처 순회하여 주관
- ▶ 기타 : 긴급한 현안 발생시 긴급협의회 개최 및 핫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일제점검(매월) 및 직권정정(수시)
2/4분기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일제점검(매월) 및 직권정정(수시) -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협의회(4월) - 여성가족부 고지 집행 전 고지사항 검토 및 회신(6월)
3/4분기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일제점검(매월) 및 직권정정(수시) -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협의회(8월)
4/4분기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일제점검(매월) 및 직권정정(수시) -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협의회(11월) - 여성가족부 고지 집행 전 고지사항 검토 및 회신(6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신속입력률(%)	92.5	92.7	96.4	97.4	'22년부터 등록 기준일을 30일→6일로 단축하여 3년 평균 실적보다 상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 성과목표치 산식: 6월 이내 등록건수/신규*등록건수x100 *직권등록사건 제외					

담당부서	법무부 전자감독과	담당자	권오경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4257
------	-----------	-----	------------	------	--------------

□ 과제개요

- 「성폭력처벌법」上 점검 주기(3·6·12개월, 1회)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대상자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하여 재범 가능성 억제

□ 그간의 추진실적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제 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 검거 기간 운영*
 - * '22년 상반기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 검거 기간(3월 ~ 5월)
 - '22년 하반기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 검거 기간(8. 29. ~ 10. 7.)
- 유관기관(경찰청·법무부·여가부) 실무 협의회를 통해 성범죄자 관리 강화(年 3회)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효율적 관리 방안 및 현안 공유
- 고위험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출소 시, 관할署 여청강력팀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하여 점검·관리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매뉴얼 개선) 신상대상자 점검 우수·미흡 사례 공유 및 점검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업무 매뉴얼 마련·배포
 - ※ 특히, 과·팀장 등 중간관리자들이 소속 수사관들의 점검 실시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마련
- (신상대상자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 검거 기간 운영) 「성폭력 처벌법」上 정해진 점검 주기 외에도 年 2회 특별 점검하여 등록 정보 정확성 제고 및 재범 가능성 억제
- (고지·공개 대상자 관리 강화) 고지·공개 대상자는 가급적 여청강력팀이 전담하여 필히 현장 방문 후 실거주지 정보 정확성 제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매뉴얼 개선
2/4분기	- 상반기 신상대상자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 검거 기간 운영
3/4분기	- 하반기 신상대상자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 검거 기간 운영
지속 추진	- 고지·공개 대상자 관리 강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38백만원(일반수용비)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소재불명자 검거 실적(명)	136	63	79	90 (10%이상 목표치 설정)	검거 건수

○ 기타사항

- 형 확정 판결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정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법무부)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담당자	정용철 경사	전화번호	02-3150-0921
------	-------------------	-----	--------	------	--------------

□ 과제개요

○ 사업 목적

- 성범죄 유죄 판결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법원 선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전 차단 도모

○ 주요 내용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통해 대국민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기관 대상 신상정보 별도 고지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취업 제한, 연 1회 이상 취업여부 점검·확인 및 적발자 해임·기관폐쇄 등 조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홍보

□ 그간의 추진 실적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현황

(단위: 명, '22.12월 기준)

등록 (법무부)	인터넷 공개			우편 고지		
	계	지역별 (시·도)	수용자 및 해외출국자 등 ¹⁾	계	지역별 (시·도)	수용자 및 해외출국자 등 ²⁾
116,434	3,780	3,210	570	3,602	3,058	544

주 1) 수용자(490명), 해외출국자(50명), 주거불명(9명), 주거부정(21명)

2) 수용자(470명), 해외출국자(45명), 주거불명(9명), 주거부정(20명)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실적

(단위 : 개소, 명)

구분	점검대상		적발인원	조치 사항
	기관	인원		
'22년	549,038	3,418,865	81	종사자 해임 43, 운영자 변경 16, 기관 폐쇄 22
'21년	533,315	3,382,478	67	종사자 해임 39, 운영자 변경 9, 기관 폐쇄 19
'20년	543,398	3,271,506	79	종사자 해임 51, 운영자 변경 11, 기관 폐쇄 17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감(교육지원청)의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전수 대상 일제 점검·확인하여(3~12월), 성범죄 경력자 퇴출 추진
-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기관 교육 및 취업제한제도 홍보 강화
- 성범죄자 재수감 시 신상정보 공개 중지 및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위반·점검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 강화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검토·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수립 안내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집행(연중)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검토
2/4분기	· 각 기관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수립 결과 확인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논의
3/4분기	· 각 기관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실시 및 결과 확인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논의(계속)
4/4분기	· 각 기관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실시 및 결과 확인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매뉴얼, 리플렛 등 제작·배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정보보호활동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6,746 (5,613)	5,756 (4,112)	6,116 (4,716)	△ 630 (△ 897)	△ 9.3 (△ 16.0)
• (국비) 일반회계	5,613	4,112	4,716	△ 897	△ 16.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만족도	신규	81	82	83	신고의무 및 취업 제한 교육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척도 조사 후 환산)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인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					

□ 기대효과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성
- 아동·청소년 정보보호 홍보 활동을 통한 사회적 성범죄 인식 재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 정보보호 기반 강화 관련 청소년정보보호법 개정 검토(계속)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김영진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16
			이수정사무관		02)2100-6404

□ 과제개요

○ 근거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 (사업 목적)

-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도모

○ (대 상) 모든 성폭력 수형자

○ (과정 운영) 재범위험성 및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과정 구분 후 운영

- 기본과정 : 전 교정기관에서 60시간 운영
- 집중과정 : 16개 전담기관에서 100시간 운영
- 심화과정 : 5개 심리치료센터에서 300시간 운영
- 특별과정 : 1개 지정 전담 심리치료센터에서 150시간 운영
- 유지과정 : 전 교정기관에서 20시간 운영

○ (주요 내용) 자아존중감 향상, 왜곡된 성의식 수정, 피해자 공감 등

○ (강 사) 교정공무원(내부 강사), 외부 전문 강사

○ 추진 체계

- 사업시행 주체 : 각 지방교정청 및 전 교정기관
- 사업시행 절차 : 계획 수립 → 운영 → 결과 보고

□ 그간의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 1,804명(' 20. 12.)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 2,213명(' 21. 12.)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 2,783명(' 22. 12.)

□ 2023년도 시행계획

○ 사업 개요

- 사업 대상 : 모든 성폭력 수형자
- 사업 내용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 추진 일정
 - 기본과정 : 전 교정기관에서 연 2~6회 운영
 - 집중과정 : 16개 전담기관에서 연 2~3회 운영
 - 심화과정 : 5개 전담센터에서 연 2회 운영
 - 특별과정 : 지정된 심리치료센터 운영
 - * 특별과정은 가학적·변태적 성폭력사범 등 특정 성폭력사범에 대해 출소 전 실시하는 150시간의 추가 심리치료 과정임
 - 유지과정 : 전 교정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운영
 - * 유지과정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심화과정을 수료한 성폭력 고위험군에 대해 출소 전 실시하는 20시간의 추가 심리치료 과정이지만, 필요시 기본과 집중과정 수료자에게도 실시 가능함
- 추진 체계
 - 사업시행 주체 : 각 교정기관
 - 사업시행 절차 : 계획 수립 → 운영 → 결과 보고
- 기대효과 :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전사회 구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1,804	2,213	2,783명	2,300**(명)	○ 최근 3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 산출
○ 성과목표치 산식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인원 산정(명)*					

* 프로그램의 과정별 구분없이 모든 과정의 총수료 인원을 합산하여 목표치 산출

** '23년 목표치는 기존 목표치로 동결하였으며,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실적은 변동 가능

□ 기대효과

- 성폭력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에 따라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전 사회 구현

담당부서	법무부 심리치료과	담당자	박경식 사무관/ 송남옥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898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재범방지 도모

○ 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 공공기관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가해아동·청소년 부모 교육
 - * 법원에서 의뢰한 수강명령 청소년, 소년원 재소자, 학교폭력위원회 위탁 청소년 등
- 교육 매뉴얼 보완, 교육 강사 양성

□ 그간의 추진실적

○ 재범방지교육 지속 실시

<재범방지 교육인원>

구 분	2020	2021	2022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성인)	88집단 (1,039명)	88집단 (965명)	77집단 (744명) (22.11.기준)
○ 가해 아동·청소년	931명	924명	1112명 (22.11.기준)
○ 가해아동 청소년부모	173가족	222가족	223가족 (22.11.기준)

- 가해아동청소년 부모 교육 매뉴얼 보완('20)
-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인간존중프로그램 매뉴얼 제작('21)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표준프로그램 전면개정('21)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교육 지속 실시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매뉴얼 업데이트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및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교육 계획수립, 실시
2/4분기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및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교육 실시
3/4분기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및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교육 실시
4/4분기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및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중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6,746 (524)	5,756 (524)	6,116 (524)	△ 630 (-)	△ 9.3 (-)
국비					
• 일반회계	524	524	524	-	-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 (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교육)	1,329 (448)	1,329 (448)	1,316 (443)	13 (△5)	1 (△1.1)
국비					
• 기금(양성평등기금)	448	448	443	△5	△1.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가해아동·청소년 성충동성 증감율					
○ 성과목표치 산식 : 사전 대비 사후평가 점수 변화 (사후평균 - '사전평균)/'사전 평균	△30%	△41%	약△30% 추정	△30%	사전-사후성충동성 변화율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교육실시를 통한 재범 억제
-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교육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안전한 사회구현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부모교육 지속 실시
- 교육매뉴얼 지속적 업데이트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김영진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16
			한지훈주무관		02)2100-6409

□ 과제개요

○ 사업 목적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성매매 수요 차단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운영 내실화로 존스쿨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 내용

- 교육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 운영 내실화
- 엄정한 교육 집행으로 불량자 제재조치

□ 그간의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소감문 작성 등 자료 관리
 - *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평가 등을 실시, 반영하여 교육 운영의 내실화 추진
- 내실 있고, 엄정한 교육 실시
 - * 2022년 10월 기준으로 존스쿨 미이수자 55명 검찰청 미이수 통보

○ 주요 실적

- 전문프로그램 매뉴얼 적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효과성 분석 등 내실 있는 교육 운영으로 성구매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
 - * 2020년 899명, 2021년 1,061명, 2022년 10월 1,650명 교육 이수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지연된 교육 신속 집행
-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 제고

○ 추진 내용 및 방법

- 미이수자에 대한 검찰 통보 등 엄정한 교육 운영
 - * 교육시간 엄수, 출결상황 및 이수처리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집행 엄정성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강사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지속 확보 및 확보된 전문강사의 공유 확대

○ 추진 일정

- 연중 상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899	1,061	1,650	1,210명	○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 2020년 899명 2021년 1,061명 2022년 1,650명
○ 성과목표치 산식 : 이수인원(명)					

□ 기대효과

- 교육 대기인원 누적 상황 해소 등 교육 효율성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신속한 교육 집행, 미이수자에 대한 검찰 통보 등 엄정한 교육 운영 및 신규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 전문프로그램 매뉴얼 적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내실 있는 교육 운영으로 성구매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

☐ 기타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보호관찰과	담당자	정명훈 사무관	전화번호	02) 2110-3487
------	-----------	-----	---------	------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양성연수과

□ 과제개요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확산
-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교육 포함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지표 반영('19.4월~)
- 교원양성과정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방안 연구*(~20.3.말)
* (내용)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가이드라인·표준교육안 등
-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 사항을 교원양성기관에 안내('20.4.)
※ 양성평등, 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내용을 관련 교과 등에 포함하여 이수 권고
- 교원양성기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제공('21.9)
- 교원양성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성인지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 실시 및 운영점검('22.12월 예정)
* 성인지 교육과정 운영 점검('22.8.~11.): 가야, 강릉원주, 목포, 부산, 안동, 한남, 한양, 호원대(8교)
- 교장·교감 자격연수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내용의 교과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 안내
※ '2022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21.10.13.)
-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완료('21.2월)
*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초과 양성과정 기준) 필수 이수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대학 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19.10~)
- 전 고등교육기관에 폭력 예방교육 안내로 구성원들의 예방교육 이수 독려('21.10.12)

- 총장·고위직(부총장·실·처장·전임교원)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별도 실시 의무화로 대학의 책무성 강화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안내·독려하고,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실적에 대한 점검 강화
-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교원양성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점검·컨설팅 및 우수사례 공유
 - ※ 성인지 교육과정 구성 현황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추진 내용 및 방법

- 대학 정보공시 결과를 기반으로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립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실적 점검 강화
- 교장·교감 자격연수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내용의 교과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 안내
 - ※ '2023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22.11월)
- 교원양성기관 대상 성인지 교육 운영점검 및 컨설팅('23.6~12), 우수사례 공유('23.12)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대학 내 폭력 예방교육 적극 실시 안내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성인지 교육 내용 포함) 안내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양성기관 운영점검 컨설팅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적극 실시 안내 및 이수 독려 - 2023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수립 및 안내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실적 정보공시 반영 사항 점검 - 교원양성기관 운영점검 우수사례 공유 - 국립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실적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유도(회)	교원자격 검정령	교원자격 검정령	2	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안내 (공문시행 등)
○ 성과목표치 산식 : 해당없음	개정 1건	개정 1건			

□ 기대효과

- 기관장 포함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통해 폭력에 대한 의식·문화를 개선
-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역량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예방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담당자	강민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11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선빈 사무관		044-203-6478
	교원양성연수과		김선아 연구사		044-203-6488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확산
- (사업내용)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콘텐츠 및 교육 실시 지원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대학생 맞춤형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2019년~)
- 대학생 일정 기준(70%) 교육 참여 시 가점(5점) 부여 기준 신설(2020년)
- 종사자(70%) 및 대학생 참여율(50%) 기준 신설(2021년~)
 - ※ 대학생의 경우, '21년에 전년 대비 학생참여율이 5%p 이상 상승한 경우는 부진기관 제외
-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성폭력방지법 개정·시행, 2021.7월)
 - ※ 교육부에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반영 요청(2021.3월) 및 평가인증 반영 강화 요청(2021.9, 10월)
- 대학 내 성평등 인식 확산 및 건전한 캠퍼스 문화 정착을 위해 대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집중 지원(2022.9~11월)

□ 2023년도 시행계획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학습 환경 구현
 - 대학생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 사이버 4종
 - ※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교제 폭력 예방 교육 등
 - 폭력예방교육 수강신청 및 디지털 상시학습 환경 개발(사이트 기능 개발)
 - 대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수강신청, 성적평가, 학습관리 이수처리, 수료증 발급 등 디지털 교육 환경 구현
 -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운영 및 콘텐츠 보급 지원
 - 대학별 사이버 교육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보급

- 대학생 대상 교제 폭력·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신입생 중심 선제적 교육 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상시학습 환경 개발 계획 수립
2/4분기	·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상시학습 환경 개발
3/4분기	·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상시학습 환경 개발(계속)
4/4분기	·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상시학습 환경 개발(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3,880	3,695	4,147	267	6.9
	(796)	(796)	(808)	(12)	(1.5)
국비	796	796	808	12	1.5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400	(순증)	(순증)
- 국비	-	-	400	(순증)	(순증)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예산의 일부를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콘텐츠 제작	-	-	4종	2023년 예산 금액 산출 내역

□ 기대효과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교육 이수 환경 조성 및 확산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에 반영 강화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강화 등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송재언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2 02)2100-6445
------	----------------	-----	--------------------	------	------------------------------

□ 과제개요

-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강화 및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대학 내 외국인 교원·학생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보급

□ 그간의 추진실적

- 초·중·고 양성평등 교육 지도서(교과에서 인성교육, 인권을 만나다) 및 범교과 교수학습자료(초·중·고별 총 6종) 개발·배포('19년)
-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목표·성취기준 개발 및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운영가이드, 초·중등 예방교육·양성평등 수업사례집 개발 및 보급(~'20.12)
- 대학 내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자료 개발('19년~)
 - 유학생 및 외국인 교원 대상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가별 성인지 감수성 수준 격차 등을 반영한 교육자료 개발
 - * '21년 일본어, 베트남어 예방교육자료 배포 완료, '22년 영어·중국어 예방교육자료 개정·보완
 - 초·중등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예방교육자료 개발 및 전공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20년~)
 - * 초·중등 예비교원 대상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배포('20년), 스포츠계열 전공 맞춤형 예방교육자료 개발·배포('21년), 의료보건계열 예방교육자료 개발 중('22년)
- 「교육기본법」 개정(법률 제18456호, '21.9.24 공포)으로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 실시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 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 학교현장 양성평등 교육 인프라 강화 지원을 위한 소규모·격오지 학교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지원('21년 225개교, '22년 105개교)

- 학교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하고, 지역의 양성평등 교육 확산을 주도하는 양성평등교육 교원 양성 직무연수 실시
 - ※ 현장지원단 연수('21.8.16.~21.11.20. 150명), 전문교원 연수('21.8.2~13. 46명)
- 全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양성평등 교육자료를 아카이빙 형태로 제공
 - ※ '교원전용 디지털콘텐츠플랫폼(ITDA)' 내 '양성평등한 미래인재' 채널 개설하여 35개 기관의 764개 콘텐츠 취합·탑재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메타버스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지원
 - ※ 학교급별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을 내실화 유학생·외국인 교원 및 전공계열 맞춤형 예방교육자료 개발·배포 계속
 - * 예방교육자료 관련 직무연수 등을 통해 예방교육자료의 보급 확산 및 효과성 향상 도모

○ 추진 내용 및 방법

- 학교현장에서 원활히 접근, 활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관련 교육자료를 수집, 선별, 공유하여 학교 양성평등 교육 지원 강화
 - ※ 특히 17개 시도교육청 개발 양성평등 교육 자료의 전국 학교 활용을 위한 수집, 확보
- 학교 양성평등교육을 주도하는 교원들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 직무연수 실시
- 유학생·외국인 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자료의 종류와 언어 수요를 파악하여 외국어 자료 개발·보완 및 배포
 - * 예방교육자료 관련 직무연수 등을 통해 예방교육자료의 보급 확산 및 효과성 향상 도모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사업 계획 수립 - 시도교육청 자체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수립
2/4분기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어 교육 자료 개발 수요 파악 - 양성평등 교육 자료의 전국 학교 활용을 위해 수집 확보된 자료 보급 - 양성평등교육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 직무연수
3/4분기	- 양성평등교육 교원 양성 직무연수
4/4분기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어 교육 자료 개발 완료 및 배포

○ 예산 현황('22.10.31.기준)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메타버스 등 디지털 매체 활용 양성평등교육 및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및 교육 현장 지원	170	170	200	30	18
특별교부금	170	170	200	30	18
○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391	383	491	100	25.5
국비	391	383	491	100	25.5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보급(중)	2종	2종	2종	2종	교육 프로그램 자료 (단위 : 종)
○ 성과지표명 : 외국어 예방 교육 자료 개발·번역(중)	2종	2종	2종	2종	교육자료 발간물 (단위 : 종)

☐ 기대효과

- 초중등학교 교육에서의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 실시 기반 마련
-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교육분야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 기여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단위 학교 양성평등 교육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고사업 지속 추진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강예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7115
------	------------------	-----	--------------------	------	------------------------------

□ 과제개요

- 교육 분야 인식개선 추진(교육부, 여가부)
 - 성희롱·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외국인 교원용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 보급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보급, 수요자 중심의 효과성 있는 교육교재 활용 지원
 - 공공기관 종사자 및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영어, 중국어)을 통해 외국인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공공기관 이러닝시스템 활용 온라인 상시학습 서비스 지원(직원용 4종, 고위직용 1종)
 -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 대비용 중고등학생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3종 6개 국어* 자막 지원
 -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지원(영어, 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 분야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자체 제작 콘텐츠 및 타부처·민간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보급

< 추천콘텐츠 제공 현황 >

('22년 10월, 단위 : 종)

구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교육
총 202종	89	35	8	13	57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 등을 통해 보급

□ 2023년도 시행계획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외국어 자막(영어, 중국어)을 통해 외국인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 외국인 등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대상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장벽 제거
 - 콘텐츠 내 화면해설, 수화, 외국어자막 등의 삽입을 통한 교육의 편의성 및 실효성 제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3년 접근성 향상 대상 콘텐츠 선정 계획 수립
2/4분기	· 23년 접근성 향상 대상 콘텐츠 선정 및 외국어 등 번역
3/4분기	· 23년 접근성 향상 대상 콘텐츠 외국어 등 번역(계속)
4/4분기	· 23년 접근성 향상 대상 콘텐츠 예방교육통합관리 탑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3,880 (209)	3,695 (209)	4,147 (329)	267 (120)	6.9 (57.4)
국비	209	209	329	120	57.4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외국어 자막 지원)	6종	3종	3종	콘텐츠 개발(3종)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외국인 교원용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지속 개발 및 보급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활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품질관리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박종식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562
------	----------------	-----	------------	------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생활문화과

□ 과제개요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초·중등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심리 상담 강화
 - 위(Wee) 클래스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학교 내 심리 상담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구축·운영 계획 수립 및 교육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18.3.9.~)
 - 컨설팅 신청 학교 및 중대 사안 발생 학교, 교육대학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여성인권진흥원)와 합동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19.7월~)
 - 신고센터 전담인력 확보('21~. 공무직1명)를 통한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신고센터 사안처리 절차 체계화를 위한 신고센터 업무매뉴얼 개발('21.12.)
- 시·도교육청별 위(Wee)클래스 설치 및 운영* 및 피해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강화**

* 운영현황 : ('19) 7,230교 → ('20) 7,631교 → ('21) 8,059교 → ('22) 8,619교

** 피해학생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연수 콘텐츠(총 8차시) 개발('20.9.)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 위(Wee) 클래스 설치 확대 및 피해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신고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지속 확보*를 통해 신고센터의 전문성 향상 및 신고센터 업무매뉴얼 활용을 통한 사안처리 절차 체계화 및 사안 대응 강화

* '23년 신고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43백만원 반영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위(Wee) 클래스 설치 확대 및 매뉴얼 개발과 피해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2/4분기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3/4분기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4/4분기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 예산 현황('22.10.31.기준)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100	100	150	50	50
특별교부금	100	100	150	50	5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Wee클래스 확대 구축(개)	7,631	8,059	8,619	8,265	Wee클래스 설치 학교 수
○ 성과목표치 산식 : '23.4월 조사					

※Wee클래스 3개년도 구축 실적의 평균값인 8,103개의 2% 향상된 목표치 수립

□ 기대효과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사안 처리 내실화
- 시·도교육청별 위(Wee)클래스 심리상담을 지원하여 초·중등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치유 및 일상회복 지원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컨설팅 지속 운영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피해학생 상담·치유 지원 지속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김병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6847
------	-----------------------------	-----	--------------------	------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생활문화과

□ 과제개요

-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중·고등학교 대상 컨설팅 강화
-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안처리 역량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대응 체계 강화

* '22.11. 현재 15개 시도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구성·운영

** (전체 교육청(17개) 사안처리 지원단 구성·운영) 내부 및 외부위원(변호사, 상담사 등)

으로 구성, 학교 내 중대·심각한 성 사안 발생 시 조사 및 사안처리를 통합적으로 지원

-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설치 유도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운영 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21~22년 평가)
- 시도교육청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지방공무원 국가정책수요 인력 지원('21. 8명, '22. 12명(+4명))
- 교육청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안처리 자문·컨설팅 지원('21년, 8건/'22년 5건)
- 학교에서 사안처리 시 주요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사례 형태로 엮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 개발·보급('21.1.)
- 학교현장의 특성과 교육관계 법령을 반영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대응 가이드북' 개발·보급('22.12.)
-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 내 성폭력을 포함한 학폭 실태조사 실시 및 피·가해학생 보호·선도 조치 요청('21. 4.12~4.30)
 - * 제20차 교육실태회복추진단 회의를 통해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및 향후계획” 보도자료 배포(2021.7.6.), YTN·
-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발생 초기 피해학생 보호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가해자·피해학생 분리조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시행령 개정
 -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 예외 적용사항(피해학생의 반대의사, 교육활동 미운영 등)에 대한 명문화 조치를 위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조 신설('21.6.22)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역량 강화 지원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담당자 연수 실시(시도교육청 '22.5월/교육지원청'22.9월/11월)
 - 4세대 나이스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시스템' 개발 중(시범 운영 '23.3월~)
- 가해학생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학생부 기재 방안 개선' 추진
 - 전학(8호)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하고, 학급교체(7호) 조치는 졸업 시 심의를 거쳐야만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22.9.)
 - ※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개정('22.9.23) / 시행('23.3.1)
- 학교폭력 신고·감지 체계 개선을 통한 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온라인 시스템(App) 구축
- 성폭력 등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 교원의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공정하고 엄정한 사안처리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보급('21.3)
 - 시도교육청별 학교장·책임교사 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사안처리 지원(연중)
 - 학교전담경찰관과 단위학교 책임교사 간 성폭력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 협의('20.9)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기반 강화 및 일상회복 지원' 사업 추진
 - ※ 부내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시도교육청 평가·인력·예산확보 지원
 -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교부금 교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지원 지속
 - ※ 시도교육청별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23.3월~9월)
- 추진 내용 및 방법
 - 교육(지원)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 계속
 - * 특별교부금 지원('20.~'23.), '23년 지방공무원 국가정책수요 확대 반영(+6명) 추진

- 교육부-시도교육청 전담조직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근절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실시
-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안처리 직무연수 운영 및 사안처리 콘텐츠(매뉴얼 등) 개발·보급
 - * 시도교육청에 교부금 교부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며, 직무연수 및 콘텐츠 개발 등 공통 적용 사업은 관련 전문기관 위탁
- 시도교육청별 학교장·책임교사 대응 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사안처리 지원(연중)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및 일상 회복 지원' 사업 계획 수립·시행 -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협의체 구성 -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교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발 보급
2/4분기	-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협의체 운영 -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시도교육청별 학교장·책임교사 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사안처리 지원
3/4분기	- 시도교육청 및 학교 사안처리 담당자 직무연수 운영
4/4분기	-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예산 현황('22.10.31.기준)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313	313	450	137	43.7
특별교부금	313	313	450	137	43.7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안정적 운영 지원	534	534	654	120	22.8
특별교부금	534	534	654	120	22.8
○ 중앙단위 사안처리 지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180	180	300	120	66.7
특별교부금	180	180	300	120	66.7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성희롱·성폭력 교육(지원)청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만족도(%)	87	88	92	90	역량 강화 교육 이수자 만족도 설문조사 (최근 3개년도 실적 평균치 고 려해 목표 산정)
○ 성과목표치 산식 : 직무연수 참여자 5점 리커트 척도 조사 후 환산					

□ 기대효과

- 시도교육청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 폭력 피해 조기 발견 및 신고·긴급 도움을 통한 피해학생 보호 강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시·도교육청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지원 및 모니터링 등 지속 추진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보급 등을 통한 업무 담당자의 사안처리 역량 강화 지원
- 학생보호 온라인 시스템(App) 시범 운영 및 보급을 통한 피해학생 보호 강화 지원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111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생활문화과		이준세 주무관 정민재 사무관		044-203-7113 044-203-6898

□ 과제개요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근절체계 구축
 - 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 일선학교·학부모의 '안전한 학교' 조성 요구 증가에 따른, 국회 및 행정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시급

□ 그간의 추진실적

- 전국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정례화('21~)
 - 초·중등 및 대학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상시점검* 체계 구축
 - * 최소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지역 공공기관 협조, 전문기관 위탁 등) 추진,
 - ※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23.2.22.), 경기 광덕초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현장방문('23.3.16., 행안부·교육부·경기교육청)」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학교 내 구성원이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학교 맞춤형 대책 마련
 - 첨단기술을 활용한 점검체계 고도화 추진 및 불법촬영 점검 간편 수단 보급 등으로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실현
- 추진 내용 및 방법
 - 학교 단위 '불법촬영 없는 학교' 선언 캠페인 추진 및 학내 구성원 참여 행사와 연계한 '불법촬영 예방·근절 홍보, 교육 운영 등
 - 간편 점검수단(PVC(셀로판) 탐지 필름) 보급 및 첨단기술 점검체계 보강, 취약구역에 긴급벨 설치 등

교육부	불법촬영 예방을 포함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수립
교육청	관할 학교 불법촬영 예방·점검계획 수립 및 위탁점검 지원
단위학교	학교 차원의 상시 점검, 학교 자율적 예방활동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연 2회 이상	-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추진
	- 신학기(3월, 9월) 학교별 자율적 예방활동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학내 구성원이 주도하는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의식·문화 조성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학교 맞춤형 예방대책·대응 지속 지원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전건우 사무관 이준세 주무관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7113
------	------------------	-----	--------------------	------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육데이터과

□ 과제개요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법제화를 위한 법령 개정
- 대학 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대학 정보공시 등에 공개 의무화

□ 그간의 추진실적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선정*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 계속(‘22년, 349백 만원)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 실태조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제작(3종), 직무연수 실시(6개과정)
 - * ’19년~’20년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21년~’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을 대학 정보공시 신규 항목으로 반영
 - ’22년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설치여부, 전담인력 지정 여부, 인원 및 규정 여부 등의 현황 조사 및 대국민 공시(’22.10월)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완료
 - 고등교육법 개정(’21.3.23.개정, ’22.3.24.시행)으로 인권센터 설치 법제화에 따라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완료(’22.3.22.)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사업 지속 추진(’23년, 448백만원)
- 추진 내용 및 방법
 - 중앙센터의 실태조사를 통한 대학 전담기구 현황 파악, 예방교육자료 개발·배포직무연수, 자문·컨설팅 확대
 - * 대학 내 전담인력의 역량강화 목적 등을 위해 업무 관련 현황 종합 파악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체계 구축 사업 계획 수립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전담기구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2/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 착수
3/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 실태조사 실시
4/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 완료·배포

○ 예산 현황('22.10.31.기준)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391	383	491	100	25.5
국비	391	383	491	100	25.5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 관련 매뉴얼 개발·배포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건 완료	매뉴얼 개발 1건	업무매뉴얼 개발·배포
○ 성과목표치 산식 : 해당 없음	만족도 80%	만족도 90%			

☐ 기대효과

- 대학의 사안처리 역량 및 책무성 강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운영 계속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육데이터과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최홍보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6320
------	----------------------------	-----	--------------------	------	------------------------------

□ 과제개요

- 정직 이하 처분을 받은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이 교단 복귀 시,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폭력예방 교육 및 상담 실시 의무화
-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 및 연구자에 대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시도교육청 2019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 포함 하도록 권고('19.1월)
 -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성비위 교원 재발방지 교육 자체 계획 수립·추진 (19.4월/서울 30시간, 광주 20시간, 부산 15시간 등)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 완료, 시도교육청 및 학교 배포('19.2.28)
 - 전문가와 교육청, 학교 현장 등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정 및 보급('20.9.)
 - 학교 현장의 특수성 및 교육관계 법령 등을 반영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응 가이드북' 개발·보급('22.12)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시 성 비위 등으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에 대한 과제 즉시 중단 및 참여제한(1년) 조치 반영('19~)
 - ※ 2021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2021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대상인 가톨릭대 시과학연구소 연구책임자 주모 교수의 성비위 관련 징계 조치에 따라 연구책임자 직위해제 및 책임자 변경, 연구비 감액 조치('19)
 - ※ 박사후국내연수 연구책임자 성비위 관련 해임에 따른 과제 중단 및 참여제한('21)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대학 내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교육 내실화
 - 연구과제 선정시 성비위 징계 교수의 학술지원대상 제한 계속
 - 교단에 복귀하는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의 재발방지교육 강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재발 방지 교육 교수법 등 직무연수 실시
-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에 따라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

[참고] 이공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제26조 (부가조건) ⑨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지원대상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을 포함한다.)가 대학 자체감사 또는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즉시 (연구책임자의 경우) 과제를 중단하고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 등의 경우) 과제 참여를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징계가 확정된 학술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지원대상자가 성비위 및 갑질 등으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직 이하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학교에 복귀 시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검토
-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협의회 등을 통한 가해교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상담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체계 구축 사업 계획 수립
2/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 착수
3/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
4/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 완료·배포

○ 예산 현황('22.10.31.기준)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국비)	391	383	491	100	25.5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대상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교육 교수법 직무연수(회)	2	23	11	12회	직무연수 실시 결과 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직무연수 실시 횟수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사업 '22년 사업기간: '22.3월~'23.2월

□ 기대효과

- 대학 내 전담기구 담당자 대상 직무연수를 통한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교육 내실화
- 성비위 징계 교원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 가해교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상담 이행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교육에 관련 직무연수 실시 계속
- 성비위 징계 교원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계속
- 시·도교육청별 가해교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상담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술진흥과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성미정 사무관 임수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6854 044-203-6871
------	---------------------------	-----	-------------------------------	------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과제개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체계 확립
 -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문화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성평등 인식 제고 교육과정 운영
 - 문화 예술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성폭력 예방콘텐츠 개발·보급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문화·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 그간의 추진실적

- (예방교육)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화('20.6.,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개정), ▲예술, 영화, 대중문화, 출판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18년~, 계속), ▲민간보조사업 수행 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점검('21.'22년 11월)
- (문화분야 특화교육)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예방교육
 -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18~'20 총 51명)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 과정 지속 운영
- (실태조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 공동조사표 활용, ▲'21년 문화예술분야·문화관광해설사, ▲'22년 게임·음악산업 분야 조사 실시
- (행동강령 개발) 문화분야 종사자 교육용 콘텐츠 및 행동강령 개발(28종)
 - 예비예술인 및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용 콘텐츠 개발('20~'21 14종), 현장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개발('20~'22 14종)
- (찾아가는 교육) 현업 예술인, 예술대학 등 예비예술인 대상 교육현장 연계
 - 문화 분야(예술, 콘텐츠) 및 영화계 전문강사를 활용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0~'22.10월 총 908회 39,510명)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민간보조사업 수행 시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점검
-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개발사업 추진 방식 개선(분야 확대 등)
- 3개년간('22~'24년) 콘텐츠산업 세부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조사 실시
- 문화예술계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등 지속 실시(계속)

○ 추진 내용 및 방법

-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행점검·관리(주요 공공기관 등 대상, 연 1회)
- 기존 개발된 행동강령 콘텐츠 등 지속 확산 노력하되, 성희롱·성폭력 실태의 심각성과 중복 방지 등을 감안, 부처 소관 타분야(체육 등) 행동강령 개발 추진
- 콘텐츠 산업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지속 추진

* ('22년) 게임·음악산업, ('23~'24년) 광고·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등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예방교육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도출 - 행동강령 개발 사업 계획 수립 - 콘텐츠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계획 수립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 사업 수행단체 및 개발단체 공모, 개발 추진 - 실태조사 수행단체 공모, 조사 추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지속 추진 및 모니터링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 개발 및 예방교육 추진 - 실태조사 결과 도출 - '23년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예방교육 의무 이행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 평등 환경 조성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280	251	270	△10	3.57
국비	280	251	270	△10	3.57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명)	예비예술인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예방교육 실적 (16,045명)	예방교육 실적 (15,267명) * '2210월 기준	예방교육 실적 (10,920명)	'21년 및 '22년 실적 초과달성에 따라, '22년 목표치(전년도 의 20%상향)보다 30%상향
○ 성과목표치 산식 : 전년도 목표치×130%					

□ 기대효과

- 문화예술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과 연결을 통한 내실있는 예방교육 추진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 확립으로 종사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예술 환경 구축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예방교육-행동강령 개발·확산 등 순환 구조에 의한 예방 체계 강화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김현정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2366
------	----------------------	-----	------------	------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과제개요

-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 명문화 추진, 표준계약서 활용 시 정부지원 우대 적용

□ 그간의 추진실적

- **(표준계약서 반영)** 문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분쟁해결 절차 명시 등 관련 조항 반영
 - * ▲성범죄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피해구제조치
 -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문 반영 표준계약서 현황('22.11월) : 11개 분야 57종 (대중문화 4, 만화 6, 방송 6, 출판 9, 예술 4, 미술 9, 애니메이션 4, 이스포츠 3, 직장운동경기부 2, 프로스포츠 5, 공예 5)
 - 표준계약서 사용 시 정부지원·공모사업 우대('20년 584억) 및 장르별 의무화 추진('20년~)
 - * '20년 영화(115억), 만화(14.6억), 방송(148억), 출판(15억), 공연예술(254억), 미술(37억)
- **(민간보조사업 관리)**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수행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등을 위한 보조금 지침 개정 및 안내서 마련·확산('21.4월, '22.5월),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정례화('21·'22년 11월)
 - * 보조사업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가해자 배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보조금 교부 취소 등
- **(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조사 및 제재를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9.25.)
 - *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절차, ▲신고사실의 조사, ▲가해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배제 기준 등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분쟁해결 절차(문체부 신고, 인권위 진정) 명시(계속)
 - * 대중문화 2종(계약해지, 피해구제), 만화 6종(피해구제)

- 민간보조사업 수행단체 대상 보조사업시 가해자 배제 여부 등 점검(계속)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가해자 제재 관련 세부 시행체계 구축

○ 추진 내용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및 분쟁해결절차 명시 확대
 - *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피해구제
-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등 이행현황 점검(계속)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제34조(시정명령),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관련 심사지침 및 세부 운영규정 제정(신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2년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결과 도출
2/4분기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 표준계약서 8종 개정 추진(대중문화 2종, 만화 6종) - 예술인권리보장법 성희롱성폭력 심사지침 제정
3/4분기	- 표준계약서 8종 개정 완료(대중문화 2종, 만화 6종) - 예술인권리보장법 가해자 제재 관련 세부 운영규정 마련
4/4분기	- 표준계약서에 피해구제 관련 조문 명시 지속 추진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 '23년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가해자 제재 근거 마련					
○ 성과목표치 산식 : 권리보장법 관련 성희롱·성폭력 심사지침 (1건), 가해자 제재 관련 세부 운영규정(1건)	성폭력 방지 조문 명문화 (7개분야)	성희롱 피해구제 조치 명문화 (5개분야)	성희롱 피해구제 조치 명문화 (8종)	가해자 제재 관련 지침 등 운영 규정 마련(2종)	○본 과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해자 제재 관련 규정 마련'으로 '23년 목표치 변경

□ 기대효과

-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문 지속 확대, 가해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 등으로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및 공정한 보상체계 강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문화분야 표준계약서 활용·가해자 제재 강화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관련 조문 개정(업계 및 관계자) 지속 협의
 - 정부 지원사업 대상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종류, 규모 등) 등
 - 「예술인권리보장법」상 예술인보호책임자(예술지원기관) 제도 운영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김현정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2366
------	----------------------	-----	------------	------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과제개요

- 산재되어 있는 관련 분야 상담센터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심층연구)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방안 및 실태조사 방법 연구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성평등센터 개선방안 연구 등 추진
 - 분야별 상담센터 사례 분석 등을 통한 피해지원 방안 도출('20년)
 - * 신고·상담 사례 분석, 국내외 법령·제도 조사, 법률 제·개정, 예방교육 효율성 제고, 상담센터 연계 및 홍보 강화 등 피해지원 방안
 - 콘텐츠산업 성평등 실태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개선 및 교육 개발 연구를 통해 콘진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보라) 기능 재편('22년)
- (모바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경력정보시스템) 모바일웹*을 통해 신고 가능**, 예술인 성폭력 피해지원 및 예방교육 신규 시스템 개발에 반영
 - * (종전) PC에서만 접근→(개선) 웹반응형으로 제작, 모바일로 접근 가능, 별도 App설치 불필요
 - ** 익명 신고 기능 신설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 (피해지원 및 연계) 센터 간 정례회의를 통한 연계체계 강화
 - 예술인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콘텐츠성평등센터(보라), 영화성평등센터(든든)을 통해 심리상담·의료·법률 지원
 - * ('20~'22.10월) 심리상담 61건, 법률지원 195건, 의료지원 5건
 - 분야별 상담센터 정례회의('20~'22년 총 7회) 등을 통해 센터별 업무계획 공유, 애로사항 등 운영관리 개선방안 논의, 통일적 지원기준 마련
 - * ('20년) 예술계 상담지원센터 접수사건의 불공정행위신고센터로 이관·연계방안 등 ('21년) △(상) 상담-신고센터 연계 및 피해 지원 기준, △(하)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현황 및 공유 방안 논의, ('22년) △(상) 상담신고 운영현황 및 계획 공유, 애로사항 수렴, △(하) 우수사례 및 운영실적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신고센터(조사·사정조사)와 상담센터(피해지원가능) 간 사례 공유 및 정책 개선 등 연계 강화(계속)

○ 추진 내용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9월)에 따라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및 신고상담센터 역할 강화*
 - * 법상 ‘예술인신문고’로 기능 강화 : (접수, 피해지원) 복지재단, (조사) 문체부, (심의) 위원회
- 영화분야 피해지원 및 사건처리 절차 매뉴얼 재정비(든든)
 - * 피해 지원 범위, 한도 소개, 신고 피해 유형 및 영화계 내 사건 처리 절차와 기 지원 받은 피해자의 의견을 정리하여 정보 제공
- 신고센터와 분야별 상담센터 간 연계 강화 및 정책 개선 등을 위한 정례 협의체 운영(계속)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영화분야 피해지원 및 사건처리 절차 매뉴얼 재정비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설치
2/4분기	- 상담신고센터 정례협의회 운영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운영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3/4분기	-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확대 개설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운영
4/4분기	- 상담신고센터 정례협의회 운영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운영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중 감	
	예산(a)	집행(a') (*22.10월 기준)		중감액 (c=b-a)	중감률 (c/a×100)
계	1,248	768	2,199	951	76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672	281	1,623	951	142
○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	126	37	126	-	-
○ 영화정책지원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450	450	450	-	-
국비(일반회계)	798	318	1,749	951	119
국비(영화발전기금)	450	450	450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분과위원회 설치	모바일 상담 시스템 확대(3개소)	정례 협의회 운영 2회	○ 정례협의회 운영 2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설치*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9)
○ 성과목표치 산식 : 해당없음			○ 분과위원회 설치를 위한 사전 조사		

* '22년 성과목표인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설치'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른 의견 수렴 일정 등으로 즉시 구성되지 못하고, 현재 권리보장위원회 및 하위 분과 구성 중임('22. 11월 현재)

□ 기대효과

- 상담센터 연계 강화를 통해 분야별(문화예술, 콘텐츠, 영화분야)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체계 구축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지속
 -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참여 지원
 - 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관련 필요 예산 확보 노력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등 확산 지원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김현정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2366
------	----------------------	-----	------------	------	---------------

□ 과제개요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20.8.5)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조사, 피해자 지원,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교육 및 실태조사 등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상담·신고 처리 강화) 개소 이후('20.9.2.~'22.10.31.현재) 상담 2,487건, 신고 848건 접수, 신고사건 처리 580건(68.3%)
 - (평균 처리건수) 전년 대비, 신고사건 월평균 처리건수 13.9건 증가 (19.2건→33.1건, +82.8%)
 - (평균 심의건수) 전년 대비, 심의위원회 월평균 심의건수 6.6건 증가 (9.5건→16.1건, +86.3%)
- (신고여건 강화) 지역사무소 개소 및 인권살피미(감시관) 등을 통한 신고 접근성 강화
 - (지역사무소 확대) '21년 3개소(경기·대전·경남)→'22년 5개소(광주, 원주 추가)
 - (인권살피미) 훈련장·합숙소 등 훈련상황 점검 및 선수 등 상담('21년 30명 총 10개 대회 83회 → '22년 30명, 총 4개 대회·74개팀, 84회)
- (피해자 지원)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지속 실시

구 분	의 료	법 률	정서심리	임시주거	체육활동	계
2021년	14	14	29	2	미시행	59
2022년	7	11	11	-	2	31
계	21	25	40	2	2	90

- (비리근절 예방 활동 실시) ▲인권보호 교육, ▲인권 실태조사, ▲윤리센터 인지도 제고 등 예방활동 실시
 - (인권보호 교육) 법정의무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및 재교육) 및 대학운동부 인권교육 등 총 10만여명 실시*

* '20년 702명 → '21년 51,507명 → '22년 51,569명('22.10월말 현재) / 총 103,778명

- (실태조사)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예방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실시*

* '21년 초·중·고학생선수 및 프로·실업팀 선수 대상, '22년 장애인체육인 대상

- (윤리센터 홍보) 홍보대사, 홍보채널, 주요 체육행사 현장홍보 등을 통한 스포츠윤리센터 및 주요 사업 홍보

* 홍보대사(박지성, 김자민, 최현미, 곽민정), 홍보채널(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약 2,900여명 구독), 현장홍보(전국체전·장애인체전, 전국소년체전·장애인학생체전 등)

○ (윤리센터 여건 개선)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확충을 통한 여건 개선

- (인력 보강) '20년 개소 대비 73% 증가('20년 26명→'21년 40명→'22년 45명, +19명)

- (예산 증액) '21년 대비 16.4% 증액('20년 31.9억→'21년 53.1억→'22년 61.8억, +8.7억)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사건처리 실효성 확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 추진 내용

- (사건처리 실효성 확보)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 사건에 대한 체육 단체 사건처리 기한 명시* 및 신고방해, 축소·은폐 시 처벌규정** 마련

* (현재) 처리기한 미규정 → (신설) 징계요구 접수 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 처리

** (신설) 신고방해, 축소·은폐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인권 침해 및 비리행위 신고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확인 및 이수독려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스포츠윤리센터-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연계망 구축*

* 스포츠윤리센터 이수자 현황을 각 단체에 송부하여, 미이수자에 대한 확인 및 이수 독려

○ 추진 방법

- (사건처리 실효성 확보) 사건처리 기한 명시 및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경기인 등록 시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 개선 및 스포츠윤리센터 LMS시스템과 연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협의(문체부-윤리센터-대한체육회)
2/4분기	○ 처리기한 마련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마련
3/4분기	○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 개선 및 윤리센터 시스템 연계
4/4분기	○ 처리기한 마련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국회통과)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22.10.31.기준)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6,185	3,942	7,268	1,083	17.5
국비	6,185	3,942	7,268	1,083	17.5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신고사건 처리율*	스포츠 윤리센터 개소 (‘20.8.5)	예방 교육 실시 (10,000명)	신고사건 처리율 (68.3%) * ‘22.10.31.기준	신고사건 처리율 (60%)	*처리일수 150일 (1년 중 약 40%) 감안 연간 접수 사건 처리율 60% 설정
○ 성과목표치 산식 : 총처리 건수/총접수건수×100					

* 신고 사건 처리 : 스포츠윤리센터 접수된 사건에 대한 징계요청, 수사의뢰, 감사의뢰, 기관 경고, 기각, 각하, 권고, 직권조사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

☐ 기대효과

○ 체육계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 등 체육계 공정성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조직 기반(예산·인력) 확대, 조사 역량 등 전문성 강화로 스포츠 인권보호 전담기구로서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	담당자	이만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3144
------	--------------------	-----	------------	------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과제개요

- 체육계 내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 제고 및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해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연계상담’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19년~)
 - 폭력예방교육 지원이 필요한 선수촌·학교·단체 등 소속 체육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 * ('19년) 중앙 특화교육 → ('20년~) 17개 시·도(18개 권역) 교육으로 확대
 - ** ('20년) 410회 → ('21년) 398회 → ('22 10월 기준) 194회 실시

□ 2023년도 시행계획

- 체육계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민감성 제고와 인식 개선 확산 추진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 시도 교육청, 대한체육회, 체육 단체·연맹·협회 등 협업 교육대상 발굴 지속
 - 강사 소모임 및 관련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한 맞춤형 강사 역량강화 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3/4분기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4/4분기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3,880	3,695	4,147	267	6.9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796)	(796)	(808)	(12)	(1.5)
국비	796	796	808	12	1.5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예산의 일부를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4.1	88.8	86.0	참여자 대상 폭력 예방 이해증진 인식 변화 실천의지 등을 조사한 결과의 평균값

※ 과거 3년 간(2020년~2022년) 실적 평균치(85.5점) 보다 0.5점 상향하여 목표 설정

☐ 기대효과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로 체육계 내 폭력예방 공감대 확산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교육 기회 및 접근성 부족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송재언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2 02)2100-6445
------	----------------	-----	--------------------	------	------------------------------

□ 과제개요

-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영역별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실질적 구제를 위한 시정명령 및 제재 규정 등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20대 국회 법률안 4건 의원발의 * 임기만료 폐기 3건, 철회 1건
- 21대 국회 법률안 1건 의원발의
 - 성희롱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관련 발의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
- 추진 내용 및 방법
 - 기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관련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법안 발의 시 부처의견 제시 및 관계부처 의견조희 등 입법 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4/4분기	- 관련 법률안 입법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양성평등기본법」 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근거 마련	-	-	관련 의원입법안 발의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등	

□ 기대효과

- 성희롱행위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도입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됨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국회 입법 지원 지속

※ 시정명령 도입 근거 신설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발의되어 병행 검토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김민성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2
------	----------------	-----	------------	------	--------------

□ 과제개요

○ 주요내용

- 취업규칙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토록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 20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18.3월 의원발의) 임기만료 폐기

* 권미혁의원 발의안('18.3월), 8.28.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

○ 법인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 검토

- 20대 국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기만료 폐기

* 임이자의원 발의안('18.5월)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가능 여부 연구용역 실시('18.12월)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이행 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법률」 개정 완료('21.5월)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안착 지원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지속 추진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13조제4항이 사실상 취업규칙 기재의무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는 만큼,
 - ①사업장 감독 시 동 의무의 이행 여부 집중 점검·지도 및 ②신고사건 조사 시 예방지침 마련 여부 확인 → 행정지도하고 미이행시 차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실시

*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는 동 조항의 효과성 분석 등을 전제로 신중히 검토

○ 추진 내용

-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22.5월 시행)의 현장 안착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사업장 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작성 및 게시여부 집중 점검·지도, 표준 지침(안) 배포 등 사업장 지원

○ 추진 방법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홍보 강화(리플릿, 포스터 배포 등)
- 남녀고용평등법 의원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23년 사업장 정기감독계획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점검 관련 사항 반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현장 안착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 의원(안) 심의 지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지도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현장 안착 지원(계속) - 남녀고용평등법 의원(안) 심의 지원(계속)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지도(계속)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법 의원(안) 심의 지원(계속)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지도(계속)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법 의원(안) 심의 지원(계속)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지도(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	-	법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작성 및 게시 여부 점검·지도	-	-	-	1천개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장 점검 결과

☐ 기대효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이 사실상 취업규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유도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 대한 제재 정비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제재 정비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전제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근로감독관 교육 등 시행 준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작성의무 관련 제도가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지속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송미나 서기관 임동훈 주무관	전화번호	044) 202-7446 044) 202-7472
------	------------------	-----	--------------------	------	--------------------------------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고용정책과

□ 과제개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건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평등 근로감독 강화
- 성희롱사건 해결 이후 2차 피해 등에 대한 사후 행정지도 추진
- 성희롱 사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전문가 컨설팅 활성화
- 남녀고용평등 전담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추진
-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전문 상담기능 보강 등 피해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범위를 사외 전문가까지 확대 추진* 검토하고 여성위원 위촉 비율 제고 지도

□ 그간의 추진실적

- '18년부터 모든 근로감독* 유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분야 점검
 - * '18년 26,182개소, '19년 25,415개소, '20년 15,797개소, '21.10월 기준 15,246개소
 - ↳ '20년, '21년의 경우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감독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완료('19.9.1 시행)
 - *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근거 마련
 - 건강·고용보험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고용평등(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 * 감독건수(개소): '17년 555 → '18년 659 → '19년 700 → '20년 400 → '21년 868 → '22.10월 901(1,000개소 목표)
- 성희롱 사건 발생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활용토록 안내
- 전국 지방관서에 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18.9.1)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 * 2018년도(18회), 2019년도(7회), 2020년도(4회), 2021년도(2회), 2022년도(2회)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대상 확대 및 여성 위촉 비율 저조 사업장 대상 위촉 지도
 - * ('22.10월 기준) 4,888개소 위촉<여성: 26.7%>
 - ** '19년, '22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 비율 제고 지도
 - ('20년과 '21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업무수첩을 배부하는 것으로 워크숍 대체)

- 고용평등상담실 전담 인력 확충 등 상담 기능 강화로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교육·홍보를 통한 분쟁 사전 예방 등 고용 평등 의식확산 제고
 - * 상담 인력(명): ('18) 21 → ('19) 31 → ('20) 31 → ('21) 35 → ('22.10) 45
 - * 교육개소, 명: ('18) 361/21,280 → ('19) 571/23,186 → ('20) 280/8,860 → ('21) 212/7,183 → ('22.10) 236/ 9,889
- 상담수요에 적합한 전문·종합적 안내지원*, 2차 피해 예방 등 심리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18~)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 * 상담실적(건): ('18) 9,895 → ('19) 10,829 → ('20) 11,328 → ('21) 11,892 → ('22.10) 11,089
 - ** 심리지원(명, 회수): ('18) 42/331 → ('19) 118/831 → ('20) 120/823 → ('21) 151/919 → ('22.10) 148/777
- 고용평등상담실-지방관서 간 권역별 간담회*를 통한 상담·사건조사 과정에서 연계·협업 필요성 공감 등 활성화로 피해상담·구제 실효성 제고
 - * '22.6.7~6.30., 8회 개최<근로감독관 54명(49개 관서), 상담원 39명(상담실 21개소) 참석>
- 우수사례집 제작·배포('22.2) 및 홈페이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상담 등 홍보 강화('22.6~)로 고용 평등 인식확산 등 인지도 제고
- 전담 인력 대상 교육('22.5), 수시 간담회 개최(8회), 현장 방문지도(9개소),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22.9) 등 상담실 운영의 내실 도모
- 고용평등상담실-유사 사업 간 연계·협업 방안 마련('22.11)으로 고용 평등 분야 상담 대응·지원의 수용성 제고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직장문화개선 유도, 근로감독관 역량 및 성인지 감수성 강화

○ 추진 내용 및 추진방법

-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된 사업장의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조사 착수
-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하여 모성보호 제도 위반 신고사업장 등을 고용 평등 및 모성보호 감독 대상풀(pool)에 포함하여 점검대상의 다각화를 통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근로감독 강화

- 사업장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도구를 사업장 감독 시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유발되는 조직문화 등에 대해 개선지도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업무 매뉴얼 보강
- 고용평등상담실 - 관계 기관 간* 연계·협업 활성화로 피해지원의 실효성 도모
 - * 유사 상담 기관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수요 맞춤 상담·지원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방노동관서(사건조사·감독)와의 유기적 협업으로 실질적 피해 권리구제 도모
- 홍보물(리플릿·영상) 제작·배포 및 홈페이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상시 온라인 상담 대응·지원으로 인지도 확산 및 피해자 접근·편의성 도모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여성 위촉 비율의 제고 등 개선 노력 지속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관 업무 매뉴얼 보강 및 관련 지침 시달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여성 비율 제고를 위한 위촉 확대 지도 공문 발송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리플릿 제작·배포 및 온라인 등 홍보)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전담 인력 역량 교육, 간담회·현장 방문지도 등)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워크숍 실시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계속)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관계 기관 간 연계·협업 실태 파악, 현장 간담회 등 추진)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계속)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23년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24년도 운영기관 선정 계획 수립 등)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2,846		2,480	△366	△12.8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국비)	1,200	1,200	1,215	15	1.3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치		
○ 성과지표명 : 고용평등 상담실 상담실적(단위:건)	11,328	11,892	12,000	12,146	'22년도 운영기관(21곳) 상담실적
○ 성과목표치 산식 : 11,588건 (22실적)+(11,892건(21실적)×558건 (최근 3년 상담실적 증가율×4.7%))					

□ 기대효과

-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기법, 감독관 역량 등의 강화로 해당 사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유도 효과도 기대
- 정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 부담이 적은 민간단체 고용평등 상담실의 특성을 적극 활용,
 -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및 분쟁 사전예방을 통한 고용평등의식 확산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등 지속 지원
- 고용평등상담실 전담 인력 교육*, 수시 간담회 개최·현장 방문지도, 정책 자료 공유 등을 통한 수요 맞춤형 상담 대응·지원으로 운영의 내실을 도모

* 법령·지침 등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교육, 상담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컨설팅 등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장순남 사무관 송미나 서기관 강우정 사무관 민세걸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7721 044) 202-7446 044) 202-7476 044) 202-7471
------	-------------------------------	-----	--	------	--

□ 과제개요

- 사업장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표준 교육 동영상 제작('20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기준 마련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 ('19.12월, 21.12월)
- 인사 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21.11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양성과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10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교육안) 제작 ('22.12월)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내강사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22.12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제작)

○ 추진 내용

-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내강사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 추진 방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튜브 탑재 등 온라인 홍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내강사양성을 위한 교육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배포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내강사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2/4분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내강사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3/4분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내강사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4/4분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 제작 및 배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2,846		2,480	△ 366	△ 12.8
▪ 사업장 교육자료 제작 (일반회계)	79		79	-	-
국비	79		79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1	1	1	1	교육영상 제작 여부

□ 기대효과

- 사업장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내강사에 대한 교육 실시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제작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지속 홍보 추진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송미나 서기관 임동훈 주무관	전화번호	044) 202-7446 044) 202-7472
------	------------------	-----	--------------------	------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과제개요

-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등 교육 지원(고용부, 여가부)
 - 소규모 사업장 등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및 교육 콘텐츠 제공·전문 강사 연계(여가부)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 기회 및 접근성 취약 민간기업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중앙(1개소) 및 지역(17개 시·도 18개소)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교육 추진
- 사회초년생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 특화교육' 실시('20년~)
 - 소규모 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등 대상 교육 실시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인식 확산
 - * ('20년) 30회 실시 → ('21년) 115회 실시 → ('22. 10월) 178회 실시
-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보급, 수요자 중심의 효과성 있는 교육교재 활용 지원
 - 사회초년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안내('20년)
 - 일반국민 누구나 여성폭력 감수성을 확인·제고할 수 있도록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개발·보급('20년)
- 분야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자체 제작 콘텐츠 및 타부처·민간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보급

< 추천콘텐츠 제공 현황 >

('22년 10월, 단위 : 종)

구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교육
총 202종	89	35	8	13	57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 등을 통해 보급

□ 2023년도 시행계획

-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및 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통해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인식 확산
- 데이트폭력, 스토킹, 불법촬영 등 새로운 폭력 유형이 대두되는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 지역 강사풀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맞춤형 교육 유형에 적합한 강사를 연계하여 효과성 있는 예방교육 지속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소규모 사업장 및 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소규모 사업장 및 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3/4분기	· 소규모 사업장 및 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4/4분기	· 소규모 사업장 및 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 사업평가 및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3880	3,695	4,147	267	6.9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796)	(796)	(808)	12	1.5
국비	796	796	808	12	1.5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4.1	88.8	86.0	참여자 대상 폭력 예방 이해증진 인식 변화 실천의지 등을 조사한 결과의 평균값

※ 과거 3년 간(2020년~2022년) 실적 평균치(85.5점) 보다 0.5점 상향하여 목표 설정

□ 기대효과

- 민간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콘텐츠 제공에 따른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공감대 확산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소규모 사업장 등 민간기업 종사자 대상 전문 강사 등을 연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성폭력 및 스토킹 등 예방 콘텐츠 제공 및 등 교육 지원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445
		담당자	박종식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562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권익침해방지과

□ 과제개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 및 3개월 내 여성가족부로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요청 시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 하도록 제도화
- 성폭력 피해자의 해고 외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 구체화

□ 그간의 추진실적

-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요청 시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 하도록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 명시 및 각급 기관 통보·시행('20.1)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20.10.20)
-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 통보를 의무화하고,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사건 대응 체계 마련
 -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보완 요구 등 법 개정*
 - * 「성폭력방지법」 '21.1.12 개정/'21.7.13 시행, 「양성평등기본법」 '21.4.20 개정/'21.10.21 시행
-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21.7.13 시행)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사건발생시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고, 중대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본 배포

- *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기관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 추진 내용

-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 추진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해 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 요구 등 조치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본 및 '23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 및 배포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본 배포
2/4분기	-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3/4분기	-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4/4분기	-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20년 표준안 마련	'21년 표준안 마련	'22년 표준안 마련	'23년 표준안 마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여부

☐ 기대효과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조직 내 사건 은폐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시행 등 기대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 요구 및 시정·보완요구 이행사항 점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김민성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2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박용준 사무관 최형윤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164 02)2100-6168

□ 과제개요

- 소청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성범죄 관련 전문가 참여 등 성범죄 관련 심사에 대한 실효성 강화
 - 공무원 성범죄 관련 소청 사건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 및 감경 결정의 엄정성 강화 등을 통한 소청 심사의 실효성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비상임 민간위원에 성비위 관련 전문가 및 여성 민간위원 임명
- 성비위 감경 제한, 고려 요소 등 세부기준 마련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임명
 - * 상임위원 5명 중 1명, 비상임위원 7명 중 4명을 여성위원으로 임명(여성위원 41.7%)
- 엄정하고 내실 있는 심의 및 비상임위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성비위를 포함한 중징계 사건에 대해 부심제도 확대
 - * (종전) 배제징계(파면, 해임) → (개선) 중징계 전체(파면, 해임, 강등, 정직)
-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 소청사건에 대한 감경 시 의결정족수 강화(출석위원 과반수 → 2/3 이상 합의)
 - * 「국가공무원법」 개정('21. 12. 9. 시행)
- 성비위 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소청결정서 공개기준 마련('22. 9. 23)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중징계 대상 성비위 사건의 주심 또는 부심위원을 피해자와 같은 성(性)의 위원으로 지정
 - 성비위 소청 사건의 피해자에게 소청제기 사실 안내
 - * 피소청기관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 답변서 제출과 함께 피해자에게 안내

-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서면 진술 기회 부여

○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비위 사건에 피해자와 같은 성의 주심(부심) 위원 심사(연중)
2/4분기	· 성비위 사건에 피해자와 같은 성의 주심(부심) 위원 심사(연중)
3/4분기	· 성비위 사건에 피해자와 같은 성의 주심(부심) 위원 심사(연중)
4/4분기	· 성비위 사건에 피해자와 같은 성의 주심(부심) 위원 심사(연중) · 「소청절차규정」 개정(피해자 통보 의무, 피해자 진술권 보장)

○ 예산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피해자와 같은 성의 주심(부심) 위원 참여도	-	-	75%	80%	'22년 실적 (75%)
○ 성과목표치 산식 : 피해자와 같은 성의 주심(부심) 위원 사건 수 ÷ 중징계 대상 성비위 사건 수					

☐ 기대효과

- 성별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한 내실 있는 소청심사에 기여
- 성비위 사건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을 통한 소청심사의 실효성 강화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담당자	강하나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1-8665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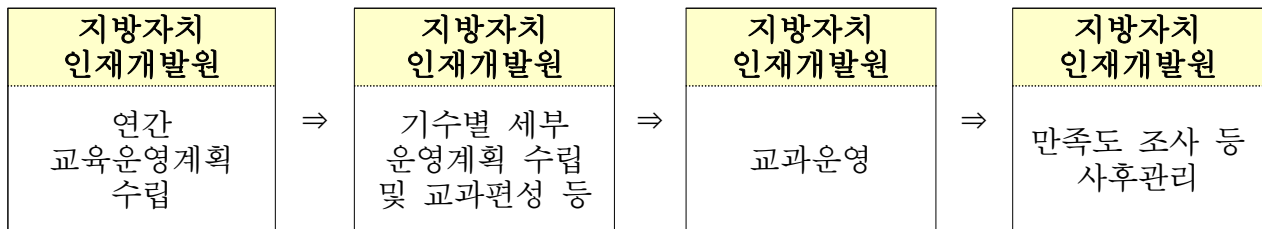
3-2-2-②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과제개요

- (추진목적) 지자체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의식의 내재화를 통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주요내용) 지방고위공무원(3·4급) 및 5급 승진자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시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과목 편성·운영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5급 승진리더과정* 운영 시 여성폭력예방 교육 편성·실시
 -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등
(2~4H/12개 기수 총 3428명 '22년, 13기수 4347명 '21년, 13기수 4678명 '20년)
- 지방고위공무원(3~4급)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편성·실시
 -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 양성평등 발전방향
(2회/2개 과정, 197명)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지방 고위공무원(3~4급) 대상 여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5급승진리더과정* 운영 시 4대 폭력 예방 교육 포함 성인지 교육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과 지속적 편성·운영
- * 기수별 2H, 12개 기수 총 3,200명 교육 예정

○ 추진 내용

- 지방간부급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 지속 운영 및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교과 발굴·운영 등

○ 추진 방법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과 협업을 통한 교과발굴·우수강사 초빙 및 교육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5급승진자, 고위공무원 대상 여성폭력방지교육
2/4분기	5급승진자 대상 여성폭력방지교육
3/4분기	5급승진자 대상 여성폭력방지교육
4/4분기	5급승진자 대상 여성폭력방지교육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여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 만족도(점)	93.7	93.5	91.98	93.1	· 최근 3년간 여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평균 만족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정
○ 성과목표치 산식 : 교과목별 만족도 평균					

☐ 기대효과

- 지방 간부공무원 중심의 여성폭력방지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확산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고위공무원(3·4급) 및 5급 승진자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 지속 운영 및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교과 발굴·운영 등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자	우수희 주무관	전화번호	063-907-5156
------	--------------------	-----	------------	------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 과제개요

-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 신임·승진 공무원 대상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직장교육 등을 통해 **소**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인권 및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 모듈 개발 전파(2018년 ~ 2019년)
 -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탈피하여 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한 수용성·효과성 높은 신규 교육과정 개발·운영
 - * 2018년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대상 시범교육 실시 → 2019년 각 부처 전파
-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신규·승진 공무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 2020년 1,471명, 2021년 2,916명, 2022년 2,133명(1~10월)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주요 시책 교육으로 명시하여 각 부처 차원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추진
 - * 「2023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각 부처·교육훈련기관에 안내('22. 11월)
- 국가인재원 신임·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양성평등·성인지 관련 교과목 편성·실시
 - * 5급 승진자 1,080여명, 5급 신임관리자 400여명, 7급 신규자 380여명 등 2,200여명

- 각 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 신입·승진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도 부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권장·독려

○ 예산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국가인재원 신입·승진 공무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	1,471명	2,916명	2,133명	2,200명	연간 예상 교육인원
○ 성과목표치 산식 : 신입·승진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별 교육 예상 인원의 합계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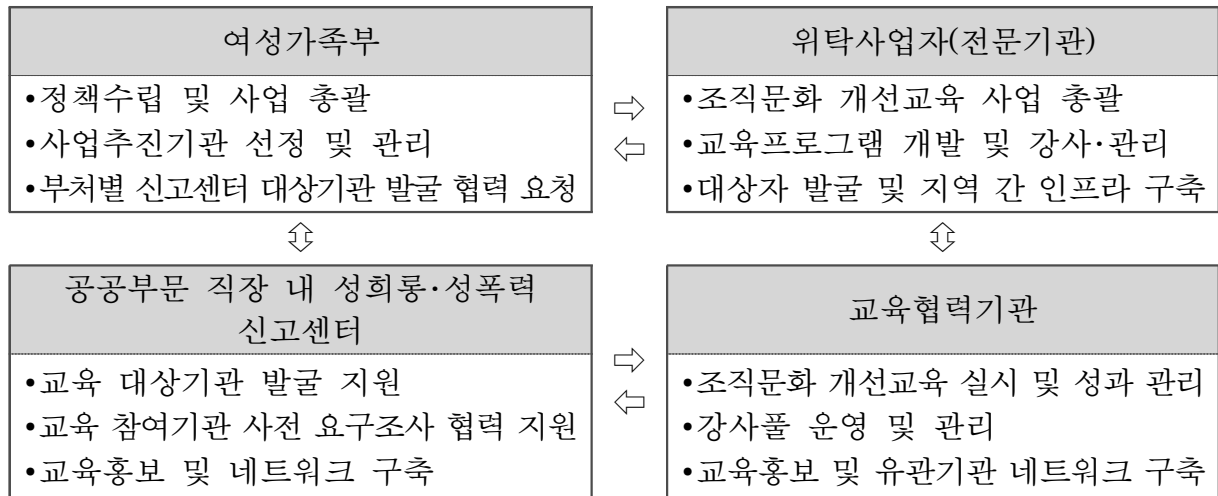
- 공직 내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에 기여
- 신입·승진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대응능력, 양성평등 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 함양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담당자	윤정민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1-8224
------	----------------	-----	------------	------	---------------

□ 과제개요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 및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
 -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교육기관 및 행위자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추진체계 >



□ 그간의 추진실적

- '19년 성희롱 재발방지 조직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18명, 조직문화 개선교육 55회 운영
- '20년 권역별 교육협력 기관 발굴·운영(6개 권역, 9개 기관) 등 안정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
 -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40명, 조직문화 개선교육 88회 운영
- '21년 권역별 교육협력 기관 확충(6개 권역, 16개 기관) 등 교육 인프라 확대
 -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54명, 조직문화 개선교육 92회 운영
- '22년 권역별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6개 권역, 24개 기관) 등 인프라 확대
 -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50명, 조직문화 개선교육 102회 운영 ('22.11월)

□ 2023년도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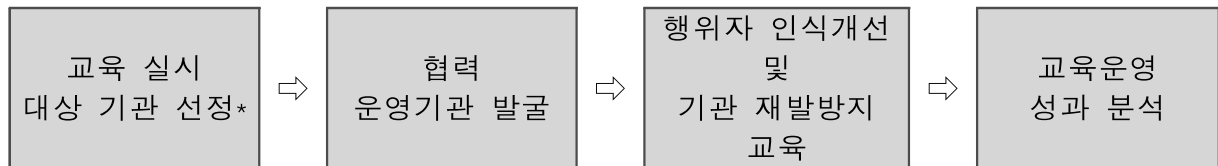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성희롱 행위자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등 교육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강화

○ 추진 내용

- 조직문화 개선 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 운영기관 발굴·운영
- 교육(상담) 전문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한 인력풀 구성
- 성희롱 행위자 등 인식개선 교육 및 조직 내 문화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등 사건 발생기관 대상 사업 연계 추진
-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만족도 조사, 교육 모니터링 등 운영 관리

○ 추진 방법



* 사건발생기관, 신청기관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3년도 조직문화 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마련('22.11) - 조달계약을 통한 사업 위탁기관 선정 -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2/4분기	-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3/4분기	-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4/4분기	-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양성평등기금)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 (200)	475 (200)	500 (200)	-	-
국비	200	200	200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조직문화개선 교육 만족도(점)	83.4	86.4	90	88	최근3년간의 평균실적 대비상향하여설정 (만족도자료감안)
○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참여자 수(명)	40	54	50	50	최근3년간의 평균실적 대비 상향(4.2%)하여 설정
○ 기관재발방지교육 운영 횟수(회)	88	92	102	98	최근3년간의 평균실적 대비 상향(4.3%)하여 설정

☐ 기대효과

- 사건 발생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교육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최형운 사무관 정재순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68 02)2100-6169
------	------------------	-----	--------------------	------	------------------------------

3-2-2-③

기관의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 과제개요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피해자, 제보자의 신고사건 접수 및 상담, 관계기관 이송, 접수사건 처리 및 처리결과 모니터링

□ 그간의 추진실적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신고센터」 설치·운영('18.3.~)
- '기관장 전담신고 창구' 개설·운영('20.12.~)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신고센터 추진실적 >

(단위 : 건수, '18.3.8.~'22.9.3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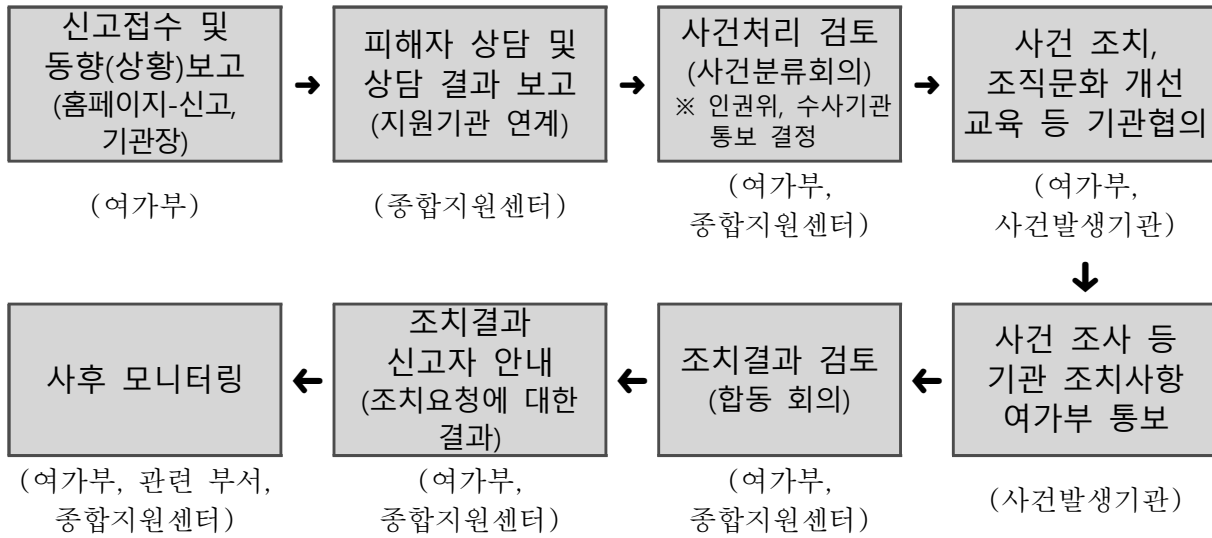
연도	총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소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합계	808	495	112	137	177	121	313
' 18	360	234	26	50	85	73	126
' 19	150	99	20	32	29	18	51
' 20	118	64	5	26	21	12	54
' 21	128	71	7	19	35	10	57
' 22.9	52	27	2	10	7	8	25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기관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
 - 추진 내용
 -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자 교육 등 기관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연계·운영
- * 성희롱 행위자 및 사건발생기관의 관리자·실무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교육 실시

○ 추진 방법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기관 내 신고가 어려운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건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도모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프로그램 지속 운영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최형운 사무관 전국혜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68 02)2100-6166
------	------------------	-----	--------------------	------	------------------------------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군내 성폭력 실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계획 수립 및 맞춤형 교육 강화

○ 주요내용

-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 및 추진
-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능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전 장병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 연도별 성폭력 실태조사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 및 추진

- '22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시달('22. 2월)
 - *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활동, 계급·직책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 내실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정착, 엄정한 가해자 처리 / 재발방지
-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 운영(2회) : 하절기 및 연말연시
 - * 지휘관 특별 정신교육,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 * 성고충 처리체계 및 성폭력 관련 법규교육,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22. 7.15.)
- 부대관리훈령 개정('22. 5.20.)
-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개정 ('22. 3.25./'22. 11. 9.)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23. 3월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 국방부 지시발령(제2022-021호)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22. 5.19.)
 - *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신고~사후관리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강화 △수사기관 등에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 확립
 - △ 슈퍼바이저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 '22년 신설된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신속대응체계 확립

- '22.1월~2월 국방부 및 각 군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완료
 - *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육·해·공군 /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 *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 및 신고 접수단계부터 관리,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의료, 법률 조언 등을 통합 지원

○ 적시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 / 배포

- * '22. 7월 舊 '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개정본 배포
- * 군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사건 전반을 조력하는 상담관의 역할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각 주체별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대응방법 안내

○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식 확산

- * 성희롱·성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22. 4월~6월)로 장병의 직접 참여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 제고, 장병의 생활 속 예방과 행동 개선 기대
 -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UCC, 표어·포스터 2개 부문 (총 1,830작 응모)
 - 선정: 전 분야 대상 1팀, 각 분야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 참가상 3팀 시상

○ 전군 디지털 성범죄 특별 예방교육 시행 ('22. 12월)

- *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유형과 처벌사례, 영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수칙 교육

□ 2023년도 시행계획

○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 및 추진

- '23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시달
 - * 예방이 최고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며,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피해자·목격자 누구든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피해 발생 시 촘촘한 통합지원을 통한 조기 일상회복 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
- 국방부 및 각 군 주관 예하부대 성폭력 예방활동 실태 점검
- 하절기 및 연말연시 성폭력 특별 강조기간 운영

○ 전 장병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지속)

- * 초임자, 지휘관, 사건조사 담당자, 피해자지원 담당자 등 직책 고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맞춤형 콘텐츠 최신화

○ 성폭력 실태조사(연구용역)

- 연도별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군 성폭력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폭력 관련 정책 수요와 법규·제도 개선 소요를 도출

- 성희롱·성폭력 상담접수 현황 및 주기적 평가회의 (정기·수시)
 - * 각 군 성희롱·성폭력 상담접수 현황 종합 / 분석(월간) → 각 군 하달, 예방활동 시 참고
 - * 군기강 확립 협의체에서 분기 단위 군내 성폭력 실태 분석 및 예방대책 제시
-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현장지원 컨설팅 시행 (연중 지속)
 - * 예방교육, 상담, 법률지원 등 패키지화된 현장지원팀 운영
 - * 양성평등위원(민간)과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정책 개선사항 의견 수렴
-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 (15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 사각지대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성고충전문상담관 적정소요 인원 반영 및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보장 △익명성 보장 및 신고전 피해자 지원기능을 갖춘 신고앱 개선 △관련 법령·규정 정비 등
 -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군 맞춤·참여형 조직문화 개선 및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인지 교육	1,580	1,363	1,556	△23	△1.5
○ 군 성폭력 실태조사	191	146	191	전년동	전년동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인지 교육 이수율(%)	95%	95.2%	97.3%	95%	교육 이수자 / 전 간부
○ 군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건)	.	.	1건	1건	연구용역건수

※ '23년 목표치는 '20~'22년 실적의 평균치로 산정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전문강사·전담교관 역량 강화 및 강사 모니터링 : 지속
- 국방부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지속
- 군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담당자	중령 강정은	전화번호	02)748-5171
------	-------------------	-----	--------	------	-------------

3-2-3-②
3-2-3-③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및 수사 역량 강화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과제개요

○ 사업목적

효과적인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제도·인력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함

○ 주요내용

- 피해자 지원 인력확대 및 역량 강화
-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 지원지침에 의거 피해자 누구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
 - * 성폭력 관련 사실을 인지한 모든 군인(군무원)은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으로 보고 의무화
 - *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지원, 인사조치, 법률조언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인원에게만 정보 제공, 그 외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 사실에 대해 비밀유지를 엄수
 - 피해자 희망 시 휴직 및 청원휴가 조치(휴직기간 : 최대 2년 / 청원휴가 : 60일)
 - 군내·외 상담 및 신고, 의료·법률지원 시스템 적극 활용: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스마일센터와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시 외부전문가(제한 시 성고충전문상담관) 참여 의무화
 - * 민간인 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대책 소위원회'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성고충전문상담관 상담인력 정원 확대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한 성고충전문상담관 배치 기준 확대(군단급→사단급)에 따라 상담관 정원 확대('21년 50명→'22년 103명)

-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 사건처리관계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 위탁교육 시행
 - * 4.14.~10.26. / 7개 과정, 14개 기수 *조사관 과정 신설
 - * 이수 : 482명 / 성고충전문상담관 104명, 양성평등담당관 및 정책관계관 211명, 수사관 63명, 조사관 61명, 법무관 43명 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군 통합 워크숍 (연 1회)
 - * 양성평등주간(9.1.~9.7.)을 맞아 「군 성폭력 예방 및 성 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포럼」 및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선정
- 성고충전문상담관 직무역량 강화 및 심리소진방지 워크숍 (연1회)
 - * 초빙강연·동료 슈퍼비전·토론 / 상담관 심리소진방지 프로그램 등
- 「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개정본)」 제작 및 배포
 - * 전담조직 홍보 및 변경된 사건처리 절차 소개를 위한 리플렛 추가 제작 / 배포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예방·대응 소위원회 개최
 - * '22.11.28.(월) 민간위원 5명,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등 참석
 - 성폭력 예방·대응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방부 전담조직 운영 및 피해자 지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의견 수렴
-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자 양성 (완료)
 - * 「군사법원법」 개정 ('22. 7. 1.)에 따라 군 성폭력 사건은 민간수사기관에서 담당
⇒ 국방부조사본부 인력보충 중지
 - 임무변경: (기존) 폭력/인권침해 범죄수사대→(개편후) 중대재해/반부패범죄 수사대
-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 부담이 없도록 인사부서에서 처리 / 진행
 -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2차 피해 포함)
 - '22년 총 134건에 대해 79회 실시
 - △성희롱 119건(성립72, 미성립47) △2차 피해 15건(성립5, 미성립10)

□ 2023년도 시행계획

-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운용 : (정원)'22년 103명→ '23년 150명
- 성고충전문상담관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 피해자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통합 워크숍 개최
-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 (15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지속)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대책 소위원회 개최(반기 단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3,908	3,562	6,628	2,720	69.6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 증원	48명	47명	101명	142명	민간 상담인력 풀을 고려하여 정원(150명) 대비 95% 충원 목표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대책 소위원회 개최	-	-	1회	2회	반기단위 (4월, 11월)

□ 기대효과

- 성폭력 사건처리 및 상담지원 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지속)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예방·대응 소위원회 운영 (지속)
- 민·관·군 협업 하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 (지속)

담당부서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진지영 주무관 곽태경	전화번호	02)748-5172 02)748-5177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징계처분 결과 통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참여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여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징계위원회 개최 전 위원회 일정 안내하여 참여권 보장
- 징계위원회 참석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가능
-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 제도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

-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 피해자에게 개최 일시 안내
-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7조·제28조

○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군무원 인사법 (완료)
 - 법률 제19074호. 2022.12.13. 일부개정, 시행 2022.12.13.
 - * 군무원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법률 제17679호. 2020.12.22. 일부개정, 시행 2021. 6.23.
 -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원익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군인사법 개정(추진 중)
 - * 징계처분결과는 개인정보 해당, 타인공개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 2023년도 시행계획

- 군인사법 개정 추진
- 하위법령 정비 (군인 징계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 완료	-	군무원 인사법 법사위 계류	군무원 인사법 개정 (‘22.12.13.) 군인사법 법안소위 계류	군인사법 개정 완료 및 하위법령 정비	국회 임기만료에 따른 재추진

□ 기대효과

-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처분결과 통지를 통해 피해자의 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제도 시행 강조 공문 하달 및 관리·감독

담당부서	국방부	담당자	소령 박승찬	전화번호	02) 748-6818
------	-----	-----	--------	------	--------------

3-3-1-①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신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과제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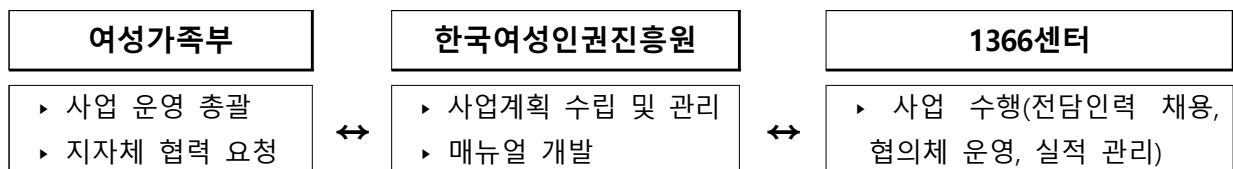
- (목적) 「국정과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을 위한 광역 단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공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 실시('22.11.)
- 5대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TF 회의 실시('22.11~12)
 - * 1차(11.14.) 통합지원체계 및 시범사업 운영안, 2차(12.1.) 유관기관 중앙 기능 검토, 3차(12.8.) 시범사업 계획(안)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5대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광역 2개소)
- 추진 내용
 - (사업대상) 복합 여성폭력 피해자 등
 - (내용) 여성긴급전화1366센터(2개소)에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설치하고 복합피해 등 고난도 사례에 대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통합사례관리
 - * 통합솔루션지원단: 여성폭력 지원기관, 지자체,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협의체
 - (추진체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시범사업 운영기관 선정, 매뉴얼 개발·배포(4월중)
2/4분기	시범사업 운영(4월~10월), 사업결과 보고(12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중앙 총괄기능 수행)	-	-	14,233 (200)	△ 613 (-)	△ 4.1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시범사업 운영(신규)	-	-	-	2개소	시범사업 운영기관 개소 수 계

☐ 기대효과

- 협의체 개설로 권역 내 유관기관 연계 강화하여 원스톱 보호·지원 서비스 강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시범 운영 및 확장기를 거쳐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며,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필요한 제도화 방안(법제화 필요성 등) 모색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김민형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06 02)2100-6307
------	----------------	-----	--------------------	------	------------------------------

3-3-1-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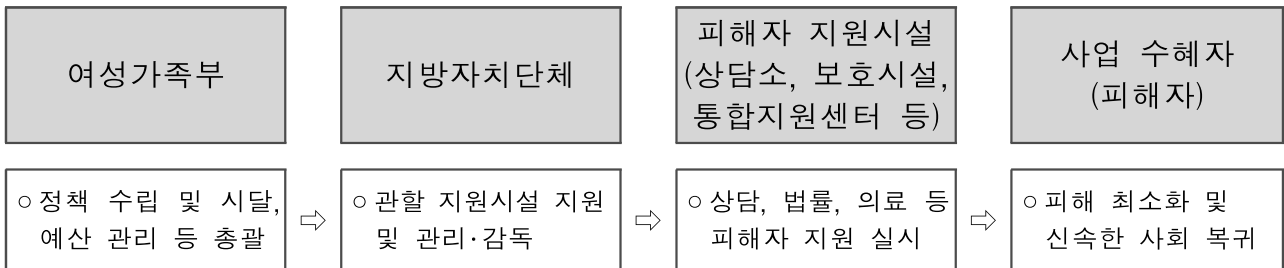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의료·수사·법률·보호·숙식 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
- 추진체계

<지원 체계>



○ 주요내용

<'22.10월 국비지원 기준, 단위:개소>

구분		주요 기능	지원 개소수	
성폭력 상담소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의료·법률지원, 치료회 복프로그램 운영, 성폭력예방 및 홍보 등	105	82
	장애			2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 지원 등	34	17
	장애	장애인 피해자 대상 보호시설		7
	특별 지원	19세 미만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 지원, 학업 및 자립 지원		4
	자립 지원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6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위기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서 비스 제공(경찰 24시간 배치)	39	16
	아동	성폭력 피해 19세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경찰 출장)		7
	통합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경찰 24시간 배치)		16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의 상담, 보호,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및 수사·재판 등 동행 지원 등

<상담소 운영 실적>

(단위 : 건)

연도	지원실적					
	합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기관 연계*	기 타**
'19년	148,311	77,925	22,331	8,473	7,063	32,519
'20년	153,221	75,797	30,387	9,904	6,874	30,259
'21년	175,748	87,157	30,556	14,111	8,809	35,115

* 기관 연계 : 보호시설,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 기타 : 정보제공,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전학 지원 등

-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피해자 의료·법률 지원 등

<보호시설 지원 실적>

(단위 : 건)

연도	총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학교 문제 지원	자립 지원	기 타
	비율						
'19년	141,719	66,514	1,284	13,898	11,907	20,928	27,188
'20년	158,991	70,484	1,260	17,500	15,623	19,470	34,654
'21년	143,263	64,044	2,013	19,647	16,865	4,064	26,630

- (해바라기센터 운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통합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의료지원	심리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지원	동행 서비스	기타*
'19년	413,177	112,659	34,787	125,459	62,120	5,221	72,931
'20년	380,141	101,193	32,712	116,758	57,734	4,557	67,187
'21년	418,032	106,742	33,029	129,199	70,429	5,359	73,274

* 기타 : 정보제공, 사회적 지원(기관연계, 자조모임, 적응훈련), 가족개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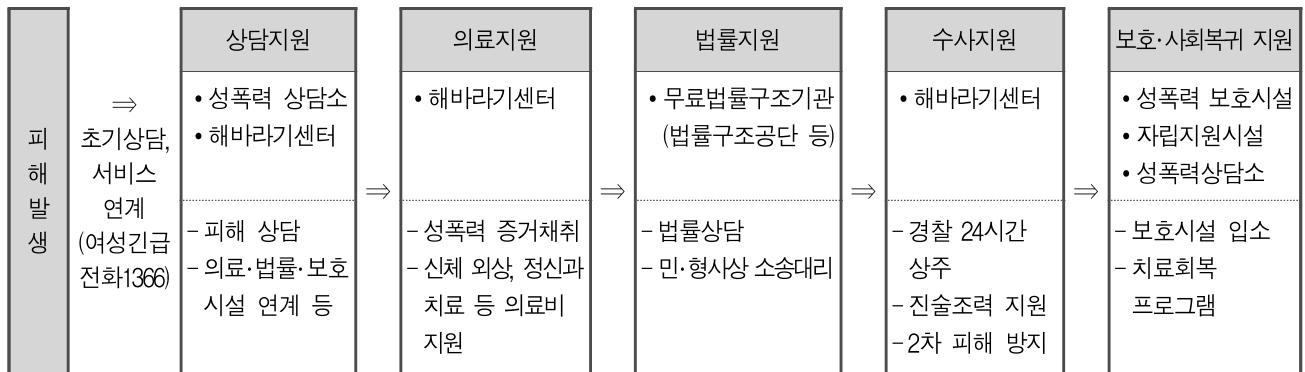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성폭력 피해 특성을 고려한 상담·의료·법률·수사·동행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종합형 서비스 지원

○ 추진 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상담, 의료, 법률 등의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미성년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 25개소 각 1명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등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입소기간을 만 21세 → 24세로 연장

○ 추진 방법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성폭력 피해자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미성년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1/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2/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3/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4/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6,172	35,511	37,537	1,365	3.8
국비	36,172	35,511	37,537	1,365	3.8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천건)	322	345	338 (추정치)	341 (최근 3년간 평균값(335)에 3년간 증감률평균(1.9%)을 곱한 값)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의 성폭력 상담지원 건수의 총계

□ 기대효과

-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통해 성폭력피해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서비스 제공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필요한 서비스 지속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서진희 사무관 강소연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6 02)2100-63095
------	----------------	-----	--------------------	------	-------------------------------

3-3-1-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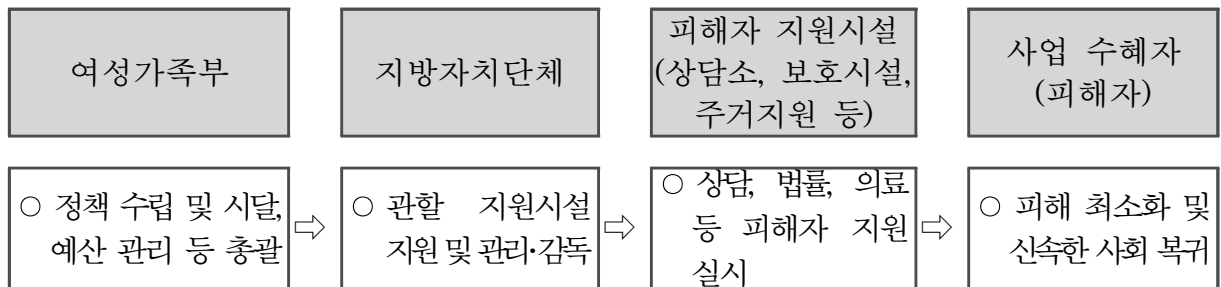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보호 등을 지원하고, 무료법률지원으로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권익보호

○ (추진체계)

<지원 체계>



○ (주요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국비 지원, '22.6월말 기준 / 단위 : 개소)

구 분		주 요 기 능	지원 개소 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365일 24시간 위기개입 상담(초기지원), 긴급피난처 운영 (7일 이내 긴급 보호), 지역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 률, 의료 등)	17	
가정폭력 상담소	일반 (통합)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가정 폭력예방 및 홍보 등	128	124 (27)
	장애 (통합)			4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법률 지원, 자립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65	42
	가족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입소 가능한 보 호시설		23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일반	폭력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 성하기 위하여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2년(2년 연장가능)	26 (354호)	

- 가정폭력피해자 등 지원서비스

구 분	내 용	지 원 실 적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임신부·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 등	5,676건 (’22.6월)
치료회복프로그램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지원	5,478건 (’22.6월)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가사 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	5,591건 (’22.6월)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를 통한 피해자 초기상담, 보호, 전문기관 연계 등 초기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국비지원 128개소) 및 상담원 추가 배치(’20년 43명, ’21년 43명)를 통한 피해자 상담지원 확대
 - 상담실적 : 219,043건(’22.6월 기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65개소), 상담원 추가 배치(’21년 65명) 및 입소 피해자 숙식제공 등 보호,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지원실적 : 79,774건(’22.6월 기준)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사업 운영(4개소)
 -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가 고의·중과실이 아닌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제공(’21년~)
- 스토킹 범죄 피해 등 법률구조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무료법률지원 예산 추가 확보
 - 무료법률지원(예산) : (’21) 2,941백만원 → (’22) 3,195백만원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동행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보호 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분기별)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점검 실시(6-9월)

○ 추진 방법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예산 교부(분기별)
- 가정폭력 피해자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 운영 지원(연중)
2/4분기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 운영 지원(연중) - 가정폭력 관련 지원 시설 현장점검(6-9월)
3/4분기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 운영 지원(연중) - 가정폭력 관련 지원 시설 현장점검(6-9월)
4/4분기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 운영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 국비)	36,176	35,787	39,199	3,023	8.3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천건)					가정폭력 상담소 상 담 실 적 , 1366 연계(지 원) 실적, 가 정폭력피해자 (이주여성 포 함) 보호시설 지원 합산
○성과목표치 산식 : -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실적, 1366 연계(지원) 실적, 가 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 원 합산 실적(1월~9월분 합계, 천건)	763천건	754천건	768천건	775천건	

□ 기대효과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서비스 제공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사업 지속 운영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김옥희 사무관 김수연 주무관	전화번호	2100-6425 2100-6426
------	----------------	-----	--------------------	------	------------------------

□ 과제개요

- 스톱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추진

* (대통령 지시사항, '22.9.) 스톱킹 방지법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스톱킹 관련 피해자 보호 강화

* (주요 20대 국정과제, '22.9.) 중대 사회범죄 근절(스토킹 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스톱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 피해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21.4월~)

*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 스톱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배포('21.9월)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시설(617개소)에 온·오프라인 배포(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협업)

- 스톱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3.1.17. 공포, '23.7.18 시행)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 개최('22.8.26.),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9.23.) 참석, 국회 현안보고('22.9.20) 및 스톱킹방지법안 공청회 참석('22.11.17.)

- 스톱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법률지원 수요 증가로 '22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 증액

* 스톱킹 신고현황(출처 : 경찰청) : ('21) 14,509건 → ('22) 29,565건

**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 : ('21) 2,941백만원 → ('22) 3,195백만원 (증 254백만원)

- 일반국민 대상 스톱킹·데이트폭력 관련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실시

* ('20) 5,241회 → ('21) 5,208회 → ('22) 5,274회

- 스톱킹, 데이트폭력 내용이 포함된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매뉴얼 개정('22.12)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스토킹피해자지원 사업 실시

○ 추진 내용

-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초기 상담, 관계기관 연계 및 긴급피난처를 통해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법률 상담 및 스토킹피해자지원 신규사업 실시('23년)
 - * 임시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시범운영 예정

○ 추진 방법

- 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 선정 및 운영 예산 교부('23년)
-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스토킹방지법 제정('23.1월)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
2/4분기	- 스토킹방지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 - 스토킹피해자지원 사업 실시
3/4분기	- 스토킹방지법 시행('23.7월)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 - 스토킹피해자지원 사업 실시
4/4분기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 - 스토킹피해자지원 사업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중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 국비)	36,176	35,787	39,199	3,023	8.3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에 스톡킹 피해자 지원 예산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1366 상담 건수(건)	11,440	12,534	16,908	18,000	1366 스토킹·교제폭력 상담실적 통계
○ 스톡킹방지법 제정 추진	-	(신규)	대안 통과(12.28.) 공표(23.1.17.)	하위법령 제정 추진	제정 여부

□ 기대효과

- 스톡킹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스톡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스톡킹방지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스톡킹피해자지원 사업 실시('23년 4월 이후)
* 임시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시범운영 예정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김초혜 주무관 김옥희사무관 조성현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23 02-2100-6425 02-2100-6427
------	----------------	-----	-----------------------------	------	--

□ 과제개요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톱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여 피해자 안전 및 보호 지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피해자 중심의 스톱킹 대응체계를 갖춰 현장 경찰의 역량을 전문화, 집중화시키고 유관기관 협업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전국 관서에 스톱킹전담인력 배치(현원 279명), 스톱킹 사건에 대한 △사후 전화모니터링 △전수합동조사 실시하여 피해자 안전 공백 최소화
-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제·개정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대응

- ▶ <스토킹처벌법> 민형배('22.1.18.), 이종배('22.2.16.), 한병도('22.5.6), 전주혜('22.6.15.), 백혜련('22.7.1.) 등 총25건 의원 발의 / 법무부 정부안 발의
- ▶ <스토킹방지법> 정춘숙('22.04.19) 등 총3건 의원 발의 / 여가부 스톱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전문기관 위탁 교육 신설, 가·피해자의 행동·심리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인 이해 및 효과적인 상담·조사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성 제고

- ▶ <기간> '22. 7. 19.(화) ~ 9. 2.(금) 5주간
- ▶ <대상> 스톱킹담당·여청수사관 등 185명
- ▶ <주요 교육내용>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가·피해자 면담기법 이해와 실습 △과태료 처분 등 행정실무 △현장경찰관 소진방지 프로그램 등

- 긴급응급조치시 위험성·재발 가능성의 객관적 판단을 위한 「긴급응급 조치 판단조사표」 개선 완료
- 데이트폭력 피해자 모니터링 관리체계 개선 등 피해자보호 강화

- 스토킹 과태료 부과·피해자 사후 전화모니터링 등 신규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예산 확보
 - ※ '23년 과태료 시스템 예산(6.7억) 정부안 반영
- 시·도청별 스토킹 범죄 현황 및 정책 정보공유, 사례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 경찰-여가부 과장급 실무협의 개최('22.9.21.), 경찰-1366센터 간 연계강화 필요성 논의 등

□ 2023년도 시행계획

-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法 제·개정 취지를 구현하도록 대응체계 고도화
 - (처벌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중심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맞춰 입법대응 및 △매뉴얼 정비 △업무 인프라 확충 등 현장 대응체계 개선
 - (피해자보호법 및 조례 제정) 경찰·지자체·자경위·여성단체 등 협업 체계 구축, 신설·강화되는 각종 피해지원 제도 연계 활성화
- 스토킹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전문 교육 추진
 - (업무 역량 제고) △현장사례집 △실무절차 동영상 △모니터링 질문 모델 개발 등 교육컨텐츠 개발 및 수준별 맞춤형 전문 위탁교육 추진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우수사례 공유
 - 전 시도청·경찰서 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 우수·미흡 사례 취합 및 공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전문기관 위탁교육 과정 계획 수립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매뉴얼 정비, 인력·예산 확충
2/4분기	-스토킹담당경찰관 전화모니터링 질문모델 연구용역 계획 수립
3/4분기	-위탁교육 및 연구용역 진행, 실무절차 동영상제작
4/4분기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현장점검 및 교육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스톱킹대응지침 점검 및 교육 실시	-	교육 완료	교육 완료	소 관서 점검·교육	

□ 기대효과

- 스톱킹범죄 단계별 대응 체계에 대한 세밀한 정비로 실효적인 법 집행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도모
- 스톱킹담당경찰관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피해자보호지원 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능력 향상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양희준 경위	전화번호	02-3150-0893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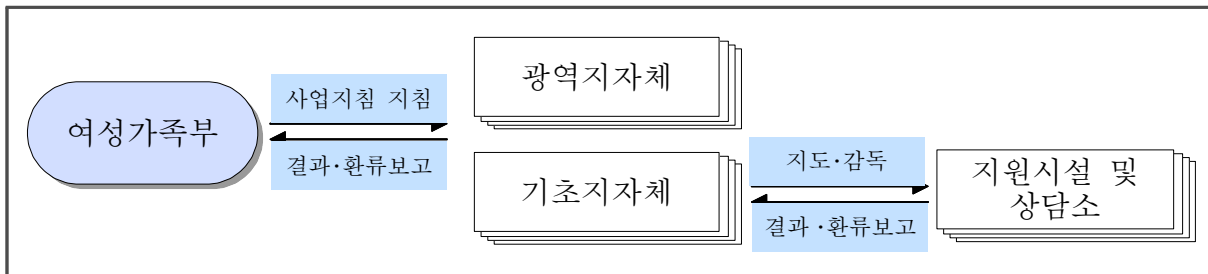
3-3-1-④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과제개요

- (목적)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
- (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96개소)
 -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진학교육),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제공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시설별	상담소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시설 수	31	39	1	11	13	2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상담소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 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22년 상반기	3,764	2,396	567	59	42	630	70
'21년	5,529	3,692	803	62	57	832	83
'20년	5,972	3,973	885	63	63	922	66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상담, 의료·법률, 치료·회복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확대

○ 추진 내용

-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을 위한 종합적 지원서비스 제공(연중)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현장점검(4~6월)
- 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현장 의견조회(11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만족도 조사(2~10월) 및 결과 통보(12월)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양성평등기금)	17,758	17,758	18,156	398	2.2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건) (산식)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등의 피해자 지원건수	148,427	154,888	143,000 (추정)	145,000	• 과거 4년('18~'21) 실적의 평균(139,934)보다 3.7% 상향된 145,000건으로 목표 설정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점) (산식)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의료·법률, 직업훈련 등 이용 만족도	90.8	92.1	91 (추정)	91.2	• 과거 4년('18~'21) 실적의 평균(90.8)보다 0.4점 상향된 91.2점으로 목표설정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성매매피해자에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를 위한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진학교육),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확대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정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48
------	----------------	-----	---------	------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과제개요

- 랜덤채팅앱 등 성매매로 유인된 청소년들이 피해 발생 시부터 안정적인 생활과 심리적·정서적 치유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구축·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2 신설('20.11.20. 시행)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사업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기능을 통합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개편(21년~)

* 전국 시·도별(16개소) 지원센터와 장애인 특성화지원센터(1개소) 설치·운영

□ 2023년도 시행계획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등 피해발생 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 지원 강화

- (중앙지원센터 운영) 지역센터 연계 및 총괄관리,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 협력 강화, 종사자 직무 역량강화, 성매매 예방 홍보 등

* 중앙지원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 조기발견에서 긴급구조, 상담 및 치료·회복, 일시보호, 자립·자활 등 사회복귀까지 맞춤형 지원

* 지역지원센터 : 전국 17개소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5,968	5,888	6,056	88	1.5
	(1,204)	(1,204)	(1,217)	13	1.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지원 건수					
○ 성과목표치 산식 : 전국 17개 지역 아청센터에서 지원한 건수 합계	-	12,520건	16,699건	15,050건	'21~'22년 실적 평균 대비 3% 상향한 목표 수립

☐ 기대효과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최근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온라인 모니터링·아웃리치,
조기발견·구조 등 성인될 때까지 종합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운영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대중 사무관 박건용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35 02)2100-6443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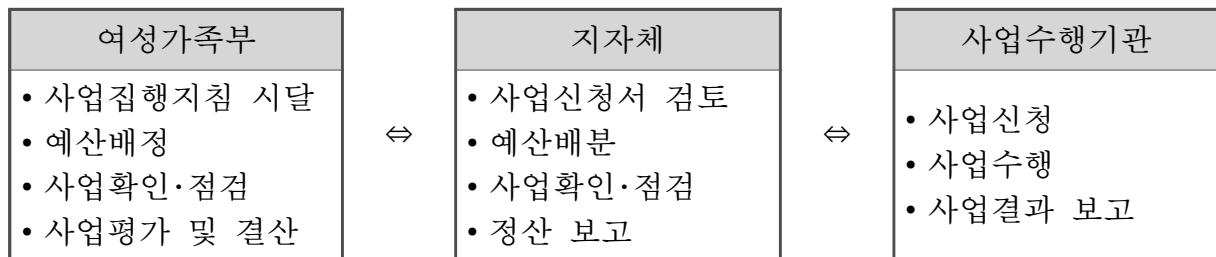
3-3-2-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가정구성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지원
- (추진체계) 중앙-지자체-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지원 추진



- (주요내용)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및 임대주택 지원을 통한 주거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지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자립역량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자립지원금 사용용도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 등 개선
 - (**사용용도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지급되는 자립지원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 변경
 - (**지급절차 간소화 및 이의신청제 도입**) 시·군·구에서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자 결정 후 퇴소자에게 직접 지급 및 보호시설장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제*를 도입
 -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구 심사위원회 심사항목 조정('21년 3개 분야 7개 항목→ 4개 항목)

- 가정폭력 피해자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가능한 국토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전파('22년 지침 반영)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1인당 5백만원)
- 자립역량강화 시범사업 운영('19년 3개소, '20년 2개소)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임대주택) 확대(↑ 10호)
- * 임대주택 지원현황 : ('20) 344호 → ('21) 354호 →('22) 364호 내외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주거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보호시설 입소 지원 및 퇴소 시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연중)
- * 보호시설 65개소 운영 및 임대주택 364호 내외 지원('22년 현재)
- (자립지원금 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등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
- * 주거마련(월세, 보증금), 학자금, 자격취득 및 취업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

○ 추진 방법

- 가정폭력 피해자 운영실적(주거지원, 자립지원금) 관리(연중)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운영 지원(연중)
2/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운영 지원(연중)
3/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운영 지원(연중)
4/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운영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폭 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양성평등기금, 국비)	36,176 (2,483)	35,787	39,199 (2,483)	3,023 (-)	8.4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주거지원 임대주택 운영 기관 확대 :					
○성과목표치 산식 : 주거지원 임대주택 운영기관(개소 수)	+1	+1	+1	+1	제도 운영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및 주거지원(임대주택 지원), 자립지원금
지원 사업 지속 운영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김옥희 사무관 김수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5 02-2100-6426
------	----------------	-----	--------------------	------	------------------------------

3-3-2-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과제개요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 그간의 추진실적

○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근거 마련('19.7월) 및 우선공급 운영

-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포함·확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

- ▷ (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지원대상)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 등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행정기관 의 장·지자체 장·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추천한 사람 등
 - (자격요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③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 ▷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우선 입주 및 보증금 감면
- ▷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 계약체결(상시신청, 즉시지원)

□ 2023년도 시행계획

○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긴급한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2년)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제도 운영	제도 운영	제도 운영	제도 운영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지속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긴급한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남궁부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1-4868
------	------------------	-----	------------	------	---------------

3-3-2-②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및 피해 여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과제개요

-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지원(13개소)
- 심층상담 및 집결지 특성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이쉼터를 제공(열린터 운영, 10개소)

<성매매 집결지 지원 실적>

(‘단위 : 회, 건)

연도	운영 개소	아웃 리치(회)	개별 상담(건)	집단 상담(회)	의료 지원(건)	법률 지원(건)	직업 훈련(건)
’22년상반기	13	299	12,166	17	466	791	1,402
’21년	12	497	22,974	32	1,728	1,600	1,919
’20년	10	465	24,495	42	1,710	1,479	1,441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 지원을 위해 상담, 의료·법률, 치료·회복 등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확대

○ 추진 내용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추진
 - * 성매매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서비스 제공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 운영
 - * 심리·위기 상담, 긴급피난처 및 단기쉼터, 집결지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실시 등
-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조사(5월)

○ 예산 현황 : 기포함

※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3-3-1-④)과제에 기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양성평등기금)	17,758	17,758	18,156	398	2.2

○ 성과지표 : 기포함

※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3-3-1-④)과제에 기포함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 (건) (산식)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등의 피해자 지원건수	148,427	154,888	143,000 (추정)	145,000	• 과거 4년 (‘18~’21) 실적 의 평균 (139,934)보다 3.7% 상향된 145,000건으로 목 표 설정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점) (산식)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의료·법률, 직업훈련 등 이용 만족도	90.8	92.1	91 (추정)	91.2	• 과거 4년 (‘18~’21) 실적 의 평균(90.8) 보다 0.4점 상 향된 91.2점으 로 목표설정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및 집결지 폐쇄 조치를 위한 관계부처 지속 협의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정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48
------	----------------	-----	---------	------	--------------

3-4-1-①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적근거의 일원화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과제개요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적근거의 일원화

-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근거규정 마련 등
-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예방교육 근거규정 마련(1999년~)

- * 성희롱 예방교육(1999년, (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성매매 예방교육(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201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합 폭력예방교육 근거규정 마련(2013년~)

-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7.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9.28.)

○ 국회의원 발의(2021.3.25.) 성인지교육지원법 제정안 상임위 계류 중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법적근거의 일원화 관련 사항 검토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법적근거의 일원화 관련 사항 검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송재언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2 02)2100-6445
------	----------------	-----	--------------------	------	------------------------------

□ 과제개요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관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예방교육 운영지침 수립, 예방교육 점검(서면, 현장점검), 강사양성,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부진기관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등
 - 각 기관 : 폭력예방교육 실시,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 그간의 추진실적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학교)의 예방교육 실적 점검 체계화('14년~)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15년~)
 - 현장점검 결과에 기초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별 개선책 제시
 - * ('20년) 480개 → ('21년) 496개 → ('22년) 550개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신뢰성 확인 및 현장점검 결과에 기반한 향후 예방교육의 보완·개선 방안 등 컨설팅 실시(500여 개 기관)
 - 컨설팅 개선사항 반영 여부 등 대상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계속)
3/4분기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계속)
4/4분기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사업평가 및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현장점검 및 컨설팅)	3,880 (329)	3,695 (293)	4,147 (329)	267 -	6.9 -
국비	329	293	329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 현장점검 대상 기관	496개	550개	500개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 전년(2022년) 목표치(450개) 대비 50개소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기대효과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로 여성폭력방지 기반 구축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이행점검 내실화 지속 추진

- 제출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기관 방문을 통한 현장점검 및 기관별 맞춤형 개선책 제시, 사후관리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송재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42
------	----------------	-----	---------	------	--------------

□ 과제개요

- 중앙행정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이행상황 점검, 현장점검 등) 소관부처 책무성 강화
 - *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 여성가족부 → 관할 중앙행정기관
 - * 각급학교(초중고 및 대학), 유치원 : 여성가족부 → 교육부(교육청)
 - * 어린이집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지자체)

□ 그간의 추진실적

-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 확대(2019년~)
 - * 2018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시행 '19.6.19)
-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 상 기관 협조사항 반영(2020년~)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폭력예방교육 등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및 관리 요청
 -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는 성폭력 예방계획에 소속·산하기관 관리 사항 반영 등
 - 소속기관으로부터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교육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아 지침 이행 독려
 - * 상급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소속기관 실적관리' 메뉴를 통해 소속기관 현황 조회 가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시 명단 공표 근거 마련(양성평등기본법 개정, 2021.10.21. 시행)
- 국무(차관)회의를 통한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결과 보고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국무(차관)회의를 통한 2022년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결과 및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기준 강화('22년 70% → '23년 75%) 등 2023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방향 보고
 - 점검결과 언론 공표 등 실적 공개 및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등 후속 조치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 2022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국무·차관회의 상정	-	1회	1회	국무·차관회의 상정 횟수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소관부처 책무성 강화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송재언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2 02)2100-6445
------	----------------	-----	--------------------	------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과제개요

- 폭력예방교육 전문인력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

- 성평등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전문적 수행이 가능한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

※ 활동인원 : ('17) 78명 → ('18) 166명 → ('19) 416명 → ('20) 715명 → ('21) 824명
→ ('22.11월 기준) 890명

-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수행인력 양성과정 운영(40회)

※ 특수직군 연계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7회) 포함(여성번호사회 협업)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

-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고위직 별도 교육 등 대상 맞춤형 강의 수행을 위한 맞춤형 전문강사 보수과정 실시(17회, 2022.11월 기준)

- 전문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262회)

※ 총 262회 : 전문가 현장(9회) 및 영상(163회) 모니터링, 동료 멘토강사 모니터링(90회)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DB(전문강사뱅크 사이트) 구축·운영

□ 2023년도 시행계획

- 폭력예방교육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연간 150시간 이수)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활동 인원>

(단위 : 명)

구분	'18	'19	'20	'21	'22.11월 기준
인원	166	416	715	824	890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
 - 강의 모니터링, 맞춤형 전문강사 보수과정 등 운영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DB(전문강사뱅크 사이트) 구축·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실시 · 강의 모니터링, 전문강사 보수과정 실시
3/4분기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실시(계속) · 강의 모니터링, 전문강사 보수과정 실시(계속)
4/4분기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실시(계속) · 강의 모니터링, 전문강사 보수과정 실시(계속) · 사업평가 및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명)	715	890	930	사업결과보고서

☐ 기대효과

- 맞춤형 전문강사 역량강화로 폭력예방교육 전문인력 확대 및 질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확대 및 관리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송재언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2 02)2100-6445
------	----------------	-----	--------------------	------	------------------------------

3-4-1-⑤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과제개요

- 지역 현실과 이슈를 반영한 폭력예방교육의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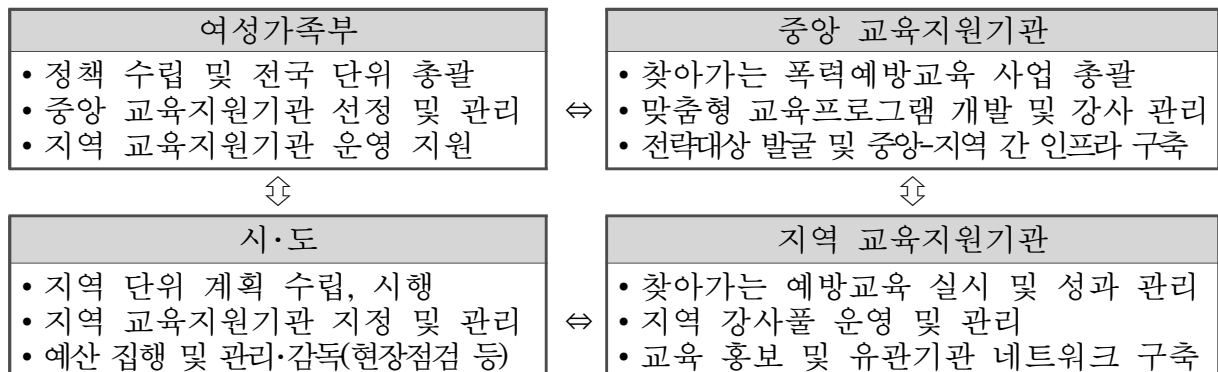
□ 그간의 추진실적

- 17개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교육 소외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 ('20년) 5,241회 → ('21년) 5,208회 → ('22.10월) 4,006회 실시
- 지역 강사 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 및 강의 품질 제고
 - * 17개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DB 구축(총 776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139회) 운영

□ 2023년도 시행계획

- 지역별 교육 취약계층 및 예방교육 필요 대상 적극 발굴로 교육 대상 사각지대 최소화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 및 강의 품질 제고
 - (중앙 지원 기관) 지역기관 대상 강의 모니터링, 컨설팅, 사업 평가 및 워크숍 실시를 통한 환류 및 우수 사례 발굴·확산
 - (지역 지원 기관) 지역 기관 별 강사 풀 구축, 강사 소모임 운영 및 강의 자체점검 등을 통한 지역 강사·강의 관리체계 운영
-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지역 수요·특성 반영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필요 검토 등을 통한 교육 추진력 제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 체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3/4분기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계속)
4/4분기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계속) · 사업평가 및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3880	3,695	4,147	267	6.9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796)	(796)	(808)	(12)	(1.5)
국비	796	796	808	12	1.5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4.1	88.8	86.0	참여자 대상 폭력 예방 이해증진 인식 변화 실천의지 등을 조사한 결과의 평균값

※ 과거 3년 간(2020년~2022년) 실적 평균치(85.5점) 보다 0.5점 상향하여 목표 설정

☐ 기대효과

-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송재언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2 02)2100-6445
------	----------------	-----	--------------------	------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 (주요내용)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성교육 실시 * 청소년성문화센터 57개소
* (교육실적) ('21) 1,640천명 → ('22) 1,829천명
- 청소년성문화센터 노후 교재·교구 교체 지원
* '22년 이동형 10개소 대상

□ 2023년도 시행계획

-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춘 성교육 실시 및 노후화 된 교재·교구 교체 지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성문화센터 사업 1차 보조금 교부 및 아동·청소년 성교육 실시 교재교구 교체 보조금 교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계약 및 보조금 교부
2/4분기	성문화센터사업 2차 보조금 교부
3/4분기	성문화센터사업 3차 보조금 교부
4/4분기	성문화센터 현장점검 및 결과조치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청소년육성기금)	5,968	5,888	6,056	88	1.5
국비	4,764	4,684	4,839	75	1.6
• 기금(청소년육성기금)	4,764	4,684	4,839	75	1.6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성과지표명 : 아동·청소년 성교육 참여인원(천명)				
○성과목표지 산식 : 최근 5년간 센터 교육 참여율*을 β분포 방식으로 계산한 표준치 * 참여율 :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 수 / 행정안전부 주 민등록 통계시스템(6세~19세 아동·청소년 수×100)	1,640천명	1,829천명	1,650천명	○최근 5년간 실적치의 베타분포방식 표준치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성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 및 성범죄 피해 예방
- 매뉴얼, 정형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전문적 교육 서비스 제공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증액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차효인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03
			정수경주무관		02)2100-6405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로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지원
- (사업내용) 초·중·고등학생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권과 성 인지적 관점의 ‘성 인권 교육’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알맞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8개 시·도)
 - * (교육실적) ('20) 14,466명 → ('21) 14,614명 → ('22) 14,428명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성교육 실시(17개 시·도)
 - * (교육실적) ('20) 2,853명 → ('21) 2,702명 → ('22) 2,884명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매뉴얼 콘텐츠 노후화에 따른 일부 회차* 보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추진(7월~11월)
 - * 기존 표준교재 10회기 중 2회차(주제 : 디지털 시민성 함양) 신규 개발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성 인권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 향유 문화 확산
- 추진 내용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초·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 교육 실시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자기보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실시

○ 추진 방법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연중)
-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3, 12월),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4~11월), 우수사례 선정(12월) 및 공유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선정, 착수워크숍 실시 성 인권 교육 실시
2/4분기	성 인권 교육 실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3/4분기	성 인권 교육 실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4/4분기	성 인권 교육 실시, 우수사례 선정, 평가워크숍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성 인권 교육 운영)	3,880 (556)	3,695 (556)	4,147 (556)	267 (-)	6.9 (-)
국비	556	556	556	-	-
• 일반회계(성 인권 교육 운영)	556	556	556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성 인권 교육 실적(명)					
○ 성과목표치 산식 : '22년도 중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실인원 기준)	17,319명	17,316명	17,312명	17,312명	사업 결과보고서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배양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인지 감수성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단계적인 강사 역량 향상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사업 내실화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김영진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16
			오미영주무관		02)2100-6407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과제개요

- 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웹드라마,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및 모바일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등
 -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기본·심화 등 단계별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디지털 성범죄, 미투 운동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한 핵심 콘텐츠 제공
 -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및 스토킹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 *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및 스토킹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대상 맞춤형 교육 자료 지원
 -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20.8월), 폭력예방교육 표준 콘텐츠 및 일반국민 대상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등 개발('20.12월)
- 초·중고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21~'22)
 - * 학령별 수준에 맞는 게임,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 및 성인지교재 등 개발
- 고위직 대상 위계·위력에 의한 인식 차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토론중심의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21)
- 청소년 전용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구축·운영('22.5~)
- 분야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자체 제작 콘텐츠 및 타부처·민간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보급

< 추천콘텐츠 제공 현황 >

('22년 10월, 단위 : 종)

구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교육
총 202종	89	35	8	13	57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 등을 통해 보급

- 시의성 높은 콘텐츠 제공으로 교육대상의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의 특성고려, 교육 분야별 콘텐츠 활용가이드 및 주요 이슈, 사례중심의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 청소년(온라인 그루밍), 청년(성매매), 일반국민(2차 피해), 고위직 등 폭력예방교육 기관담당자 등 인식개선 및 특화교육과정 개발
 -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신종 범죄(스토킹, 2차 피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 역량 개선 및 관계자 교육
 - 디지털성범죄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여가부 협업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 아동·청소년 및 양육자 · 교사 등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공모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한 우수추천 콘텐츠 발굴·보급
 - 일몰 대상 추천 콘텐츠 리뉴얼 3종, 추천콘텐츠 제도 운영 2회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폭력예방교육(디지털성범죄 포함) 등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2/4분기	· 폭력예방교육(디지털성범죄 포함) 등 콘텐츠 개발 추진
3/4분기	· 폭력예방교육(디지털성범죄 포함) 등 콘텐츠 개발 추진(계속)
4/4분기	· 폭력예방교육(디지털성범죄 포함) 등 콘텐츠 개발 추진(계속) · 폭력예방교육(디지털성범죄 포함) 등 콘텐츠 개발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3,880 (1,205)	3,695 (1,205)	4,147 (1,205)	267 (-)	6.9 (-)
국비	1,205	1,205	1,205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 폭력예방교육 및 청소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	21종	20종	22종	예산 및 콘텐츠 개발 계획

□ 기대효과

-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 및 보급
- 교육대상에 대한 수요분석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시의성 있는 교육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 및 보급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박선미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554
			박종식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562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권익보호과, 권익기반과, 권익침해방지과

□ 과제개요

○ 여성폭력 예방·홍보 강화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신규 실시('19년~)
- 폭력 유형별 예방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송사업자 등 송출 요청
-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20년~)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전개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8월~11월), 유튜브, TV 등을 통해 콘텐츠 확산(12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유튜브) 및 이주여성 폭력예방 안내서 제작·배포(13개 국어)

-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추진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작·배포('20.4.8)
-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영상(4편) 제작·송출('21.12)
 - * (주제) 온라인 그루밍,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합성물, 경찰 위장수사 등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도원결의(2편)' 제작·송출(문체부 협업, '21.9~ 11월)
 - * 경찰, 검찰, 판사가 불법 촬영물의 시청, 소지는 불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전개(상시)

○ 스토킹 피해예방 및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유튜브, 옥외 수도권 버스 내 영상)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성희롱·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 홍보물·동영상 제작, 캠페인, 이벤트 등 추진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추진
- 이주여성 및 스토킹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전개(상시)

○ 예산 현황: 기포함

※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및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희롱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500	475	500	-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3,880	3,695	4,147	267	6.9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329	1,329	1,316	△13	△1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7,548	7,548	7,760	212	2.8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2,341	2,174	784	△1,557	△66.5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4.1	88.8	86.0	참여자 대상 폭력 예방 이해증진 인식 변화 실천의지 등을 조사한 결과의 평균값

※ 과거 3년 간(2020년~2022년) 실적 평균치(85.5점) 보다 0.5점 상향하여 목표 설정

□ 기대효과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이민재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9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한송이 사무관 현승환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4 02)2100-6428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송재언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2 02)2100-6445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강동근 사무관 김민재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62 02)2100-6163

□ 과제개요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1년 중 1주간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운영
- 2020년부터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통합하여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추방주간계기 온오프라인 여성폭력방지 캠페인 전개(11월~12월)
 - 여성폭력 추방주간 주제영상 제작·송출, 온라인기념식 개최(11.25),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11월~12월), 기념영상 및 포스터 대중교통 홍보(KTX, 지하철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 여성폭력 관련 정보 및 예방 영상 자료, 온라인 캠페인 운영 등
- 여성폭력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여성폭력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계기 광고 등 캠페인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14,846	14,846	14,233	△ 613	△ 4.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여성폭력 추방주간 및 예방홍보 사업	1회	1회	1회	1회	

□ 기대효과

-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을 통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정책정보를 알리고 대국민 인식개선에 기여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추방주간(11.25~12.1.) 전후로 여성폭력방지 홍보캠페인 추진(매년)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정명호 사무관 김유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89 02)2100-6433
------	----------------	-----	--------------------	------	------------------------------

4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4-1-1-④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조항 통합 검토

법무부 형사법제과

□ 과제개요

- 지나치게 복잡한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통합·정비하여 국민 입장에서 처벌대상을 알기 쉽게 하면서 처벌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방안 검토
 - *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규정 분산

□ 그간의 추진실적

- '20. 5. 형법 및 성폭력 관련 특별법 처벌규정 재정비를 위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 TF' 안건으로 상정, 추진방안 논의
- '20. 7. 법제 통합·재정비를 위한 개정 초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 시행 및 결과 분석('20. 12. 결과 회신)

□ 2023년도 시행계획

- 중점 추진사항
 - 연구용역 결과,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상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 방안 추진 검토
 - * 법무부 소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처벌규정 통합안을 마련하되, 「청소년성보호법」까지 통합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추진 내용
 -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 방안 추진 검토
- 추진 방법
 - 해외입법례 등 연구용역 결과 분석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 방안 추진 검토
2/4분기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 방안 추진 검토
3/4분기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 방안 추진 검토
4/4분기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 방안 추진 검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안 검토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통합 방안 논의 및 연구용역 시행	해외입법례 등 연구용역 결과 분석하여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통합 방안 추진 검토	해외입법례 등 연구용역 결과 분석하여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통합 방안 추진 검토	해외입법례 등 연구용역 결과 분석하여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 방안 추진 검토	검토 자료
○ 성과목표치 산식 : 검토 자료					

☐ 기대효과

○ 성폭력범죄 처벌 공백 방지 및 국민 입장에서 처벌 대상을 알기 쉽게 정비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이정아 검사	전화번호	02) 2110-3564
------	-----------	-----	--------	------	---------------

□ 과제개요

- 성폭력 범죄의 행위 태양, 피·가해자 특성 등을 기준으로 각 법률(형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구분되어 있는 처벌 규정 통합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관련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는 개정안 발의(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18.8월,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2/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계속
3/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계속
4/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 처벌 규정 통합 실익 및 법 체계 상 정비 검토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 논의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여부 검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05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하여 심리상태 회복과 문제해결 지원 및 의료현장의 인권침해 인식 개선 선도
- (사업근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 그간의 추진실적(2020~2022년)

-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20.12월)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21.8월)
 - 전문 상담사의 심리상담 및 법무·노무 자문 실시
 - * '22년 실적('22.11월말 기준) : 총 604건(상담 589건, 법무·노무자문 15건)
- 보건의료인력 대상 인권교육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인권교육) 보건의료현장 종사자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교육 실시('22.3월~)
 - * '22년 교육실적('22.11월말 기준) : 총 54회, 3,363명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 인식개선 및 직무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모형 개발 시범사업*('22.9월~12월)
 - * 스트레스 측정 및 집단 심리 프로그램(일산병원 협업): '22년 실적('22.10월말 기준) 2회, 152명
 - (교육자료 제작)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과목(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인권 교육 등)의 표준교안 및 교육 영상 제작·배포('21.12월)
- 의료기관 내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 (인권의식 제고)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홍보 관련 활동 다양화
 - 인권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카드뉴스, 현수막 제작·게시('21~'22년)
 - 인권침해 예방 동영상 제작·게시('21.9월~)
 - 인권보호 포스터 공모전('22.9.~10월) 및 인식도 조사('22.10.~11월) 실시
 -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등 인권보호 업무편람 제작·배포('22.8월)
 - 입원안내문 '의료기관 인권침해 예방'문구 스티커 500부 제작·배부('22.9월)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교육 지원 확대 등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추진
- 정보 취약지역 등 상담센터 홍보 강화 및 내담자 발굴 추진

○ 추진 내용

- (인권교육) ①병원 내 필수교육 및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인권교육 실시, ②상담센터 홍보 및 내담자 발굴, ③예비의료인 대상 인권 보호 교육 확대 실시를 통한 인권 존중 기반 마련, ④인권 보호 캠페인 등 인권 인식 개선 사업 추진
- (정보 취약지역 홍보 강화) 도서 및 군 지역 등 정보 취약지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대상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전략적 홍보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인권교육·정보 취약지역 홍보
2/4분기	인권교육·정보 취약지역 홍보
3/4분기	인권교육·정보 취약지역 홍보
4/4분기	인권교육·정보 취약지역 홍보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의료인력양성및적정수 급관리(보건의료인력지 원전문기관)	612	612	612	-	-
국비	612	612	612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정·배포 (1건)	매뉴얼 개정·배포 (완료)	-	-	-
○ 인권침해 상담매뉴얼 홍보영상 제작(각 1건)	상담업무매뉴얼(1건) 홍보영상(1건)	-	-	상담매뉴얼 제작영상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각 1회)(수정)	-	인권교육(42회)	인권교육(50회)	결과보고서

□ 기대효과

- (인권교육) 보건의료인력의 인권 보호 인식 강화 및 인권침해·직무 스트레스 등 내담자 상담 신청 증가
- (정보취약 지역 홍보 강화) 방문홍보가 어려운 원거리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략적 홍보 추진으로 상담센터 인식도 제고 및 상담 신청 증가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방 중소병원 근무 보건의료인력 대상 필수교육 지원 및 인권보호 인식 제고 활동 확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자	진상인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2431
------	------------------	-----	---------	------	---------------

4-1-2-①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법무부 형사법제과

□ 과제개요

-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제재 강화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해당없음

□ 2023년도 시행계획

- 중점 추진사항
 -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여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을 검토
 - 추진 내용
 - 임시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검토
 - 추진 방법
 - 해외입법례 검토,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 취합, 유사 법령 개정 경과* 검토
- *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회 법사위 1소위 계류 중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임시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검토
2/4분기	임시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검토
3/4분기	임시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검토
4/4분기	임시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검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성과지표명 : 임시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검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임 시 조 치 에 가해자에 대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착' 도입 검토	검토 자료
○성과목표치 산식 : 검토 자료					

☐ 기대효과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검토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이정아 검사	전화번호	02) 2110-3564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 계획 수립
-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및 피해자 등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도모

□ 그간의 추진실적

- '19. 3., '19. 10. 여성·아동분야 타겟형 교육 실시
 - 2차 피해 방지 교육, 성폭력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및 성폭력·아동학대 수사 시 유의사항 등 전국 여성·아동 전담검사 대상으로 타겟형 교육 실시
- '19. 11.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폭력 공동연구 결과 발표
 -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초부터 전문연구검사와 실무협약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분 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하여 연구결과 발표
- '20.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 가정폭력 사건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검사 결정전조사 제도 도입
- '20. 6.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개정
 - 가정폭력 상담(교육)위탁서 서식 개정
- '21. 7~.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가정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작업 진행

○ '21. 11. 전국 여성·아동범죄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가정폭력 수사매뉴얼 등 관련 주요 쟁점, 수정·보완 사항 정리 등 논의

○ '21. 12. 가정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책자 배포

- 가정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일선 청 송부

○ '22.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

-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 긴급임시조치 취소 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건의

○ '22. 2., 7.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2023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사범 처벌 강화(연중)

- 가정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이행 강화 및 지속적 점검·개선을 통한 가정폭력사범 엄정 대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가정폭력사범 기소율(%)	10.14%	9.4%	10.2%	9.9%	검찰통계시스템
○ 성과목표치 산식 : 처분인원 대비 기소인원 비율					

※ 2023년 목표치는 2020년~2022년 실적의 평균치로 산정

□ 기대효과

-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및 피해자 등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도모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이행 강화 및 지속적 점검·개선을 통한 가정폭력사범 엄정 대응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대검찰청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 과제개요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폭행, 존속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여부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 범죄(폭행, 존속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검토 및 국회 논의 지원
 - 이태규('17.12.), 고용진('19.3.), 채이배('19.5.), 송희경('19.7.) 의원 등 대표발의
 -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각 법안은 폐기
 - 고용진('21.1.), 강선우('21.3.) 대표발의
 - * 현재 법사위 1소위 계류 중
- 형사법자문회의 개최, 해외 입법례 조사·분석, 국내 문헌 검토 등
 - 해외입법례, 국내 문헌 등을 조사하여 관련 회의 자료 작성

□ 2023년도 시행계획

- 중점 추진사항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추진 내용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추진 방법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2/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3/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4/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처벌 법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관련 법안 국 회 논의 지원 및 법률 개정 검토	검토 자료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검토					

☐ 기대효과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이정아 검사	전화번호	02) 2110-3564
------	-----------	-----	--------	------	---------------

□ 과제개요

- (추진배경)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의사 존중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사 후 입건,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 (사업목적)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성 검토
- (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후단의 '피해자의 의사 존중' 개정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논의 지원

*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안(2107109),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안(2108579) 계류 중

□ 2023년도 시행계획 : 관련 법안 논의 모니터링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조성현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427
------	----------------	-----	------------	------	---------------

4-1-3-①

스토킹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톱킹처벌법 개정 추진]

법무부 형사법제과

□ 과제개요

- 스톱킹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해당없음

□ 2023년도 시행계획

○ 중점 추진사항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 현재 관련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25건 국회 법사위 및 1소위 계류 중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로 위치 추적 제도 도입,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 추진
 - * 현재 「스토킹처벌법」 정부 제출안 법제처 심사('22. 11. 15.) 및 관계부처 협의 중

○ 추진 내용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추진 방법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관계부처 협의 등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2/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3/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4/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관련 법안 국 회 논의 지원 및 「스토킹처 벌법」 개정 추진	법률 개정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 기대효과

○ 스톱킹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이정아 검사	전화번호	02) 2110-3564
------	-----------	-----	--------	------	---------------

□ 과제개요

-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 방안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등 개정안 검토 및 국회 논의 지원
 - 박광온('17.8.), 표창원('17.8.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표창원('17.9. 「폭력행위처벌법」), 신보라('17.11.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원 등 대표발의
 -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각 법안은 폐기
 - 윤영석('20. 11.,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김미애('22. 7.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원 대표발의
- 형사법자문회의 개최, 해외 입법례 조사·분석, 국내 문헌 검토 등
 - 해외입법례, 국내 문헌 등을 조사하여 관련 회의 자료 작성

□ 2023년도 시행계획

- 중점 추진사항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추진 내용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추진 방법
 -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2/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3/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4/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처 벌법 적용범위를 동거 관계까지 확대하는 방 안에 대한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관련 법안 국 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검토 자료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검토	입법례, 논문 등 검토	입법례, 논문 등 검토	입법례, 논문 등 검토	논문 등 검토	

☐ 기대효과

○ 데이트관계 폭력행위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이정아 검사	전화번호	02) 2110-3564
------	-----------	-----	--------	------	---------------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추진

* 관련 근거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그간의 추진실적

- 국가가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18.9월)

* 성폭력방지법 개정('18.3.13.), 시행('18.9.14.)

- 디지털 성범죄 발생·검거 및 신고 현황 분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입법체계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21.6~12월)

- 디지털 성범죄 구상권 행사의 실효화 방안 관련 정책 연구 추진

* 「새로운 정책 수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22.6~12월)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 비용 산정의 현실적 방안 등 구상권 행사를 위한 보완사항 검토

- 추진 내용

- 구상권 행사 추진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20.12월 발의) 입법 지원

* 구상권 청구시 필요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및 구상권 업무 위탁 근거 규정 (여가위 소위 계류중)

-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절차 정비, 구상비용 산정 현실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및 현장 의견수렴

- 추진 방법

- 제반 사항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4/4분기	- 구상권 행사 실효적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범죄 억제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구상권 행사 추진 관련 국회 입법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강동근 사무관 김민재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62 02-2100-6163
------	------------------	-----	--------------------	------	------------------------------

4-1-5-①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과제개요

- ‘온라인 그루밍’ 관련 정의·구성요건 등 종합적 검토 및 실제사례 등을 통한 범죄특성 현황 분석 등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청소년성보호법 개정(제15조의2 신설), '21.3월)
-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예비연구 실시('22)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온라인 상 그루밍 행위를 오프라인 상 행위를 포함 하도록 법 개정 검토·추진
-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

○ 추진 내용

-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해 현황, 피해자 지원 요구, 국민 인식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최초 실시(3년 주기(안))

○ 추진 방법

- 제반 사항 검토 및 관계기관·전문가 협의 등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4/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검토 및 발의 추진
1/4분기	-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추진 공고
4/4분기	-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50	50	300	250	500
국비	50	50	300	250	500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접근·유인 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그루밍 처벌 관련 판례 동향 모니터링(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 제2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26년 예정)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405
------	--------------------	-----	------------	------	---------------

□ 성매매 수요차단으로의 정책 전환

-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지도·단속(사업정지, 경고·시정조치)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안정법 위반사항 적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22년 10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법 위반 129건 적발
 - * (20년) 등록취소 25, 사업정지 14, 경고·시정 93, 과태료 5
 - (21년) 등록취소 16, 사업정지 41, 경고·시정 78, 과태료 3
 - (22년) 등록취소 22, 사업정지 29, 경고·시정 73, 과태료 5
 - '22년 10월, 직업정보제공사업 법 위반 59건 적발
 - * (20년) 사업정지 13, 경고·시정 68,
 - (21년) 사업정지 4, 경고·시정 16
 - (22년) 사업정지 4, 경고·시정 55
 - '22년 10월, 거짓구인광고 신고포상금 4건 지급
 - * (20년) 3건, (21년) 7건 지급, (22년) 4건
- ※ 성매매 관련 위반사례는 없음

□ 2023년도 시행계획

- 성매매 등 불법 사전 차단을 위해 직업소개사업소 등에 대한 단속 및 자치단체 협력 강화
 - 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청 지도단속 강화 협조 지속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유흥업소 불법 구인광고 모니터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단속
2/4분기	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단속
3/4분기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단속
4/4분기	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단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직업안정법 지도·점검(건)	218	158	188	198	3년 실적평균 대비 5% 상향
○ 성과목표치 산식 : 직업 안정법 지도·점검(건)					

☐ 기대효과

-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지도·단속(사업정지, 경고·시정조치) 강화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시장 건전성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자치단체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성매매 단속 추진은 불가하나, 구직자가 유흥업소 등에 소개되지 않도록 직업소개사업자 등에게 사전 안내하고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이계승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7333
------	-------------------	-----	---------	------	---------------

□ 시·도경찰청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 및 성매매 단속 강화

-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 등> 기존 성매매 단속·수사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속·수사 일원화 체계를 갖춘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 추진

▶ 풍속수사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5개청 172명 운영 중, 단계적 확대 추진
 ▶ 단속·수사체계를 일원화한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으로 단속·수사 과정에서의 반복 조사 등 성매매 피해 여성 인권침해 방지 추진

- 성매매 피해자 인지 및 범죄수익금(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추적 수사기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추진

- <성매매 단속 강화 등> 온라인 이용 성매매 등 접근 경로 변화에 맞춰 테마별 (온·오프라인 성매매 등) 단속 및 범죄수익금 환수 등 재영업 차단활동 추진

-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 및 압수 자료(방문자 기록)를 바탕으로 성매매수자 추적 수사 강화로 성매매 근절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

□ 그간의 추진실적('22년)

- 시·도경찰청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21년 168명 → '22년 172명<4명↑>) 및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으로 3,306건 단속, 7,018명 검거(구속 94명)
- 범죄수익금 환수 등 재영업 행위 억제 등 근원적 차단활동 추진

구 분	2021년	2022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원)	217억	623억
성매매 건물주 통지(건)	619	709

- 성매매 업소(오피스텔,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 광고 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사이트 차단 조치 강화
- 9개 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차단 조치

□ 2023년도 시행계획

- <성매매 단속 강화> 성매매 플랫폼 변화에 맞춰 온라인 성매매 연중 상시 단속 및 관계기능·부처(여가부, 지자체 등) 합동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온라인 성매매	① 성매매알선사이트 연계 오피스텔·성매매업소 단속 (4~5월)
	②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진 추적수사 및 사이트 폐쇄 (연중)
	③ 성매매광고차단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성매매알선 광고 차단 (연중)
오프라인 성매매	① 지역협의체(여가부·지자체·교육부 등) 합동 성매매집결지 등 점검·단속 (연중)
	② 교육청·지자체와 협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폐쇄조치 (3월, 9월)

- <근원적 차단 활동> △알선자 추적 △건물주 입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과세자료 통보(국세청) 등 재영업 요소 제거로 성매매 근절 추진

- <피해자보호 강화> 비자발적(권유·유인·협박, 납치·감금 등) 성매매 여부 인지 능력 강화를 위한 피해자 식별 교육 등 추진

※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추가 편성(경찰인재개발원, 연 4회 120명) 등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2년)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성매매 사범 단속(건)	3,306	3,400	KICS 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생활질서과	담당자	김수한 경감	전화번호	02-3150-1396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성매매 범죄 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구매자들의 처벌 환경 조성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19. 3., '19. 10. 여성·아동분야 타겟형 교육 실시
 - 성매매 등 성폭력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및 성폭력·아동학대 수사시 유의사항 등 전국 여성·아동 전담검사 대상으로 타겟형 교육 실시
- '20. 6.,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매매 등 성폭력사건 형사절차 개관 및 수사시 유의사항 등 교육 실시
- '20. 11.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사건 고소인(고발인) 통지시스템 개선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 관련시스템 개선
- '21. 7~.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성매매 등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작업 진행
- '21. 3.,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인신매매 수사실무 등 성매매 관련 교육 실시
- '21. 12.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책자 배포
 -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일선 청 송부

- '22. 6., 9.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인신매매 수사실무 등 성매매 관련 교육 실시
- '22. 11. 성매매사범 처리기준 준수 지시
 - 성매매 재범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사범에 대한 사건 처분 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엄정 대응

□ 2023년도 시행계획

- 성매매사범 엄정 대응(연중)
 -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행위 등은 원칙적 구공판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이 16세 미만이거나 재범인 경우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의 사건처리지침 준수를 지시하여 아동·청소년 상대 성구매자 엄정 대응
-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로 범행 동기 차단(연중)
 - 성매매 알선 사범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 수익 박탈, 동기 차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구매자 기소율(%)	15.6%	17.6%	16.5%	16.5%	검찰통계시스템
○ 성과목표치 산식 : 처분인원 대비 기소인원 비율					

* 2023년 목표치는 2020년~2022년 실적의 평균치로 산정

□ 기대효과

- 성구매자 등 성매매 사범 엄정 대응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대검찰청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4-2-1-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권익보호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보호(지원)시설 등 폭력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대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도모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예산 편성 및 배정) → 시·도, 시·군·구(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관리)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피해자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지원)
- (주요내용)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보호(지원)시설 등 폭력유형별 지원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서비스 점점 확대
 - * (국비 지원, '22.11월) 성폭력피해 상담소 : 105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34개소, 해바라기센터 : 39개, 가정폭력피해 상담소 : 128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65개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확대로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19년)
 - * 성폭력피해 상담소(104명),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30명),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39명)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9개소, 그룹홈 1개소 신규 설치로 지원서비스 기반 확대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피해자 접근성 제고(연중)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추가 인력 확충(연중)

○ 추진 내용

- 미성년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 25개소 각 1명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등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입소기간을 만 21세 → 24세로 연장
- 남성 가정폭력피해자 전문 보호시설 신규 설치 예산 확보(1개소)

○ 추진 방법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미성년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운영
- 해바라기센터 신규(이전) 설치 1개소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1/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1/4분기) -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운영(계속)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2/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2/4분기) -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운영(계속)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3/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3/4분기)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4/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4/4분기) -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운영(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폭력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36,172	35,511	37,537	1,365	3.8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양성평등 기금)	7,548	7,548	7,760	212	2.8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 기금)	36,176	35,787	39,199	3,023	8.4

☐ 기대효과

-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피해자의 시설 접근성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시설 접근성 강화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서진희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6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강소연 사무관		02)2100-6395
			김옥희 사무관		02)2100-6425
			김수연 주무관		02)2100-6426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전반적인 지원서비스의 수준 제고
- (사업대상) 전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 (수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주요내용)
 -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피해자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여성폭력방지 전문상담원(성매매방지상담원) 양성
 - * ('20년) 88명 → ('21년) 92명 → ('22.11) 96명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유형별, 경력별 맞춤형 보수교육 운영
 - * ('20년) 3,780명 → ('21년) 4,781명 → ('22.11) 8,973명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대리외상 해소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 ('20년) 185명 → ('21년) 135명 → ('22.11) 565명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 복합 피해 증가 및 피해 양상 다양화 대응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규 실시
- 추진 내용
 -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소진방지프로그램 실시 (연중)
2/4분기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소진방지프로그램 실시 (연중)
3/4분기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소진방지프로그램 실시 (연중)
4/4분기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소진방지프로그램 실시 (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14,846	14,846	14,233	△ 613	△ 4.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수료자 수(명)					
○ 성과목표치 산식 : 집체 및 화상교육 수료 인원 + 이러닝 및 블렌디드 러닝 과정 수료 인원	3,780	4,781	(‘22.12) 8,937	7,000명	○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예산 감액에 따른 교육 횟수조정 : ‘22년 실적 177 회 → ‘23년 목표 135회 ○ 목표치: 집체 및 화상 블 렌디드러닝 교육 3,000명+이러닝 교육 4000명

☐ 기대효과

- 성매매방지상담원 등 신규 인력 양성으로 지원인력 확충
- 종사자 역량 강화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품질 제고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통한 종사자 정서적·심리적 소진 예방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양성·보수교육 지속 추진 등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정명호 사무관 김유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89 02)2100-6433
------	----------------	-----	--------------------	------	------------------------------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 과제개요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 상담 및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을 통해 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심리·법률·의료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자 지원 및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개선 등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20. 1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설치
- '20. 3월 :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컨설팅 및 사건처리지원단 접수·공모
- '20. 12월 : 기관장 사건 전담신고 창구 개설 · 운영
- '22. 1월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

□ 2023년도 시행계획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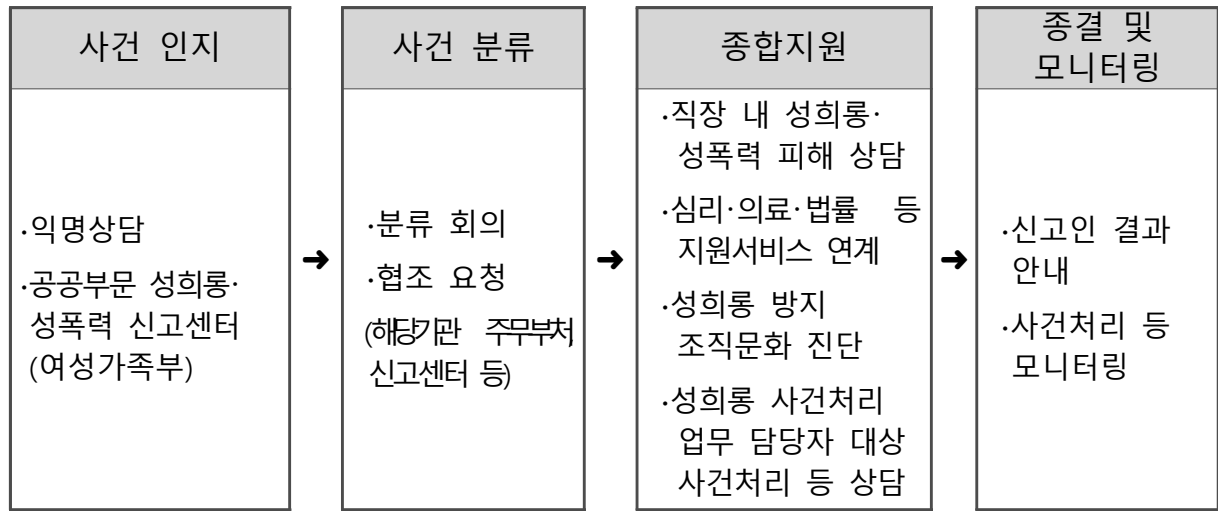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및 시행('21.10.21.~)에 따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업무 등 공공부문 기관 내 성희롱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 집중 추진

○ 추진 내용

- 익명상담전화(02-735-7544) 운영
- 피해자 지원 연계 : 피해자 초기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의료·법률 등 지원기관 연계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기관 내 성희롱 예방과 사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 사건처리 상담 : 성희롱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사건처리 절차 상담, 전문기관 정보 제공 등

○ 추진 방법

- 피해자 보호 종합 지원 및 사건처리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 - 성희롱 조직문화 진단 수요 파악 및 운영 - 기관 내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등 상담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 기관 내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등 상담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 기관 내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등 상담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 기관 내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등 상담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 지원에 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중 감	
	예산(a)	집행(a')		중감액(c=b-a)	중감률(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846	14,846	14,233	△613	△4.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희롱방지 조직문화 진단 건수(건)	-	-	100	105	'22년 신규지표 (사업결과보 고서)

□ 기대효과

-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초기상담 등 피해자 중심의 신고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종합 지원
- 공공기관 등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역량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박용준 사무관 최형윤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164 02)2100-6168
------	------------------	-----	--------------------	------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과제개요

- 젠더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범부처 통합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이행점검의 주기적 환류를 통한 정책 이행력 제고
- 5년 단위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의 체계적인 환류체계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심의·확정('20.2월)
- 2020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20.5월)
-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21.3월)
- 2020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21.4~10월)
- 2022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22.3)
-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22.4~10월)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및 방법

- 2021년 시행계획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시행계획 수립
- 2022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분석·평가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023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안) 마련('23.2월)
2/4분기	-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지침 안내('23.4월)
3/4분기	-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23.6~9월)
4/4분기	-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 공유 및 2023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23.10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2,341	2,175	784	△1,557	△66.5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분석·평가 실시	—	분석·평가 지침 마련	분석·평가 지침 개정	분석·평가 실시	분석·평가 실시 (공문)

□ 기대효과

- 부처별 여성폭력방지정책 이행력 제고를 통해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의 여성폭력 방지체계 구축 강화,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매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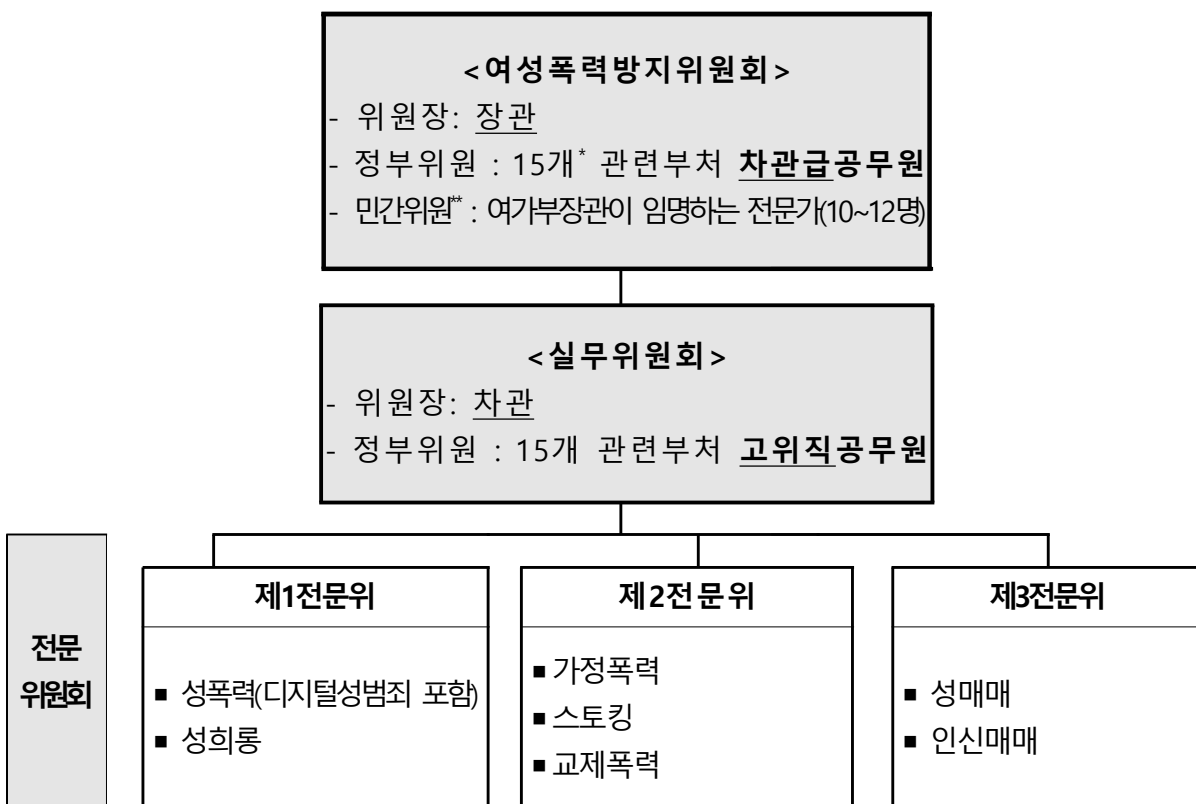
□ 기타 사항

- 관련 부처·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분석·평가 결과 적극 반영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306
			김민형 주무관		02)2100-6307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정책 논의
- (회의체 구성) 범정부 협의체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 : 장관) 및 실무위원회(위원장 : 차관/3개 전문위)를 운영
- (정부위원) 15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당연직)
 -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경찰청
- (민간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운영('20.2월~)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실적

차수	구분	일시	검토내용
제1차	실무위원회	2020.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계획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0.2.20.	
제2차	실무위원회	2020.5.12. ~5.15.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부처별 현황 및 이행계획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0.5.21.	
제3차	실무위원회	2020.11.2. ~11.3.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안) ○ 2020년 지자체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결과 ○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하반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0.11.6.	
제4차	실무위원회	2021.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1년 시행계획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 부처별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 ○ 여성폭력 통계 구축방안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1.3.29. ~3.30. (서면)	
제5차	실무위원회	2021.10.15. ~10.18.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1.10.26.	
제6차	실무위원회	2022.3.22.~ 3.24.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 여성폭력 통계 구축방안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2.3.30	
제7차	실무위원회	2022.10.14.~ 10.19.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 여성폭력방지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2.10.24.~ 10.26. (서면)	
제8차	실무위원회	2022.12.19.~ 12.21.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여성폭력통계 보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2.12.22.~ 12.26. (서면)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분석평가, 주요 정책 이행점검 등 여성폭력방지정책 이행력 제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상반기	- 제9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하반기	-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성과지표명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성과목표치 산식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개최 횟수	6회	4회	6회*	4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공문

* '22년 여성폭력통계 공표(3년 주기 의무)로 위원회 추가 개최(2회)

☐ 기대효과

-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부처 간 연계·협력 및 정부위원, 민간위원의 심의·조정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과성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 심의·조정 활성화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정유진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82
			우희정 주무관		02)2100-6383

□ 과제개요

-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각종서비스 연계,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으로 수행

□ 그간의 추진실적

- 특수법인 설립 법적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정·공포('18.12.18)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전환('19.12.19)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 지원

-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회의 개최
 - 지원역량 상향 표준화를 위한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통계 및 실적관리
 - 여성긴급전화1366중앙센터 운영
- 여성폭력 정책 연구 및 홍보
 - 여성폭력방지 및 효과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연구 기획
 - 성매매추방주간, 여성폭력추방주간 운영
- 여성폭력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시스템 운영
 - 성희롱방지조직진단관리시스템 운영
 -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 성매매방지상담원 양성교육운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종사자 보수교육 운영
- 종사자 대리외상 해소 및 소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 디지털 성범죄 대응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성폭력 등 발생기관 재발방지
 -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관의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컨설팅 파견 및 사건처리지원단 운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연구 등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
 - 일본군 '위안부' 관련자료 조사 및 교육홍보 등 실시
- 일본군 '위안부' 문제관련 대외협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기념사업 실시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인신매매방지 중앙권익보호기관 운영

-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지원
 - 인신매매방지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자 확인서 발급
 - 지역인신매매등권익보호기관 실적 취합 및 통계 관리
- 인신매매 예방·방지 정책 개발 및 관련 교육
 - 인신매매방지 실무 분야 협력체계 구축 위한 소통 자리 마련 등
 - 전문인력 종사자 교육 실시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중앙 총괄기능 수행

- 여성폭력피해 통합지원 사업 시범운영(2개소)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사례별 통합솔루션 지원단 구성·운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 전국 종사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종사자 대상 통합 사례분석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맞춤형 콘텐츠 개발
 - 미성년 피해 증가 및 범죄 피해 양상 다양화 대응 위해 피해지원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846	14,846	14,233	△613	△4.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 지원사업 효과성(점수)	84.1	87.35	89.2	89.47(점)	○ '22년 실적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기대효과

-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담기구 운영으로 여성폭력방지 기관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 등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계속)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정명호 사무관 김유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89 02)2100-6433
------	----------------	-----	--------------------	------	------------------------------

4-3-3-③

여성폭력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권익정책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지역사회 단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시설과 지자체, 경찰 간 연계 지원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주요내용) 여성폭력 사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지자체, 경찰 대상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운영 방안 및 정책·제도 개선 방안 도출

□ 그간의 추진실적

연도	주요 실적
'20년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통합연대회의(15회) - 정책관계자 네트워크 확대사업(수사분야협업워크숍 17회, 장애분야이슈간담회 4회)
'21년	- 이주여성 폭력피해 대응강화 협업워크숍(7회) - 폭력피해 장애여성 지원강화 협업워크숍(3회)
'22년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통합연대회의(8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이슈간담회(4회) - 여성폭력피해 정신적 장애인 지원을 위한 이슈간담회(4회) - 여성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자원확장 협력간담회(4회) -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및 유관기관 간담회(12회)

※ (통합연대회의) '21년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 '22년부터 연 8개 지역 순차적 실시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통합연대회의 8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슈간담회 4회
- 여성폭력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참여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연 5회)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경찰, 지자체, 피해자 지원시설 간 회의, 간담회 개최
2/4분기	- 경찰, 지자체, 피해자 지원시설 간 회의, 간담회 개최
3/4분기	- 경찰, 지자체, 피해자 지원시설 간 회의, 간담회 개최
4/4분기	- 경찰, 지자체, 피해자 지원시설 간 회의, 간담회 개최

○ 예산 현황 : 기포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예산에 포함되어 집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846	14,846	14,233	△ 613	△ 4.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워크숍, 회의)	36회	10회	28회	17회	네트워크 워크숍, 회의 개최

※ '20년 대비 '21년 실적 감소 : '21년 코로나19로 인한 통합연대회의 미실시

※ '22년 실적 대비 '23년 목표치 감소 사유

- 예산 감액(40백만원→25백만원)에 따라 이슈간담회 축소(12회→4회) 운영
- '22년 '초기대응력 강화 간담회'의 경우 현장단체 요청에 따라 목표(5회) 대비 초과 달성(12회)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초기 대응력 강화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협업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정명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89
------	----------------	-----	---------	------	--------------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과제개요

- 효과적인 여성폭력방지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등 여성폭력통계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산출하여 공표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통계 구축 및 운영 위탁 추진을 통한 '여성폭력 통계 지표 체계(안)* 마련('20년)
 - *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관련하여 수집·산출이 필요한 여성폭력 통계 범위·목록 분류
- 여성폭력통계 지표 체계(안)에 따른 통계 수집,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 여성폭력유형별(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매매, 아내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등) 범죄 통계 산출 가능하도록 범죄통계원표 개정 요청
- 여성폭력통계 공표('22.12)
 - * (구성) 4개 영역(▲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범죄자 처분), 152개 지표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폭력통계 수집,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추진(반기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지표명 : 여성폭력통계 회의 추진(신규)	-	-	-	2회	반기별 개최
○ 지표명 : 여성폭력통계 보고서 마련	통계 목록·체 계 (안) 마련	여성폭 력통계 운용지 침 마련	여성폭 력통계 보고서 마련		여성폭력통계 보고서

☐ 기대효과

- 여성폭력통계 기반 여성폭력방지정책 설계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위탁(계속)
- 여성폭력통계 공표('25년)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306
			김민형 주무관		02)2100-6307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19. 12. 25.시행)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폭력 통계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22. 3. 여성폭력 통계 관련 메타정보 제출(여성가족부)
- '22. 5. 2022년 여성폭력 통계 공표를 위한 자문단 회의 참석(여성가족부)
- '22. 5. 2022년 여성폭력 통계 공표를 위한 자료 제출(여성가족부)
- '22. 10. 2022년 여성폭력 통계 공표를 위한 보고서 검토 (여성가족부)

□ 2023년도 시행계획

- 여성폭력 통계 구축(연중)
 - 신상정보등록시스템을 활용한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 등의 유형별 현황
 - 성폭력,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현황
 - 성폭력,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진술조력인 지원 현황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폭력유형별, 성별, 시도별, 의료비, 자립지원 등 지원 현황
- 예산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2년)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 여성폭력 통계항목 개편(회)	1회	1회	-연중 통계자료 제출

□ 기대효과

- 여성폭력 관련 통계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법률 및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담당자	서안나 계장	전화번호	02)2110-3998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 계획 수립

□ 그간의 추진실적

- '19. 7.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개최
 - 전문연구검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 연구진행하여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 및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 등의 주제로 연구결과 발표
- '20. 5. 디지털·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사범 통계 구축
 - 기존 검찰통계사무규정 내 성폭력사범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디지털·성착취물 관련 성범죄사범을 단일사범으로 분류하고 통신매체이용 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반포,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 제작·배포 등) 7개 대표죄명으로 구성하여 통계 구축
- '21.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세부 죄명 신설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 대응하여 '16세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16세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통계 죄명 신설
- '21. 10. 스토킹사범 통계 구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스토킹사범 통계 구축
- '22. 1.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통계 구축
 - 검찰통계사무규정 내 '성폭력처벌법위반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죄명을 세분화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 제14조 제4항에 대응한 통계 구축

☐ 2023년도 시행계획

○ 여성폭력 통계 구축(연중)

-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여성폭력 통계 구축 노력

○ 유관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 협업시스템 강화(연중)

- 여성폭력 통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여성 폭력 통계 개선 방안 공동 연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여성폭력통계 신설(건)	1	2	1	1	검찰통계시스템

☐ 기대효과

- 여성폭력 통계 구축을 통해 여성폭력 실태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현재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진행으로 별도의 검찰통계시스템 개선 어려움
- 통계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타기관에 일부 통계 제공 어려움

담당부서	대검찰청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 경찰청 여성관련 통계 현황을 파악, 「여성폭력방지법」상 여성폭력통계 구축을 위한 부처 간 통계지표 등을 공유하여 여성안전 정책 추진에 기여

□ 그간의 추진실적

-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세분화 된 여성폭력 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CSS) 고도화사업에 참여
 - △ 원표 개선을 통한 가·피해자간 관계 세분화 △ 살인에 선행하는 여성 폭력 산출체계 마련 △ 성폭력범죄 범주개선* 및 산출체계 마련 등

* 매년 발간되는 ‘경찰청 범죄통계’상 범죄분류가 아닌 별도의 분류 체계

- 여성폭력통계 공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2년 여성폭력통계로 공표·활용될 자료 신규 작성·제공

□ 2023년도 시행계획

- (검수·보완) 범죄통계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완료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새롭게 마련된 통계체계에 대한 오류·미비점 등 검수 및 보완작업 병행
- (협업 강화)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통계 공표’에 적극적으로 협업
- 예산 현황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 지표 : 해당없음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모상진 경감	전화번호	02-3150-0828
------	----------------	-----	--------	------	--------------

□ 과제개요

- 성폭력 등 여성 관련 범죄통계의 신뢰도 제고
 - 여성대상 범죄현황 파악, 예방 등 정책 수립 기초자료인 범죄통계의 개선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의 공동 대응 필요
 - 국내 범죄통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효율적이고 국제 비교가능한 범죄통계 구축을 위한 국제범죄분류 체계 기준의 한국범죄분류체계 개발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 관련 범죄통계 분류체계 개발
 -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의 국제범죄분류(이하 ICCS^{*}) 채택 및 이행 권고에 따른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개발 추진(1단계, '17~'20년)
 -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 성범죄(ICCS 대분류 03)를 포함한 한국범죄분류 개발연구('20)
 - 국제범죄분류체계 및 국내 죄명코드 연계율 제고 등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단계(2단계, '21-'23) 2차년도 분류체계(안) 고도화 연구('22)
- 여성 관련 범죄통계 작성기관 협력체계 구축
 - 분류체계 개선, 국제범죄분류와 한국범죄분류체계 간 여성 관련 범죄 연계 타당성 검토, 자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내외 협업 실시

※ 범죄통계분류 국내외 협업 실적

- 범죄분류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6월), 국제범죄분류 워크숍 (5월, 멕시코)참여로 범죄 통계협력 강화 및 국제범죄분류 이행 사례 공유
- 부처협업 TF운영 계획 수립(2월), 1차 협업회의(5월, 서울)로 분류 고도화 추진
- ※ 범죄분류 개발 절차 : 개발연구('17년~'20년) → 일반분류제정('21년~'23년)
- 제6차 범죄통계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11월), 통계청-UNODC 2단계 협력사업 MOU 체결 및 운영위원회(12월) 등을 통한 범죄통계 국제협력 강화

□ 2023년도 시행계획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일반분류 제정·고시('23.12.)

- 한국범죄분류체계 최종(안) 마련 및 국가통계위 상정을 통한 심의 의결
- 국제범죄분류와 국내 범죄명 연계 자동화 연구를 통한 분류체계 포괄성, 안정성 확보 및 범죄통계 품질 제고(국내 여성폭력 통계 확충 및 국제비교성 제고)

○ 국내외 관련 기관·기구 협업 강화 및 이용자 인식 제고

- 한국범죄분류체계 합의점 도출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국제기구 (UNODC) 국제범죄분류 개선 제안(하반기)
- 분류항목 해설서 제공 및 교육·홍보 실시
- 한국범죄분류 활용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 청취를 위한 '전문 분야별 자문분과회의' 구성 운영(4. 9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안) 마련
2/4분기	한국범죄분류체계 연구 용역 실시(~10월) 분류 활용 활성화 1차 자문분과위 개최
3/4분기	국제범죄분류 개선 제안(→ UNODC) 분류 활용활성화 2차 자문분과위 개최
4/4분기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관련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고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 국제표준분류 기반의 한국형 범죄분류개발로 일관성 있는 국내 여성폭력 범죄통계 제공 및 국제비교성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한국범죄분류체계의 표준분류화 추진

- 분류의 안정성, 타당성 검증 및 분류 이용자(범죄통계 작성기관) 인식 제고를 통한 자발적 이용 유도
- 표준분류에 기반한 여성 폭력 통계 작성 등 국가 승인 범죄통계 작성 안착
 - * 한국범죄분류(일반분류)의 표준분류 고시 예정('25년)

담당부서	통계청	담당자	최종희 사무관	전화번호	042) 481-2180
------	-----	-----	---------	------	---------------

4-3-4-②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월 시행)」 상 여성폭력의 지역별·연령별·직업별 분포, 여성폭력의 발생원인·배경, 여성폭력의 유형·특성·빈도 등에 대해 조사*

*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문항 개발, 표본설계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사전연구 추진('20년)
- 개별법에서 누락된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 최초 실시('21년)
 - * 조사표 확정 및 표본설계(8월), 통계작성 승인(9월, 통계청), 조사 실시(9~10월, 만 19세 이상 여성, 표본 7천명)
-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 공표('22.8)

□ 2023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폭력실태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여성폭력방지정책전략센터 과제로 수행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포함되어 집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2,341	2,174	784	△1,557	△66.5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3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사전연구 실시	본조사 실시	결과 공표		결과보고서 등
○ 여성폭력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 시(신규)	-	-	-	연구용역 실시	결과보고서 등

□ 기대효과

-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로 실태조사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실태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및 실행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306
			김민형 주무관		02)2100-6307